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대한체육회 -

2018. 10.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 감사결과	6
1. 총평	6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13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1) 커피숍 시설 임대차 업무 부당 처리(문책·통보)	14
(2) 통합공시 및 고가 기념품 제공 부적정(시정·주의)	22
(3) 체육정보시스템 정보 등록·관리 부적정(주의)	26
(4)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관리 부실(주의)	32
(5)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주의)	34
(6)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 부적정(주의)	40
(7) 공사 등 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45
(8)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주의)	54
(9)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58
(10) 2018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78
(11)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88
(1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집행 등 부적정(주의)	94
(13)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107
(14) 이사회 자문기구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주의·통보)	112
(15)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주의·통보)	128
(16) 폭력 행위 등 관련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통보)	134
(17) 스케이트 대여·연마 시설 임대차 계약 부적정(통보)	139
(18) 복리후생비 등 중복 지원 부적정(통보)	144
(19)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관리 미흡(통보)	155
(20) 국가대표 선수단 본부임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통보)	167
(21) 이사회 구성 부적정(통보)	173
(22) 임시기구 계속 운영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통보)	182
(23) 명예퇴직수당 환수·정산 규정 미비(통보)	190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의 목적은 대한체육회의 기관운영,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예산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는데 두었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사항과 2015년 이후 대한체육회가 수행한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임시기구 설치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운영 부적정, 비리 체육인 구제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확인하고, 조직·인력 관리 실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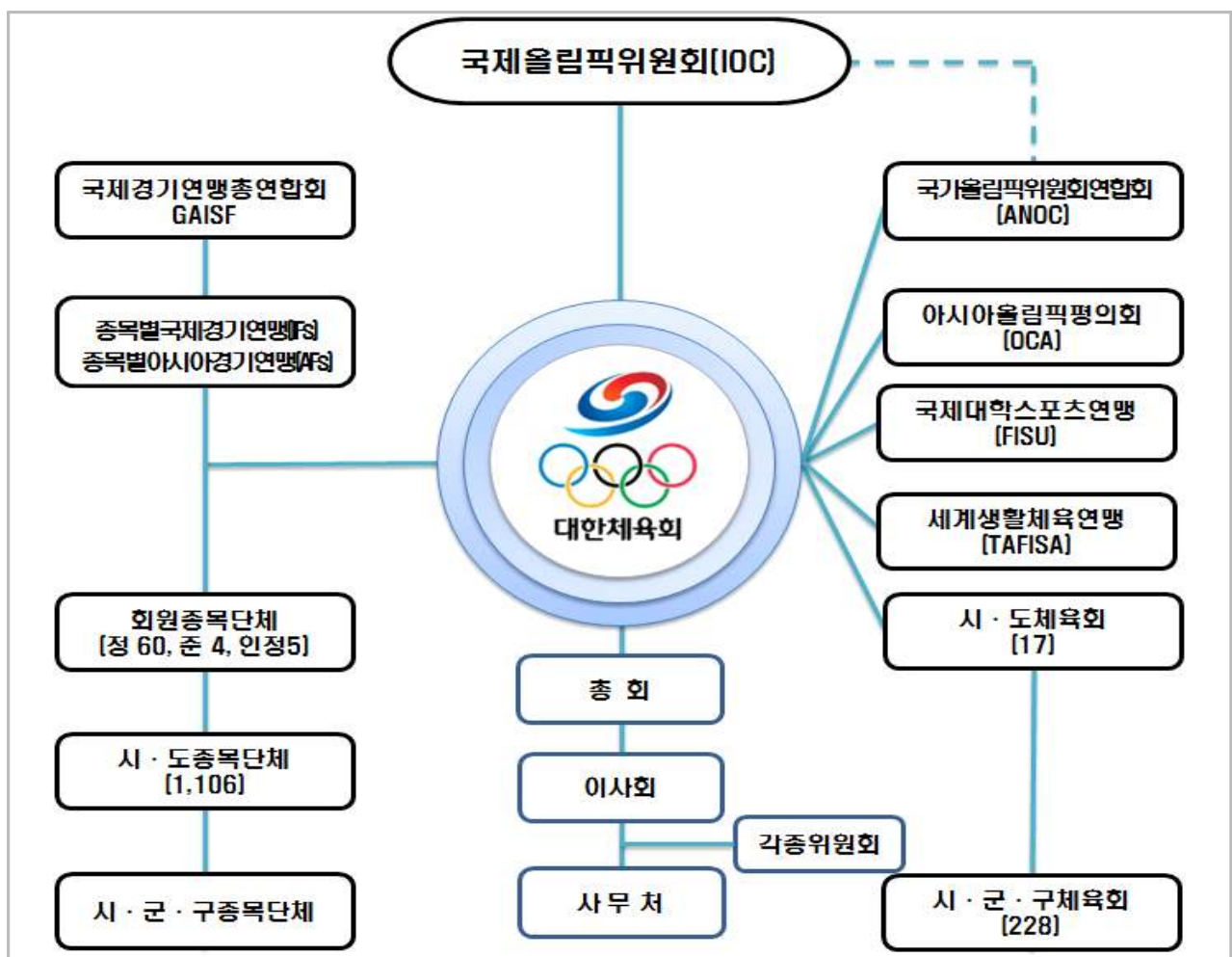
4. 감사기간 및 인원

감사기간은 2018. 5. 23.부터 6. 15.까지 16일 간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인원은 감사담당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Ⅱ. 대한체육회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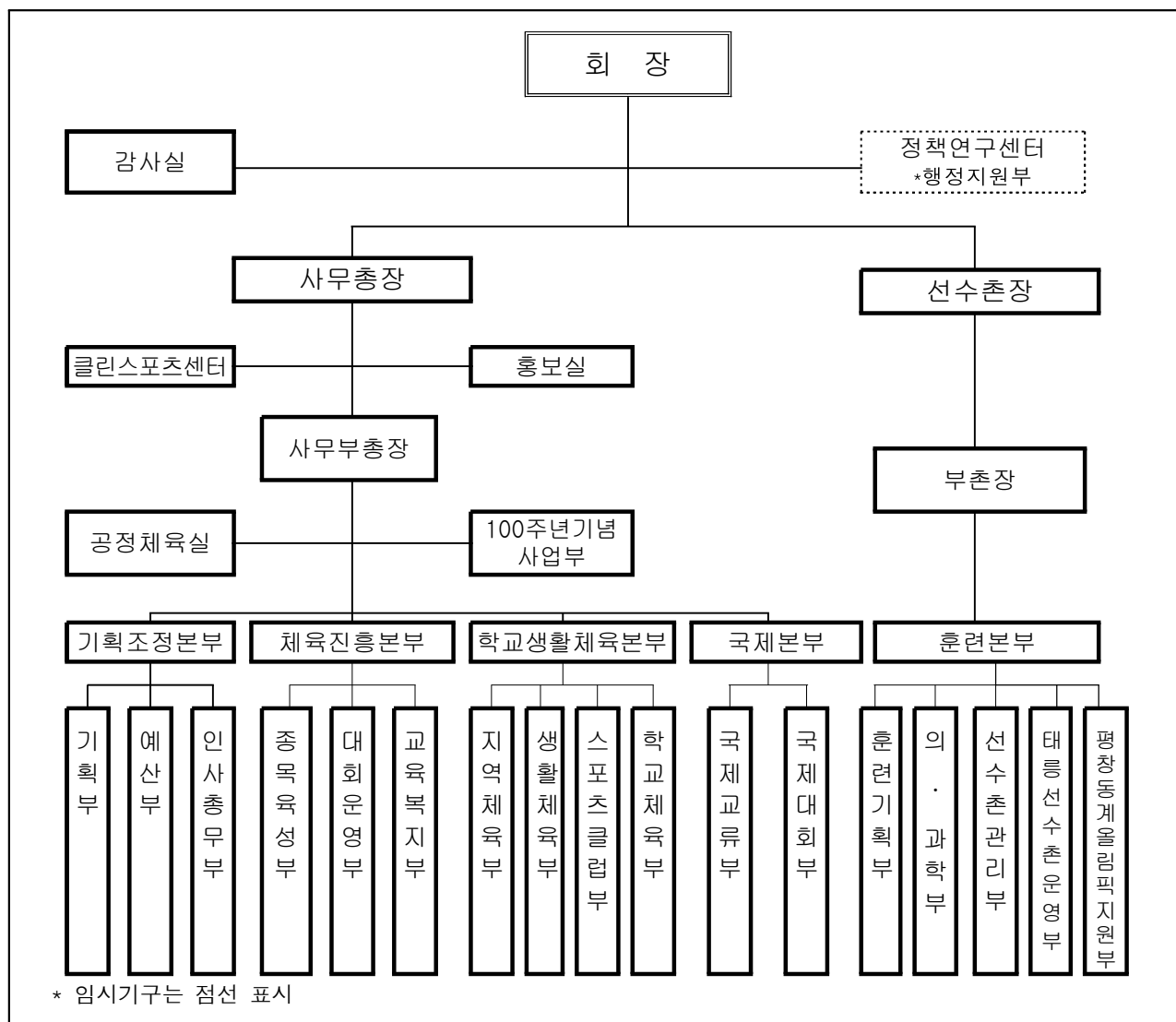
1. 조직 및 인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2016. 3월 대한체육회(KOC)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체육회(KSOC)로 발족하였으며, 태릉 선수촌(일부 시설), 태백 선수촌, 진천 국가대표선수촌(2017. 9월 개촌)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대외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한 국내 유일 단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69개 회원종목단체(정 60, 준 4, 인정 5)와 17개 시·도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조직은 회장(비상임), 사무총장(상임), 감사를 포함하여 5본부, 3실, 19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현원 197명(정원 193명)으로 상임임원·관리직 2명, 일반직 151명, 별정직·전문기술직 26명, 실무직·운영직 18명이다.

□ 조직도(5본부, 3실, 19부, 2센터)



□ 인원

(정·현원: 2018. 2. 27. 현재)

구분	상임임원	관리직	일반직	별정직	전문기술직	실무직	운영직	계
정원	1	2	149	6	27	5	3	193
현원	1	1	151	4	22	15	3	197

* 별도인원(15명):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 정·현원 11명, 육아휴직자 현원 4명

2. 예산 현황

대한체육회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3,556억 원으로 이중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은 3,399억 원이고, 나머지 자체예산 157억 원이다. 2018년도 자체수입 내역 중 JMPA분배금¹⁾은 93억 원으로 그 비중(59.2%)이 높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내역	2018년	2017년 결산	사업내용	2018년	2017년 결산	
합 계		355,573	380,503		355,573	342,957	
국민체육진흥기금	계	339,853	354,174	계	339,853	328,098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74,079	39,679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74,079	30,495	
	◦ 생활체육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6,326	5,392	◦ 생활체육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6,326	4,880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2,983	11,294	◦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2,983	10,826	
	◦ 체육인교육센터 설립운영	300	-	◦ 체육인교육센터 설립운영	300	-	
	◦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	26,972	19,972	◦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	26,972	19,894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16,425	16,540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16,425	16,535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1,066	36,662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1,066	34,366	
	◦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10,609	17,252	◦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10,609	16,318	
	◦ 국가대표종합훈련장건립(2단계)	-	80,360	◦ 국가대표종합훈련장건립(2단계)	-	79,058	
	◦ 우수선수 양성지원	84,725	90,767	◦ 우수선수 양성지원	84,725	82,789	
	◦ 주최단체 지원	19,700	4,518	◦ 주최단체 지원	19,700	4,119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7,040	7,040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7,040	6,998	
	◦ 체육인복지사업		622	◦ 체육인복지사업		588	
	◦ 국제체육교류 지원	9,109	2,602	◦ 국제체육교류 지원	9,109	2,321	
	◦ 국제대회 개최지원	4,273	3,573	◦ 국제대회 개최지원	4,273	3,555	
	◦ 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지원	3,350	-	◦ 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지원	3,350	-	
	◦ 개도국스포츠 발전 지원	2,422	2,531	◦ 개도국스포츠 발전 지원	2,422	2,478	
	◦ 국제대회 참가		6,256	◦ 국제대회 참가		6,210	
	◦ 이월금, 이자수입	20,474	9,114	◦ 이월금	20,474	6,668	
기타 보조금	◦ 기타보조금	-	181	◦ 기타보조금	-	106	
자 체 예 산	계	15,720	26,148		15,720	14,753	
	◦ 사무처수입 (jmpa분배금, 잡수입 등)	12,288	21,939	◦ 사무처 운영	10,215	9,348	
	◦ 선수촌/체육회관 수입	3,372	3,688	◦ koc사업	5,445	5,349	
	◦ 기부금	60	522	◦ 기부금	60	56	

1) JMPA(Joint marketing program agreement) 협약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분배받은 총 금액은 401억 원(2013년 32.4억 원, 2014년 32.4억 원, 2015년 20억 원, 2016년 15억 원, 2016년 209억 원, 2018년 93억 원)이며 2018년 하반기에 90억 원을 추가로 분배받을 예정임

3. 주요 업무

-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전문체육(우수선수/지도자의 육성 등) 및 생활체육 진흥(스포츠클럽 지원 등)
-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및 국제 교류
-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
- 체육인 복지 향상 및 은퇴선수 지원

Ⅲ.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결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임시기구 설치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비리 체육인 구제 등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위법·부당한 사항(처분요구·통보 33건)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천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33	-	18명	1 (2명)	1 (-)	15 (16명)	-	-	16	16	-	-	-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인사관리 분야에서 ▲ 체육회는 “기구개편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 협의 전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회신 문서(2017. 1. 23.)에 근거하여 당초 정식기구로 설치하려 했던 부총장, 정책연구센터 등을 2017. 1. 25.부터 임시기구로 운영하였으나, 문체부가 2017. 11. 20. 정책연구센터를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문체부의 폐지 요구 등 명확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직제규정에 근거가 없는 정책연구센터를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정규직제에 반영되어 있는 직위를 지정·운영해야 하고, 위의 임시기구인 부총장과 정책연구센터가 직제협의과정에서 정식기구의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도 임시기구의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문체부에 직제

규정 개정 협의 요청(2017. 1. 17.)을 하기도 전인 2017. 1. 16. 3개 개방형 직위(사무차장, 부총장, 정책연구센터장) 모집 공고를 하여 2017. 1. 25.부터 임시기구의 장인 부총장과 정책연구센터장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였고, 이중 정책연구센터장은 2017. 11. 20. 문체부로부터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정책연구센터장 직위를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26조 제4항에 따라 올림픽종목의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현 이사회(2017. 2. 10.구성) 이사 50명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는 9명으로 재적이사의 18%에 불과하여 그 구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또한 회원종목단체 대표자가 현직 회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회원종목단체 대표자의 인정범위 및 대표성을 인정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회원종목단체로부터 대표를 추천받는 등의 대표성 인정 절차를 마련하여 거치지 않은 채 회원종목단체의 전직 임원, 회원종목단체와 별개인 시도체육회와 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전·현직 임원, 실업팀 감독 등을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에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15개)는 총 87회가 개최(2016~2017년)되었으나 18회의 회의 결과만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2017년 신설된 6개 위원회의 경우 24회를 개최한 후 의무위원회 회의 결과 1회만 이사회에 보고되는 등 그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학교체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구성기준(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20% 이내)과 달리 동일대학 출신자를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시정하고자 규정을 개정(2017. 4. 3.)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다.

둘째, 체육행정 분야에서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문체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시행(2016. 3월) 이후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제2기 위원 14명 위촉 시(2017. 2. 7.) 당시 규정이 아닌 개정안(2017. 2. 10.개정)을 근거로 위촉하여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2명을 위촉하거나, 법률가 또는 스포츠분야 교수가 2/3(10명)이상 되도록 구성해야 하나 7명만 구성하고, 제2기 위원 위촉의 하자를 동 규정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 조치를 두어 해결하는 등 위원 위촉업무가 부적정하였다. 또한 ▲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지침에서 금품 수수 및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감경의 한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스포츠공정위원회(체육회)가 배임수재로 제명 처분을 받은 3명을 견책으로 과도하게 감경(4단계)하거나, 2개 회원종목단체가 구제기준을 위반하여 구제한 결과(5건)²⁾를 보고 받고도 구제기준 준수 여부 및 구제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으로 위 지침 운영의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서 폭력·성폭력은 품위 훼손의 경우와 구분하여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폭력·성폭력의 피해자 구분(선수 또는 일반인 등)과 관련한 별도의 차별화된 기준이 없는데도, 대한○○협회가 체육인(○○ 선수)의 일반인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 폭력 징계기준이 아닌 품위훼손의 징계기준을 임의 적용하여 낮은 단계의 견책 처분을 하였는데도 체육회는 이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7년 국정

2) 지침에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을 구제신청자에게 두고 있으며, 2014.11.6.~2016.12.31.사이에 의결되어 징계를 받은 자로 구제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핸드볼협회는 2013. 9. 징계가 확정된 사안으로 지침 상 시간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용(감경 1명) 및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구제신청자 5명 전원이 구제지침 상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과 무관한 사안(개인적인 비위)임에도 5명중 4명을 인용(사면복권 3, 감경 1)

감사에서 제기된 대한▽▽연맹 임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 부과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비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2016. 3월)되기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안(2013~2015년)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체육회는 2017. 3월 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회원종목단체에 통보 하면서 단체별 국가대표선발규정 제정 및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개정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7개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개정하면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내용이 상위 규정인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³⁾가 확인되는 등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국제대회 파견 본부임원은 국가를 대표하고 선수의 관리·책임, 대회조직위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07년 체육회 자체감사에서 선수단·본부임원 구성은 중요한 사안으로 이사회 상정 등 체육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성 방안과 절차의 개선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본부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 구체적인 선임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본부임원 명단 및 그 규모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내부결재만으로 확정하는 등 그 구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 체육회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인적정보와 징계내역(자격정지 이상)의 등록·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해야 하는데도 회원종목단체 등의 징계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 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하여 대부분 지연되거나, 회원종목단체의

3)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할 국가대표 코치를 감독이 지명,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가 5년 동안 제한되나 2년으로 규정 등

경우 51%, 시·도체육회의 경우 72.5%의 임원정보가 미등록되었는데도 체육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인적정보와 징계내역의 등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 회원종목단체 등이 체육회로부터 이송받은 (성)폭력 민원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민원 취하가 없는데도 임의로 종결처리 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였다.

셋째, 공사·정보화사업의 계약·관리 분야에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는 종합공사로 종합건설면허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데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주)▽▽▽)와 수의계약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통합 발주하였으며, 하도급이 실제 발생했는데도 사업담당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추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려 하였고, 사업비가 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도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문체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스포츠 가치 센터⁴⁾와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부지 선정에 관하여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법령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⁵⁾ 부지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문체부의 중단 요청으로 행정의 신뢰성 훼손을 야기하였으며, 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문체부와 협의 없이 기본계획(설계)의 과업

4)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주시 일원에 공사비 451억 원으로 추진(2015~2020년)

5) 건립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 것으로 공고(2018. 4. 17.) → 감사의견 제시(공유재산의 양도와 건축물 축조가 불가) → 2018. 5. 17.에서야 지자체에 동 시설 기부 채납 후 30년간 무상 사용 조건으로 건립 부지 확보 방안 제시(동 방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지자체 협의 등으로 이행 여부 불투명)

까지 포함하여 발주하거나, 이용자 수요 측정에서 제외시켜야 할 교육수요를 포함하는 등 수요 예측이 부적정하였고, 용역착수, 중간·최종보고 회의에 문체부(체육정책과)의 참여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했음에도 진행 경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15~20백만 원 이하 건설업 전문공사(56건, 1,154백만 원)를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사례도 있었다.

▲ 한편, 임대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 대상이나 노사 합의를 이유로 ‘스케이트 대여 및 연마 시설(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 내)’을 대한체육회 공제회와 수의계약(2010.10.9. 78백만원 최초 계약, 3회 갱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전대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위 연마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는가 하면, 커피숍의 경우 노원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 시 영업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공제회의 요구라는 이유로 실무자가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금지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임대료의 원가 계산액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당초 1,372,495원 → 438,252원)하여 공제회와 수의 계약한 후 공제회는 이를 제3자에게 전대(월 임대료 2,200천 원)하여 부당한 차익(월 1,760천 원)을 얻고 있는 등 부대시설의 임대차 계약·관리가 부적정하였다.

또한 ▲ 정보화 제안요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기술적인 내용 등을 자문받는 과정에서 제안요청 내용이 입찰공고 전에 유출(3건)되어 기술자문을 한 업체들이 제안서 작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과업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준공처리하여 대금을 지급(2건)하는 등 정보화 용역 사업 관리가 부실하였다.

넷째, 복지업무·복무관리 분야에서 ▲ 연봉제 도입 시 기본연봉에 산입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체육회는 2011년 연봉제 도입 시 복리후생비(60만 원)를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폐지하고도 2013년 동일한 목적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신설하여 복리후생비 644백만 원(2013~2017년)을 추가 지급하고, 중식비가 2011년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는데도 직원 복리후생을 이유로 2012년부터 진천선수촌 직원의 급식 비용(조식, 중식, 석식)으로 807백만 원을 지원하거나, 정년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14명, 20백만 원) 하는 등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또한 ▲ 직원이 외부강의, 본관 회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출장, 외출 등 적정한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근무시간 내 직원의 대외활동(출장, 외부강의) 누계시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등 직원의 복무관리가 부실하였다. 그리고 ▲ 공용차량을 진천선수촌 직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12명, 80건)하거나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아닌 진천선수촌 부총장과 선수촌훈련본부장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하거나,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가 부실하였고, ▲ 명예퇴직한 직원이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인사규정」에 명예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할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및 정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단위: 천 원)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고
1	대한체육회	문책·통보	커피숍 시설 임대차 업무 부당 처리	2명	
2	대한체육회	시정·주의	통합공시 및 고가 기념품 제공 부적정		
3	대한체육회	주의	체육정보시스템 정보 등록·관리 부적정		
4	대한체육회	주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관리 부실		
5	대한체육회	주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6	대한체육회	주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 부적정		
7	대한체육회	주의	공사 등 계약 체결 부적정		
8	대한체육회	주의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9	대한체육회	주의·통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3명	
10	대한체육회	주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	2명	
11	대한체육회	주의·통보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2	대한체육회	주의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집행 등 부적정	7명	
13	대한체육회	주의·통보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14	대한체육회	주의·통보	이사회 자문기구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5	대한체육회	주의·통보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4명	
16	대한체육회	통보	폭력 행위 등 관련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		
17	대한체육회	통보	스케이트 대여·연마 시설 임대차 계약 부적정		
18	대한체육회	통보	복리후생비 등 중복 지원 부적정		
19	대한체육회	통보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관리 미흡		
20	대한체육회	통보	국가대표 선수단 본부임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21	대한체육회	통보	이사회 구성 부적정		
22	대한체육회	통보	임시기구 계속 운영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23	대한체육회	통보	명예퇴직수당 환수정산 규정 미비		
합 계		33건		문책 2명 주의 16명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책요구 및 통보

제 목 커피숍 시설 임대차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문 책 대 상 자 ① 대한체육회 ◇◇◇ ▽▽▽부 부장 A○○
② 대한체육회 ◇◇◇ ○○○부 과장 B○○

문 책 사 유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태릉선수촌¹⁾ 국제스케이트장 내 부대시설²⁾ 중 커피숍 시설을 [표 1]과 같이 대한체육회공제회³⁾(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수의계약으로 임대(임대차 계약일 : 2016. 11. 10.)하고 있다.

[표 1] 커피숍 시설 임대 현황

(단위: 원)

구분	임차인	면적(㎡)	임대 기간	월 임대료	비고
커피숍	대한체육회 공제회	33.06	2016.11.01.~2019.10.31.	440,000	수의계약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태릉선수촌의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는 2015. 4. 22. 커피숍 시설을 공제회에 임대하되 노원구청의 영업허가 조건⁴⁾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외

-
- 1) 태릉선수촌은 국가대표훈련시설로서 국제스케이트장 등 12개 훈련시설, 챔피언하우스 등 5개 부속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2) 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내 스케이트 대여·연마,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커피숍 등 4개의 부대시설을 대한체육회공제회 및 외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3) 대한체육회공제회 회원은 체육회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4) 노원구청 허가조건 : 스케이트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승인하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 단 위탁운영 또는 외주업체 입점으로 적발 시 영업취소

주업체 입점 적발 시 영업허가가 취소되므로 공제회가 위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승인⁵⁾하였다.

따라서 체육회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공제회가 위 커피숍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두어야 했다.

한편 체육회는 그동안 국제스케이트장 임대 시 적용할 임대료를 산정할 때마다 원가조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입찰금액을 낙찰금액으로 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⁶⁾

따라서 체육회가 공제회에 위 커피숍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가조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체육회 ○○○부 B○○는 2016. 3.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제스케이트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부 A○○는 2013. 3. 2.부터 2018. 4. 27.까지 분임재무원⁷⁾으로서 국제스케이트장 관리 등 부서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커피숍 시설의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가. B○○의 경우

위 사람은 [표 2]와 같이 다른 부대시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⁸⁾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5) 사용승인 문서 : ○○∇부-1781(2015.4.22.)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육회도 국제스케이트장 부대시설 임대 시 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임

7) 체육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분임재무원은 동 법률의 '분임재무관' 역할을 수행함

8) 임차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것

[표 2] 부대시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구분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① 스케이트 대여·연마 ② 스넥 코너 ③ 스포츠용품점	제13조(“갑”의 계약해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을 수 있는 “을”의 손실에 대하여 “을”은 이의 보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1) “을”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이권화하려고 하거나 또는 업종 및 업태를 변경한 때<후략>
④ 커피숍	제11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차 또는 업종변경을 변경한 때 <삭제> ㉡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용도 외에 사용할 때 ㉢ “갑”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을 “을”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람은 2016. 11. 10. 공제회와 체결한 위 커피숍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안)을 검토·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문 변호사로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률 자문⁹⁾까지 받아 [표 3]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당초(안)’에 제11조 제1항의 약정을 마련하였다.

[표 3] 커피숍 시설 임대차계약서 검토 내역

당초(안)	변경(안)
제11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차 또는 업종변경을 변경한 때 ②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용도 외에 사용할 때 ③ “갑”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을 “을”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①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용도 외에 사용할 때 ② “갑”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을 “을”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이 부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자문함

그런데 위 사람은 공제회가 위 조항(제11조 제1항)의 삭제를 요청¹⁰⁾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 11. 1. A○○ 부장과 사무차장에게 보고하고 각각 결재¹¹⁾를 받았다.

그 결과 공제회가 위 임차시설 전부를 체육회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6. 10. 24. 위 사람은 위 커피숍 시설의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¹²⁾하여 월 임대료 원가계산액을 1,372,495원으로 산정한 결과를 제출받아 A○○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A○○ 부장은 위 사람에게 최소금액의 임대료만 산출하도록 원가조사기관에게 요구(구두)하라고 지시¹³⁾하였다.

그리고 원가조사기관인 (사)○○○는 위 사람의 임대료 원가 재산정 요구에 따라 [별표]와 같이 위 임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 산출한 후 최종 원가계산액을 438,252원으로 작성한 원가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초경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공제회와 위 커피숍 시설의 월간 임대료를 44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공제회는 다시 위 커피숍 시설을 제3자¹⁴⁾에게 월간 임대료 2,200,000원에 전대함으로써 특별한 노력이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월간 1,760,000원 이상의 고정적인 차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체육회는 정

10) 커피숍은 공제회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고정 수익 창출을 위하여 관리임대업체를 운영할 예정으로 본 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11) 결재문서 : ○○○관리부-3834(2016.11.01.)

12) 당초 원가계산 의뢰 대상 시설은 스케이트 대여·연마, 스포츠용품점, 스넥, 보관함 등 4개 시설이었으나, 보관함을 제외하고 대신 커피숍 시설을 추가함

13) 송상우는 문답서에서 '공제회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 공제회의 수익이 적어지게 되므로 노조의 협조부탁도 있어 직원 복지차원에서 재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14) 임차인(김○○), 임대기간(2017.5.1.~2019.4.30.), 임차용도(식품접객업), 임차 목적물(31.86㎡), 임대료(월 2,200천 원)

당한 원가계산액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17,717,405원¹⁵⁾ 상당의 임대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A○○의 경우

위 사람은 2016. 11. 1. B○○이 작성하여 결재 올린 ‘국제스케이트장 부대 시설 임대차 계약 체결’ 문건을 결재하면서 첨부되어 있던 노원구청의 허가조건을 열람하여 위 커피숍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영업 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가”항과 같이 B○○이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 커피숍 시설의 임대료를 최소금액으로 책정·계약해 달라는 공제회의 요청¹⁶⁾을 그대로 받아 들여 B○○에게 커피숍 시설의 임대료 원가산출액을 최소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가”항과 같이 (사)○○○가 재산정하여 제출한 원가산출액(438,252원)을 근거로 공제회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¹⁷⁾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체육회는 정당한 임대수입(최소 26,077,405원)¹⁸⁾보다 17,717,405원 상당이 적은 임대수입(8,360,000원)¹⁹⁾을 거두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노원구청의 허가조건과 다르게 커피숍

15) 임대수입 손해액 : 17,717,405원 = 932,495원(정당 원가산출액 1,372,495원 - 부당원가 산출액 440,000원) × 19개월 (2016년 11월~2018년 5월)

16) 2015. 10. 1. 공제회는 ‘커피숍 임대료 책정 시 최소 임대료로 책정·계약해 줄 것을 ○○○○○관리부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함[공제회-제7호, 국제스케이트장의 휴게음식점(카페) 참여에 관한 협조요청]

17) 계약체결 문서 : ○○○○○부-3834(2016.11.01.), 계약기간(2016.11.1.~2019.10.31.)

18) 정당한 임대수입 : 정당 원가산출액 1,372,495원 × 19개월 = 26,077,405원

19) 실제 임대수입 : 부당 원가산출액 440,000원 × 19개월 = 8,360,000원

시설을 공제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제회의 전담인력 부재 등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표 4]와 같이 전대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위 시설의 임대료는 당초 산출된 원가 계산액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제회의 임대료 차익은 스케이트화 구입 및 직원 복리향상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합목적성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표 4] 커피숍 시설 임대·전대 현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업종	임대/임차	임대인	임차인	기간	월 임대료
휴게음식점	임차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운영부)	대한체육회공제회	2016.11.01.~2019.10.31.	440,000
휴게음식점	임대 (전대)	대한체육회공제회	김수인	2016.11.01.~2017.04.30.	2,750,000
				2017.05.01.~2019.10.31.	3,300,000

자료: 대한체육회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노원구청의 허가조건, 체육회가 직접 부여한 승인조건을 스스로 위반하여 공제회로 하여금 부당한 임대료 차익을 얻도록 하였고 이에 관하여 내부 보고 등 아무런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서, 체육회 직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공익적 목적의 합목적성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특히 정당하게 산출·제출한 (사)○○○에게 임대료를 최소 금액으로 재산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문책요구 양정 이와 같이 커피숍 시설의 임대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과 A○○의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

으로 「인사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커피숍 시설의 임대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체육회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B○○과 A○○를 「인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하고(문책)
- ② 원가조사기관이 정당하게 산정·제출한 임대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 체육회가 입은 재산상 손실액에 대한 적절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국제스케이트장 부대시설 월간 임대료 원가산출액

(단위: 원)

시설명	임대면적	2016년 원가산출액		이전 원가산출액		비고
		당초	재산정 요구	2010년	2014년	
스케이트 대여·연마	110.70㎡	6,558,427		7,984,277	7,176,641	
스포츠용품점	48.91㎡	2,506,328		1,649,362	3,365,262	
스넥코너	38.50㎡	2,379,972		1,970,570	2,743,057	
사무실	39.67㎡				769,915	
커피숍	33.06㎡	1,372,495	438,252		1,567,951	'16년 부당 산출 요구
스포츠마사지숍	49.59㎡				996,145	
스포츠게임장	33.06㎡				448,93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시정·주의요구

제 목 통합공시 및 고가 기념품 제공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체육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1’(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4. 3. 1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가 통합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원과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모든 복리후생 내역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1) 공공기관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시스템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2013. 12. 11.)(이하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²⁾」(기획재정부) 등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은 금지한다고 규정³⁾되어 있으며, 체육회가 2014. 3. 13. 문체부에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알리오시스템에 그 재원과 상관없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한 내역은 빠짐없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통합공시 해야 하고,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임직원에게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복리후생항목 중 일부내역 통합공시 누락

그런데 감사기간 중 체육회의 2016년과 2017년의 복리후생항목 지출내역을 조사하여 체육회가 통합공시한 복리후생 항목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체육회는 [표 1]과 같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이용료(직원 영화관람료 지원), 임원실 방한화 및 방한조끼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도 이를 통합공시에서 누락하는 등 2016년 11,361,000원, 2017년 15,367,600원 등 총 26,728,600원의 복리후생항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통합공시하였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방만경영 가이드라인)’ 1. 기본 원칙

□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은 금지한다.

[표 1] 대한체육회 복리후생항목 지출내역 중 알리오시스템 통합공시 누락 명세

(단위: 원)

연도	재원	지출내역	지출액	통합공시 대상여부(체육회 의견)	통합공시 항목
2016	자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이용료 지원	1,211,000	통합공시 대상	문화여가지원
2016	자체	온누리상품권 구입(보훈대상 격려)	1,90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6	자체	2016년 정년 퇴직자 격려품(하반기)	8,25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소계			11,361,000		
2017	자체	2017 정년 퇴직자 격려품(상반기)	3,00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7 정년 퇴직자 격려품(하반기)	9,000,000		
2017	자체	2017년 독감예방 접종(구매)	2,97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7	자체	임원실 방한화 및 방한조끼 구입	397,6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소계			15,367,600		
합계			26,728,60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고가의 기념품 제공 부적정

그리고 체육회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육회는 2014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하면서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정년퇴직자에게 [표 2]와 같이 1인당 약 150만 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016년 8,250,000원, 2017년 12,000,000원 등 총 20,250,000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정년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

[표 2]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도	지급품목	지급대상 인원	지출액 합계
2016 하반기	일본여행 패키지 여행상품권 (1인당 150만 원 상당)	5명 (25년 이상)	7,500,000
	제주여행 패키지 여행상품권 (1인당 75만 원 상당)	1명 (25년 미만)	750,000
2017 상반기	여행증서(1인당 150만 원 상당)	2명	3,000,000
2017 하반기	여행증서(1인당 150만 원 상당)	6명	9,000,000
합계		14명	20,250,00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① 복리후생항목 중 일부내역 통합공시 누락 관련

체육회는 ‘[표 1] 대한체육회 복리후생항목 지출내역 중 통합공시 누락 명세’에 대해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통합공시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통합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공시에 대한 안내 및 매뉴얼 재숙지 등을 통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고가의 기념품 제공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정년퇴직자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해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복리후생항목 통합공시에 누락한 내역을 수정 공시하고(시정)
- ② 향후 통합공시를 하면서 공시대상인 복리후생항목의 내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③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체육정보시스템 정보 등록·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임원의 기본 정보와 이들의 징계내역(자격정지 이상)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체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체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구분		2014년 최초 시행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년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17년 개정)
		선수지도자 등록 시스템	심판 등록시스템	동호인 선수 등록 시스템	임원 정보 관리 시스템
근거 규정	기본사항 등록의무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 등록규정(제5, 6조)	※규정 개정 중 (‘18년 하반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內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규정(제7조)	회원종목단체규정(제22조 7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27조 8항)
	징계등록 의무	선수위원회 규정(제21조 제2항) 및 스포츠공정위 원회 규정(제37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7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 37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0조)
규정 시행일		2014. 4. 1.	2016.3.21.	2016.3.21.	2017. 5. 15.
시스템 구축		2014. 9. 4.	선수·지도자등록 시스템 활용	2017.6~2018.4월	2016. 12. 19.
징계등록대상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 심판,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 임원	
등록·관리주체		회원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 회원종목단체
기본사항 등록내용		소속, 종목, 직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년, 출신학교, 교 육이수	소속, 종목, 성명, 성별, 생 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 일, 교육이수	소속, 종목,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 메일, 기수, 출신학교, 교육 이수	소속, 종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징계 등록내용		자격정지 이상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표 1]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의 기본정보를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징계한 사항 전반을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의 기본 정보 및 징계사항(자격정지 이상)을 체육정보시스템에 제대로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체육회는 위 등록대상 정보가 체육정보시스템에 제대로 등록·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기한 내 징계사항(자격정지이상) 등록·관리 소홀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체육정보시스템에 징계내역(자격정지 이상)의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등록대상 총 286건 중 등록기간⁴⁾(3개월) 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하고, 감사기간 중 지적을 받고 2018. 5~6월에야 142건(49.7%)을 등록하는 등 지연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었다.

[표 2] 체육정보시스템 내 자격정지 이상 징계 등록 현황

4)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기간임.

등록 시기	3개월 이내	4~10개월 이내	10~20개월 이내	20~60개월 이내	등록일 확인 불가	기타 (미등록)	계
등록 건수	37 (12.9%)	83 (29%)	44 (15.5%)	97 (33.9%)	5 (1.7%)	20 (7%)	286

※ 세부내역은 [별표] 체육정보시스템 내 징계내역 등록관리 내역 참조(생략)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내역을 해당 회원종목단체 등에 문서로 통보할 때 체육정보시스템에 그 징계내역(자격정지 이상)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로부터 문서와 국회 자료 제출 등을 위해 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받아보고는 있으나, 체육정보시스템에 징계내역이 제대로 등록·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편 선수·지도자의 기본정보가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징계내역을 등록·관리할 수 없는 경우(별표 60, 61, 271, 272, 286번)도 발생하고 있다.

나. 임원정보 등록·관리 부실

또한 「임원정보관리시스템」 내 임원의 기본정보 등록·관리의 적정여부를 조사⁵⁾한 결과, [표 3]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기본정보는 51% 정도가 등록되지 않고 있다.

[표 3] 최신 회원종목단체 임원과 임원정보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임원 자료의 비교 분석

(* : 임원정보 미등록 회원종목단체)

연번	회원종목단체	임원 정보	등록	미등록	연번	회원종목단체	임원 정보	등록	미등록
1	대한검도회	37	26	11	34	대한승마협회	20	13	7
2	대한게이트볼협회	26	20	6	35	대한씨름협회	21	9	12
3	대한골프협회	31	29	2	3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21	15	6
4	대한국학기공협회*	24	-	24	37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9	-	29*

5)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최신 회원종목단체 임원과 임원정보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임원 자료를 비교 분석

연번	회원종목단체	임원 정보	등록	미등록	연번	회원종목단체	임원 정보	등록	미등록
5	대한궁도협회	20	20	-	38	대한양궁협회	27	24	3
6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31	28	3	39	대한에어로빅연맹	16	-	16*
7	대한근대5종연맹	24	23	1	40	대한역도연맹	28	8	20
8	대한당구연맹	28	28	-	41	대한요트협회	27	10	17
9	대한럭비협회	21	15	6	42	대한우슈협회	18	16	2
10	대한레슬링협회	31	28	3	43	대한유도회	27	27	-
11	대한롤러스포츠연맹*	28	-	28	44	대한육상연맹	30	-	30*
12	대한루지경기연맹	20	16	4	45	대한자전거연맹	29	-	29*
13	대한민국농구협회*	28	-	28	46	대한정구협회	22	20	2
14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29	28	1	47	대한조정협회	24	24	-
15	대한민국배구협회*	28	-	28	48	대한철인3종협회	24	23	1
16	대한민국족구협회	17	4	13	49	대한체조협회	29	-	29*
17	대한민국줄넘기협회(준)*	22	-	22	50	대한축구협회	31	23	8
18	대한바둑협회*	24	-	24	51	대한카누연맹	29	6	23
19	대한바이애슬론연맹	27	18	9	52	대한카라테연맹(준)	31	-	31*
20	대한배드민턴협회	30	28	2	53	대한카바디협회(준)	23	-	23*
21	대한보디빌딩협회	23	22	1	54	대한컬링경기연맹	-	-	-
22	대한복싱협회	26	26		55	대한킥복싱협회(준)	17		17*
23	대한볼링협회*	27	-	27	56	대한탁구협회	29	28	1
24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연맹*	27	-	27	57	대한태권도협회	22	8	14
25	대한빙상경기연맹	28	16	12	58	대한택견회	21	-	21*
26	대한사격연맹	26	26	-	59	대한테니스협회	28	-	28*
27	대한산악연맹	26	24	2	60	대한파크골프협회	30	-	30*
28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4	1	23	61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27	-	27*
29	대한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협회	31	28	3	62	대한펜싱협회	29	27	2
30	대한수영연맹	-	-	-	63	대한하키협회	9	-	9
31	대한수중.핀수영협회	29	2	27	64	대한핸드볼협회	29	25	4
32	대한스쿼시연맹	21	17	4		총합계	1,588	779 (49%)	809 (51%)
33	대한스키협회	27	-	27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4]와 같이 시·도체육회 임원의 기본 정보는 72.5% 정도가 등록·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 강원, 충남, 대전, 경북, 경남 체육회를 제외한 기타 시·도체육회는 임원의 기본정보를 거의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표 4] 최신 시도체육회 임원과 임원정보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임원 자료의 비교 분석

연번	시도체육회	최신 임원	시스템 등록 임원	미등록 임원	연번	시도체육회	최신 임원	시스템 등록 임원	미등록 임원
1	서울	32	1	31	10	경기	41	5	36

2	부산	50	4	46	11	충북	34	1	33
3	대구	26	19	7	12	충남	27	20	7
4	인천	25	1	24	13	전북	32	5	27
5	광주	46	2	44	14	전남	32	5	27
6	대전	33	26	7	15	경북	29	23	6
7	울산	39	4	35	16	경남	40	27	13
8	세종	22	-	22	17	제주	52	1	51
9	강원	29	23	6		합계	592	163 (27.5%)	429 (72.5%)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체육회 ○○부는 회원종목단체에 임원 인준을 통보할 때 임원정보를 임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 **부는 시·도체육회 임원 인준 시 임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지도 않고 있는 등 임원 정보의 등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다. 심판등록시스템 징계등록일 미표출

한편 임원정보관리시스템이나 선수·지도자 정보시스템에서는 징계내역 등록일 메뉴가 있어 징계 등록일이 표출되는 반면, 심판등록시스템에서는 징계내역(자격정지 이상) 등록일 메뉴가 없어 징계내역 등록일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체육회는

① 징계내역 등록에 대해서는 향후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로 하여금 징계를 결정한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내역에 대해선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징계사항을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② 임원 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3자정보제공이용동의서

를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임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2018. 7. 12. 회원종목단체에 관련사항을 전파하였고, 향후 인준 시 마다 임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임원정보를 입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임원 정보와 징계 내역을 체육정보시스템에 제대로 등록·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관리 부실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별표](생략)와 같이 2015년 ~ 2018년 5월 기간 중 ‘제8회 삿포르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점검’, ‘한일 생활체육교류 행사’ 등의 이유로 총 196건(541명)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체육회 「여비규정」 제22조 및 「출장복명서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내부정보유통망(근태관리시스템/출장대장)에 등록하여 출장자료 보존과 출장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위 196건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내부정보유통망에 기한 내(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가 31.2%이며, 2017. 10. 18.부터 2017. 10. 25.까지 실시한 ‘스키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점검’의 경우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총 4건이 감사일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았다. 특히, 각종 국제경기대회(동계아시아, 하계유니버시아드, 하계올림픽 등) 관련 결과보고서들이 등록기한 내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있었다.(기한 내 등록률 36% : 25건 중 9건 등록)

[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현황(2015년 ~ 2018년 5월)

구분	2015	2016	2017	2018.5월	합계	비고
총 건수	47	56	83	10	196	
기한 내 등록	26 (55.3%)	45 (80.3%)	52 (62.7%)	8 (80%)	131 (66.8%)	
기한 초과 등록	19 (40.4%)	10 (17.9%)	30 (36.1%)	2 (20%)	61 (31.2%)	
미 등록	2 (4.3%)	1 (1.8%)	1 (1.2%)	-	4 (2.0%)	

※ 세부내역은 [별표](생략) ‘2015 ~2018.5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내부정보유통망 내 등록 현황’ 참조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체육회는 향후 직원들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규정 및 지침의 지속적인 안내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실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내부정보유통망에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하 “공정위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2017. 2. 7. 제2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4명을 위촉(임기 2년)한 바 있다.

그리고 체육회는 위원 자격기준과 구성기준 완화 및 위원 인원 확대를 위해 공정위 규정 제4조와 부칙을 [표 1]과 같이 개정한 바 있다.

[표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및 부칙 개정 현황

구분	① 변경 전(2016. 3. 21.~ 2017. 2. 9.)	② 2017. 2. 10. 전부 개정	③ 2017. 4. 3. 개정
제4조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2. (생략)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생략) 3. 위원 9명 이상 19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구분	① 변경 전(2016. 3. 21.~ 2017. 2. 9.)	② 2017. 2. 10. 전부 개정	③ 2017. 4. 3. 개정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30조 제1항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삭제)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u>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u> 제2조(생략)

한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계 표창,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공정위 규정 제3조), 공정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별표 1](생략)과 같이 589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위원 위촉 시 협의절차 미이행

공정위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체육회장은 위원 위촉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징계 등 제재 관련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위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적격성 등에 관하여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검증을 거쳐 위촉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체육회는 공정위 규정 제4조 제3항이 제정(2016. 3. 21.)된 이후 현재까지 총 24명¹⁾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한 번도 문체부와 협의²⁾한 적이 없었다.

나. 위원 위촉 시 자격 및 구성기준 미준수

2017. 2. 7. 제2기 위원 위촉 당시의 공정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 구성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법률가, 스포츠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률가 또는 스포츠분야 교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17. 2. 7. [별표 2]와 같이 당시 공정위 규정 제4조 제3항(1호~3호)의 위원 자격기준과 제5항의 위원 구성기준에 맞지 않게 제2기 위원 14명을 위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14명 중 2명은 공정위 규정 제4조 제3항(1호~3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및 제2호(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1) 제1기 10명, 제2기 14명 등 총 24명(결원 등으로 위촉한 위원 제외)

2) ①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2015.9.18. 2017.3.13.) :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협의결과의 기속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체계 및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음**

② **대법원 판례** :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하는데도 7명만으로 구성하였다.³⁾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위 “가”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위원회 구성 시 문체부 장관과의 협의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체부 장관과의 협의 요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은 공정위 규정이 아닌 「정관」에 명시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2017. 2. 10.자 공정위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정개정이 지연되었고, 2017. 4.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부칙 제1조에 2017. 2. 10.자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회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4)에 따라 문체부 장관과 협의 없이 체육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관」 제40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외의 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43조 제3항⁵⁾에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 규정에서는 위원 위촉 시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육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① 체육회는 2017. 2. 7. 제2기 위원을 위촉하였고, 3일 후인 2. 10. 공정위 규정을 개정(전부 개정)하면서 제4조 제5항의 위원 구성기준을 삭제하였음.(위 공정위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체부 체육정책과와 협의한 바 없음)

② 이후 체육회는 2017. 4. 3. 공정위 규정 부칙을 개정하여 2016. 10. 6. 취임한 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4)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둘째, 공정위 규정 개정 과정이 지연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근거로 위원 위촉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017. 2. 10. 개정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2017. 4. 3.에야 부칙을 개정한 것도 적정하지 않으며, 특히 2017. 2. 10.자 공정위 규정 개정 전·후의 위원 자격기준(제4조 제3항 제1호~3호)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2명⁶⁾의 위원에 대해서까지 2017. 4. 3.자 부칙 제1조 개정만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⁷⁾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고, 앞으로 위원 자격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별표 2]의 1번~2번

7) 이와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제43조 제3항의 위원 자격기준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별표 2]

스포츠공정위원회 2기 위원 위촉 현황

(위촉일 : 2017. 2. 7.)

연번	성명	경력사항	규정 제4조 제3항 해당여부	규정 제4조 제5항 해당여부
1	차○○		해당없음	14명 중 7명 (50%)이 규정 제4조 제3항 제 1,2호에 해당
2	박○○		해당없음	
3	김○○		해당 (제3항 1호)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방법원 등 부장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 전문가)	
4	최○○		해당 (제3항 1호) (전 중앙지검 ○○검사를 역임, 법조계 전문가)	
5	김○○		해당 (제3항 2호) (전 ◇◇학회 회장, ▽▽대 스포츠학부 교수로서 생활체육 전문가)	
6	김○○		해당 (제3항 3호) (전 △△일보 체육부국장 출신 언론계 전문가)	
7	박○○		해당 (제3항 2호)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 및 ○○대 체육대학장 역임, 학계 전문가)	
8	손○○		해당 (제3항 2호) (한국◇◇학회 부회장 역임 등 스포츠 법 학계 전문가)	
9	신○○		해당 (제3항 3호)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 역임 등 체 육계 전문가)	
10	심○○		해당 (제3항 3호) (대한체육회 감사 및 ○○ 회장 등을 역임한 체육계 전문가)	
11	오○○		해당 (제3항 3호) (대한체육회 입사후 사무차장 및 체육회 법제상벌위원 등을 역임 체육계 전문가)	
12	이○○		해당 (제3항 1호) (△△공단 감사, ◇◇재단 재무이사 등 을 역임한 법조계 전문가)	
13	조○○		해당 (제3항 2호) (□□학회장, 한국○○ 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학계 전문가)	
14	윤○○	핸드볼 감독	해당 (제3항 3호) (스포츠분야 종사자)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6. 3. 21.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새 대한체육회의 비전 설정을 위해 2016. 11월 체육단체 및 체육인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통합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체육인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체육회는 2017. 4.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시 부칙 제2조¹⁾(이하 “부칙”이라 한다)’ 마련과 동 부칙에 따른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2017. 4. 11.)을 통해 2017. 5월부터 2017. 10월까지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에 대해 구제신청 안내, 구제신청 접수, 구제심의·의결, 구제결과 종합보고(체육단체별 단체장→대한체육회)의

1) 제2조(적용범위) ①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제신청대상은 2014. 11. 6.(양 단체 통합 합의문 서명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32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제25조 제3항과 「인사규정」의 제81조 제2항에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과정으로 체육인 구제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 부칙과 지침은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을 구제신청자에게 두고 있으며, 2014. 11. 6. ~ 2016. 12. 31. 사이에 의결되어 징계를 받은 자로 구제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에는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의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감경의 한도·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도 종목단체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등의 징계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세부감경기준을 마련·적용함으로써 감경을 적용한 구제 실시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회원종목단체 등의 체육인 구제 진행사항을 보고받아 부칙과 지침에 위배되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기간 중 체육인 구제관련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한 결과,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에 대한 구제현황은 [표1]과 같고, 다음과 같이 과

도한 감경처분과 함께 부칙과 지침에서 정한 구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표 1]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에 대한 구제 현황

구분	신청건수	구제결과	비고
대한체육회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 24명 중 14명(58%) - 사면·복권 :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 (당초(이하 같다.) 자격정지(1년6월)) · 야구 ○○○, ○○○, ○○○, ○○○(자격정지 1년) · 루지 ○○○ (자격정지 10월) · 체육회 직원 ○○○(감봉1월) - 감 경 :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책: 3명[테니스/○○○(제명), 수영/***, ○○○(제명)] · 자격정지 1년: 1명[당구/○○○(자격정지 3년)] · 자격정지 5년: 3명[수영/○○○, ○○○, ○○○(제명)] ○ 기각 : 24명 중 10명(42%) - 태권도 6명: ○○○, ○○○, ○○○, ○○○(제명), ○○○, ○○○(견책) - 레슬링 1명: *** (자격정지6월) - 당구 1명 ○○○(자격정지2년) - 수영 2명: ***, *** (제명) 	
회원종목단체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14명 중 11명(79%) - 사면·복권: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상 ○○○(자격정지1년), ○○○, ○○○(출전정지1년) · 수영 ○○○(자격정지 1년) · 태권도 ○○○(제명), ○○○(자격정지 3년) - 감경 :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책: 3명[당구/○○○(직무정지 1월), ○○○, ○○○(정직 1월)] · 자격정지 1년: 1명[빙상/○○○(자격정지1년6월)] · 자격정지 3년: 1명[핸드볼/○○○(제명)] ○ 기각: 14명 중 3명(11%) - 당구 1명: ○○○(파면) - 빙상 1명: ○○○(제명) - 복싱 1명: ○○○(해임)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 체육회, 시군구 종목 단체 포함)	없음	해당 없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구제된 14명 중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11명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중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징계양정¹⁾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제명 처분을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의 종류 :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받았던 3명은 4단계나 낮은 견책으로 감경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 실시에 대한 공정성²⁾ 논란이 야기되었다.

나. 또한 회원종목단체의 체육인 구제현황을 검토·확인한 결과, 대한○○○○연맹과 대한○○○협회는 [표 2]와 같이 부칙과 지침의 구제 기준을 위반하여 체육인을 구제하였다.

[표 2] 회원종목단체(빙상·핸드볼)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인 구제 현황

구분	신청건수	구제기준	구제결과	비고
대한 ○○○○ 연맹	5	○ 입증책임 관련 - 구제신청당사자가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구제 신청자 5명 전원이 구제지침 상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과 무관(개인적인 비위)한 사안임에도, - 5명중 4명을 인용(사면복권 3명, 감경 1명)	2017.5.19. 구제결정
대한 ○○○ 협회	1	○ (시간범위 관련) - 1차 징계가 2014.11.6.~ 2016.12.31.중 의결되어 징계가 확정된 사안에 한함	○구제 신청자는 2013.9. 징계가 확정된 사안으로 지침 상 시간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인용(감경)	2017.6.23. 구제결정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체육회(공정체육실)는 위 2개 단체의 부당한 구제 결과를 보고 받고도 구제 기준 부합 여부, 구제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차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① 감경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된 구제정책에서의 감경의 의미는 일반 징계결정 시 판단하는 단순 감경이 아닌 구제정책에서의 감경이고, 대통령

2) 2017년 국정감사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비리 체육인 구제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발췌

- 대한체육회 사면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스포츠 4대악'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체육단체에서 제명된 임원 2명은 견책으로, 3명은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 감면

이 시행하는 사면복권과 같은 성격의 구제정책이라고 하면서, ‘구제지침’ 상에 감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사유는 체육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체육인의 화합을 위하여 폭 넓게 추진된 구제정책이었다고 답변하였다.

② 회원종목단체(○○, ***)의 구제 건은 구제지침 적용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이의신청 등) 제9항은 금번 구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체육회의 직권 재심사가 불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가 체육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을 위하여 폭 넓게 추진된 구제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감경의 한도·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과도한 감경 결정을 하였거나 구제대상도 아닌 사람을 부당하게 구제하는 등의 사안을 재심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세부 감경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도한 감경을 적용하여 구제실시의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와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 지침」을 위반한 회원종목단체(○○, ***)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등 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천만 원 이하의 건설업 전문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별표 1] ‘공사업 미등록 업체 등과의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31개 업체와 57건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별표 2]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건의 용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공사업 등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¹⁾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

1)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전문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1천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건설업 전문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의 건설업을 등록²⁾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육회는 ‘실내빙상장 냉각탑 자동제어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이 냉각탑의 중앙관제장치 및 현장제어기기류의 설치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업종의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과 계약(18,430천 원)하는 등 [별표 1]과 같이 총 56건의 공사(계약금액 계 1,153,871천 원)에 대하여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로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시공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와 1인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³⁾ 등은 다른 대체 업체가 있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생산하는 용역 등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표 2]와 같이 ‘2015년도 선수촌 의료정보시스템(EMR)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위 의료정보시스템의 저작물의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⁴⁾을 개발업체가 제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체육회는 위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납품한 (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유지보수(정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의계약 사유⁵⁾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경쟁절차 없이

3)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조달청 유권해석 160458호, 2016.11.17.)

4) 선수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0조(저작권 소유)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그러나 “을”은 “갑”이 계약 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건의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진천선수촌 자동제어설비(기계, 전력, 조명)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1인 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주) ▽▽▽ 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 참여기회가 상실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체육회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차후 공사계약 체결 전에 공사업체의 면허 취득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절차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 의계약 요건을 잘못 적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 의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1인 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공사업 미등록 업체 등과의 수의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현황		적정 건설업종
					계약업체 (대표)	등록건설업	
1	실내빙상장 냉각탑 자동제어공사	냉각탑 자동제어 공사	2014.03.01.~ 2014.03.17.	18,430		무면허	기계설비공사업
2	선수식당 배기설비 개선 공사	제빵실 배기설비 개선	2014.04.15.~ 2014.04.21.	17,804		“	기계설비공사업
3	올림픽의집, 개선관흡수식냉온수기세 관정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2014.04.22.~ 2014.05.06.	17,900		“	기계설비공사업
4	운동장주변 잔디 식재 공사	운동장 주변 잔디 식재 등	2014.04.23.~ 2014.04.27.	21,852		“	조경·식재공사업
5	태백 숙소 목욕탕 보수공사	선수숙소목욕탕 바닥 및 벽체 타일철거 등	2014.04.23.~ 2014.04.28.	21,945		“	시설물유지관리업
6	남자숙소 건조실 설치공사	옥상 건조실 설치	2014.04.23.~ 2014.04.28.	18,381		“	실내건축업공사업
7	옥외변전소 고압반 지붕 설치	고압반 지붕설치	2014.05.15.~ 2014.05.23.	16,731		“	시설물유지관리업
8	실내빙상장PIT방수공사	PIT 바탕정리, 방수몰탈등	2014.05.15.~ 2014.05.25.	17,630		“	습식·방수공사업
9	선수촌내 잔디유지관리	운동장 뚝방 및 양궁장 잔디관리	2014.06.01.~ 2014.10.31.	19,800		“	조경·식재공사업
10	실내빙상장 자동제어 설비공사	제습기 원격제어 설비 공사	2014.07.25.~ 2014.09.26.	49,500		“	기계설비공사업
11	진천선수촌 녹지공간 인력제초 공 사	잡초제거(잔디면적72,584㎡)	2014.08.26.~ 2014.09.01.	18,000		“	조경·식재공사업
12	실내빙상장 보완공사	외부계단난간 도장 및 바닥 보수	2014.10.22.~ 2014.10.30.	19,500		“	시설물유지관리업
13	옥외주차장 차선 도색공사	옥외주차장 차선 도색	2014.10.28.~ 2014.11.02.	20,700		습식방수 철근콘 크리트공사 상하	도장공사업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현황		적정 건설업종
					계약업체 (대표)	등록건설업	
						수도설비공사업	
14	선수식당 주방 보수공사	천정액사보드판,트렌치설치등	2014.10.28.~ 2014.11.03.	19,943		무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15	옥외 훈련장 배토공사	배토(29,483㎡)및주변정리	2014.11.07.~ 2014.11.11.	19,000		“	조경·식재공사업
16	2014년진천선수촌소나무전정공사	전지전정(소나무269주)	2014.12.18.~ 2014.12.24.	19,110		“	조경, 식재공사업
17	리듬체조장 환기설비 보수	환기설비보수	2015.03.02.~2015.03.26.	19,015		“	기계설비공사업
18	선수촌내 잔디 유지관리	동동장뜯방,양궁장잔디	2015.03.24.~2015.10.31.	21,507		“	조경·식재공사업
19	2015년진천선수촌봄화단조성공사	초화류식재(태극광장-12,200본,행정동총 2,208본 화랑관총2,000본, 꽃잔디보식 1,000본	2015.04.02.~ 2015.04.06.	18,500		“	조경·식재공사업
20	태백선수촌숙소 바닥 및 물딩공사	선수숙소바닥 및 물딩	2015.04.15.~2015.04.27.	17,710		"	시설물유지관리업
21	종합육상장 잔디 롤러 다지기 및 떼뜨기 공사	롤러다짐(7,140㎡)및배토(손배토,419㎡)	2015.04.16.~ 2015.04.23.	21,000		“	조경·식재공사업
22	크로스컨트리 계단보수 및 침식방 지 매트 설치공사	계단목철거및계단교체(75개소)침식사면 정리및매트설치(40m)	2015.04.20.~ 2015.05.01.	21,000		“	시설물유지관리업
23	태백선수촌숙소 도배공사	숙소22개실도배공사	2015.04.21.~2015.04.30.	20,229		“	시설물유지관리업
24	올림픽의집,개선관흡수식냉온수기세 관정비공사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2015.04.28.~2015.05.15.	19,500		“	기계설비공사업
25	진천선수촌50m사격장방풍벽설치공 사	길이210m, 높이3m 방음판넬설치공사	2015.05.08.~ 2015.05.19.	19,700		“	시설물유지관리업
26	실내50m사격장옥상바닥방수공사	50m사격장지붕통로길이200m, 폭3m우레 탄도막방수공사	2015.06.16.~ 2015.07.10.	19,800		“	습식·방수공사업
27	국제스케이트장 휴게실 설치 공사	휴게실 설치	2015.06.17.~2015.07.07.	19,700		“	시설물유지관리업
28	소나무 조형 전정 및 잔가지 처리 공사	소나무 조형 및 전정 등	2015.10.01.~2015.10.07.	19,500		무면허	조경·식재공사업
29	태백사무실, 식당, 휴게실등바닥교체	바닥 디럭스타일 교체 등	2015.10.05.~2015.10.10.	18,161		"	시설물유지관리업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현황		적정 건설업종
					계약업체 (대표)	등록건설업	
	공사						
30	진천선수촌 종합육상장 및 야구장 통기 개선공사	통기작업 (종합육상장 -15,814, 야구장 8,674㎡)	2015.10.15.~ 2015.10.30.	18,100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31	국제스케이트장 원업실 보수 공사	천정 및 벽체 퍼라이트 뿔칠 등	2015.10.28.~2015.11.11.	20,000		“	도장공사업
32	국제스케이트장 지붕 배수로 단열 설치 공사	지붕배수로 설치 등	2015.11.23.~2015.12.03.	20,900		“	시설물 유지 관리 업,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 사 업
33	태백 체육관 천정 보수 공사	체육관 천정텍스 철거 및 교체	2015.11.25.~2015.12.02.	20,075		“	시설물유지관리업
34	올림픽의 집 냉난방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2015.11.26.~2015.12.10.	21,500		“	기계설비공사업
35	개선관 기계설비 중앙감시반 보수 공사	기계중앙감시반 교체	2015.12.07.~2015.12.18.	20,350		“	기계설비공사업
36	실내빙상장 냉각수 배관 화학세관 및 에틸렌글리콜 정제	냉각수배관, 화학세관등	2016.04.01.~2016.04.15.	19,470		“	기계설비공사업
37	올림픽의집, 개선관중앙냉방기계세관 정비	수배관, 열교환기세관등	2016.04.21.~2016.05.06.	19,800		“	기계설비공사업
38	선수촌내 잔디 유지관리	운동장 및 양궁장 잔디 보식	2016.04.25.~2016.10.31.	21,920		“	조경·식재공사업
39	진천선수촌내 풀 뽑기 공사	풀제거(잔디밀녹지-44,719㎡)	2016.05.10.~ 2016.05.17.	17,800		“	조경·식재공사업
40	국제스케이트장 및 실내빙상장 난 방용 고온수 히트펌프 보수	압축기4대철거및콤프레셔설치	2016.06.01.~2016.06.04.	21,285		“	기계설비공사업
41	영광의집, 올림픽의집숙소도배보수	숙소35개실도배	2016.09.01.~2016.09.07.	19,525		“	시설물유지관리업
42	올림픽의집흡수식냉온수기(2호기)저 온재생기전열관교체	냉온수기해체조립, 전열관교체등	2016.10.04.~2016.10.28.	19,580		“	기계설비공사업
43	진천선수촌 크로스컨트리 코스 계 단 보수공사	계단교체(수량106조), 진입로개설(60m)	2016.10.31.~ 2016.11.15.	20,890		“	시설물유지관리업
44	올림픽의집흡수식냉온수기(1호기)열 교환기교체	열교환기 철거 및 설치	2016.11.17.~2016.12.09.	21,340		“	기계설비공사업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현황		적정 건설업종
					계약업체 (대표)	등록건설업	
45	진천선수촌 파트너하우스 외벽 도장공사	크랙보수및외벽도장(1,578㎡),로고삽입	2016.11.23.~ 2016.12.02.	17,400		“	도장공사업
46	진천선수촌 실내사격장 동계보온 비닐막 보수공사	25m, 50m 사격장각30사대노후동계보온 막사창호및비닐쉬트교체	2016.11.29.~ 2016.12.19.	17,500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47	올림픽의 집 숙소 도배 보수	숙소28개실도배	2016.12.15.~2016.12.24.	21,340		“	시설물유지관리업
48	국제스케이트장2층사무실칸막이설치	정책연구센터 사무실 조성	2017.01.13.~2017.01.19.	50,600		“	실내건축공사업
49	행정동UPS축전지설비교체공사	행정 동UPS 축전지 교체 공사수량64개 12V/120AH	2017.03.14.~ 2017.03.24.	17,952		“	전기공사업
50	국제스케이트장냉동기조작반수동기능및UPS설치	냉동기조작반 수동기능 설치 등	2017.03.22.~2017.04.18.	20,000		“	기계설비공사업
51	행정동 전면 바닥데크 보수공사	바닥데크 철거 및 설치	2017.07.18.~2017.07.28.	16,808		“	시설물유지관리업
52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 쉼터 조성공사	파고라(썬큰),센터화단4면,세면대등	2017.09.19.~ 2017.09.25.	19,800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53	진천국가대표선수촌소국화단(국화) 조성	소국식재(소국화분160배치,200개식재)사 각화분20개소(18개/분),나비분(24개/분) 웨이트장(초화류1200본식재),화분14개	2017.09.22.~ 2017.09.25.	19,648		“	조경식재공사업
54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건축물 외부 공간 환경개선	소나무이식(13주),산철쭉식재(1,800주), 둥근소나무-5주	2017.09.27.~ 2017.09.29.	21,340		“	조경식재공사업
55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 여성 근무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여자휴게실,탈의실	2017.10.23.~ 2017.10.30.	17,820		“	실내건축업공사업
56	올림픽의집 남자숙소 도배공사	남자숙소 도배공사	2017.11.24.~2017.12.01.	19,580		“	시설물유지관리업
	합계			1,153,871			
57	국제스케이트장 내 박물관 벽체결로 공사	체육박물관 벽체결로 공사	2015.08.17.~2015.08.27.	18,315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별표 2]

수의계약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의계약 현황		비고
				계약자	수의계약 체결 사유(근거 규정)	
1	2015년도 선수촌 의료정보시스템(EMR)유지관리 용역	2015.05.01.~2016.04.30.	34,500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2	2017년 선수촌 의료정보시스템(EMR) 유지보수 용역	2017.05.01.~2018.04.30.	37,500			
3	진천선수촌 승강기 유지보수	2017.04.01.~2019.03.31.	39,600			
4	진천선수촌 자동제어설비(기계, 전력, 조명) 유지보수	2017.04.01.~2018.03.31.	52,800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진천선수촌 자동제어설비(기계, 전력, 조명) 유지보수	2018.04.01.~2019.03.31.	52,80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감사일 현재 공용차량 44대를 임차 또는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연도별 공용차량 보유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체육회 연도별 공용차량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도	합계	사무처						선수촌					
		소계	승용 (전용)	승용 (업무용)	승합	대형	기타	소계	승용 (전용)	승용 (업무용)	승합	대형	기타
2015	29	6	3	1	2	0	0	23	1	4	2	10	6
2016	34	6	2	2	2	0	0	28	1	7	3	11	6
2017	35	9	1	6	2	0	0	26	1	4	8	8	5
2018	44	9	1	6	2	0	0	35	1	9	8	8	9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는 2012. 7. 27.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2013. 10. 31.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표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현황

구 분	권익위 권고 사항	대한체육회의 이행 현황
공용차량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및 관리 지침에 명시
전용차량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관리규정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및 관리 지침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 명시 (사무총장, 선수촌장) 전용차량 배기량 명시 (사무총장, 선수촌장 3300cc급)
공용차량 임차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방식, 계약기간(제2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제11조) 등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제2조) 리스 계약 시 최소 3년(제2조)
운영현황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2016, 2017년은 담당자 인계인수 시 누락, 미공개. 2018년은 저공해차량 등 구매내역만 공개
사적사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시행중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체육회는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소속 임직원은 위 지침에 위반되게 공용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중 체육회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① 진천선수촌(국가대표훈련시설, 진천시 소재)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공무수행 목적이 아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지침 제4조 제2항 관련) ② 전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닌 ○○장, ○○○○장에게도 전용차량을 지원하거나(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지침 제6조 제4항 관련), ④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 운영 현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위 지침 제21조 관련)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차량담당자가 주 1회 확인하는 등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장과 ○○○○장에게는 배차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 전용차량을 지원한 것은 아니며, 진천선수촌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서울을 갈 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별표]와 같이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된 점, 감사기간 중 ○○장과 ○○○○장이 공용차량을 전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진천선수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한 사례들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체육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으로 소속 임직원이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에 위반되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대한체육회 공용차량 관리 및 사용 관련 확인된 문제점

연번	지침 주요내용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 관련조항	확인된 문제점
1	공용차량은 공무수행용으로 운영	제4조(차량등록현황) ②모든 차량은 공무수행용으로만 운영한다.	○진천선수촌 직원 등이 출퇴근용으로 이용 *감사기간 중 진천선수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공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례 80건 확인
2	전용차량 지급대상은 사무총장, 선수촌장, 국제위원장	제4조 ③리스차량은 사무총장·선수촌장 업무용(배기량 3300cc급)으로, 국제위원장 업무용(3000cc급) 및 기타 업무용으로 운영	○전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닌 ○○장, ○○○○장 등에게 전용차량 지원 *소나타(8024) 차량은 24회 운행 중 24회 모두를 ○○장이 이용. K3(7130) 차량은 56회 중 53회를 ○○장이 이용.
3	운행자는 차량운행일지에 날짜, 주행거리, 주유량, 경유지 및 목적지 등을 정확히 작성	제6조(운행자) ④운행자는 매 운행 시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정확히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1회 이상 차량담당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0조(운행일지) ①운행자는 운행을 마친 후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운행일지는 반드시 자필로 거짓없이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③날짜, 차량번호, 담당 기사명, 전일 누계, 운행계, 금일 누계, 전일 잔량, 급유량, 소비량, 잔량, 일시, 운무, 경유지 및 목적지 등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운행일지 미기재 사례 다수 *진천선수촌의 K3(7115) 차량은 2018.1월~5월 중 하이패스 이용내역 98건 중 60건 운행일지 미기재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비 및 차량담당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례 다수 *2018년 진천선수촌의 26대 공용차량 중 19대 차량운행일지에 주행거리, 주유량, 급유액 등 작성 미비 - K3(7115, 7130), 대형버스(3504, 6531, 6532, 6534, 8509), 모닝(7921), 봉고(1501, 1509, 1510), 살수차(7401), 소나타(7890, 8024), 스타렉스(3914, 6168, 6169), 아반떼(3767), 카니발(0568)
4	○공식행사, 공무수행에 한해 차량배차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주말 또는 공휴일은 중요 행사 목적에 한해 배차	제7조(배차원칙) ①체육회에 등록된 차량은 차량 운행 및 관리 지침에 규정한 운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한체육회 공식행사나 공무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②차량배차는 출발일 최소 3일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신청하여야하며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화 또는 e-mail 등으로의 신청은 배차 과정 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받지 않는다. ⑦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 중요 행사 목적인 경우 한하여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공식행사나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용도로 신청해도 공용차량을 배차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천선수촌의 경우 유선 또는 문자 등에 근거 배차, 2018. 1월 경부터 부서별로 운행일지와 차량을 배분하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방치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출퇴근 용도로 공용차량 운행
5	하이패스카드는 후불제카드 사용	제12조(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②하이패스카드는 후불제 카드로 사용한다.	○업무 편의라는 이유로 충전식(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감사기간 중인 2018. 6. 1. 후불식으로 교체
6	하이패스카드는 차량기사가 관리	③하이패스카드는 차량기사가 직접관리하고 사용한다.	○하이패스카드가 필요 없는 살수차에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한 후 다른 차량에 임의로 사용하도록 방치
7	매년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공개	제21조(차량 운영 현황 공개)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중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정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보유현황만 관리 ○2017년 미공개. 2018년은 지침과 달리 저공해차량 등 구매내역만 공개

자료: 대한체육회 자체 규정과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작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체육인(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등)에게 연수·교육 및 휴한기 순환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별표 1]과 같은 사업계획으로 체육인교육센터 건립(2018년~2022년, 450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회는 [별표 2]와 같이 ‘한국체육발전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KSOC 아젠다 2020’ 및 체육회 정관 제5조¹⁾를 근거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위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8. 4.~8.), 건립부지 선정(2018. 4.~7.)을 위한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훈련시설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미수립

체육회는 대표선수, 후보선수,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안

1) 「정관」 제5조(사업) 제1항

제4호 :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제11호 :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정적인 훈련 여건 제공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국가대표 훈련시설(이하 “선수촌”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선수촌의 운영을 위해 [표 2]와 같이 5년간 총 934억여 원, 연평균 18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시설 현황

구 분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태백선수촌
부지 면적	310,969㎡(93,985평)	1,405,554㎡(425,180평)	61,486㎡(18,600평)
건축 연면적	91,956.6㎡	191,284㎡	32,267㎡
숙 소	3개동 358실	8개동 825실 (게스트하우스 78실)	17실
수용 종목 및 인원	12종목 450여 명	35종목 1,150여 명	모든 종목 68명
훈련시설/ 부대시설	12개소 / 4개소	21개소 / 11개소	2개소 / 2개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대한체육회 선수촌 운영예산 현황(2015~2018)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계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합계	93,472	63,390	30,082	태릉선수촌 운영비에 포함
평균	18,694	12,678	6,016	
2014	17,224	9,630	7,594	
2015	14,157	7,213	6,944	
2016	14,643	7,213	7,430	
2017	24,566	16,770	7,796	
2018	22,882	22,564	318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8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체육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설계비 예산 5억 원의 반영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심의결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²⁾.

한편 체육국은 체육회가 그동안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2017

2) 체육회는 위 예산과 관련하여 문체부에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영한 것임. 당초 설계비 5억 원에서 최종 용역비 3억 원으로 변경·반영됨

년)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대표 훈련시설 활용에 관한 중장기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 시설물 건립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³⁾하였다.

한편 문체부의 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시(2009. 6. 18. ~ 2009. 7. 17.) 훈련 시설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각 시설별 기능 및 역할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국가대표 훈련시설 활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적(개선)한 바도 있었다.

따라서 체육회는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소관하고 있는 기존 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 개편(재구조화), 재정 효율화, 연계성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규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체육회는 기존 선수촌 운영에 매년 186억여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체육인교육센터 및 100주년기념 체육관(2018년~2020년/ 총사업비 221억 원) 등이 신규로 건립·운영될 경우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위 감사결과 처분일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체육회의 소관시설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⁴⁾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가치센터와 유사·중복 여부 검토 미흡

3) 질문서에 대한 **체육국 답변서(2018. 8. 23.) 내용 발췌**

- 당시 우리 부서는 새로이 시설물 건립을 할 경우 운영비 부족 및 운영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사업이 굳이 필요하다면 신규 건립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2018년도 예산으로 ‘체육인교육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 중장기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시설물 건립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을 체육회에 요청하였음

4) 체육회는 체육인교육센터는 선수촌과 별개의 개념의 시설이라는 불투명한 답변만 하고 있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작성지침」(2017. 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신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스포츠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2015년부터 경상남도 진주시에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8. 6. 8. 이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⁵⁾을 체결하였으며, 체육회는 이와 별개로 2018년부터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와 같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3억 원)가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표 3]과 같이 2개 사업은 동일한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사업규모, 도입시설, 기능 등이 유사하여 향후 운영프로그램 등 업무내용이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각각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거나 재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3] 체육인교육센터 및 스포츠가치센터 사업계획 비교

구 분	체육인교육센터(2017년)	스포츠가치센터(2014년)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및 지도자의 스포츠윤리, 은퇴선수 진로 및 경력 개발은 물론 일반 국민 대상 연수기능 제공 등 스포츠 분야의 공정과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능 제공, ‘존경받는 체육인’ 양성, 체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복지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정착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 ○(스포츠가치 인식 및 함양) 스포츠에 담긴 긍정적 가치(건강, 공정, 즐거움, 도전 등) 교육을 통해 스포츠 인식 제고 및 인성 함양 ○(연수원 운영) 경영환경 변화 및 국정가치 공유 등 공단 및 체육단체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 운영

5) (계약 개요) 계약상대자: (주)이가건축사무소, 계약금액: 1,092백만 원, 계약기간: 2018. 6. 8. ~ 2019. 9. 20.

구 분	체육인교육센터(2017년)	스포츠가치센터(2014년)
추진 주체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위치	미정(지자체 부지 공모 선정)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34-4
사업 기간	2018~2022년	2015~2021년
총사업비	450억 원(부지매입비 제외)	451억 원(보상비 34억 원 포함)
투입 자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규모	○부지 약 160,000㎡ ○약 200~300명 수용 규모	○부지 48,742㎡, 연면적 11,200㎡ ○약 200~300명 수용 규모
주요 시설	○(교육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교육실, 연구실 등 ○(편의시설) 숙소(300명 수용), 식당, 휴게실, 사우나, 관리실 등 ○(체육시설) (실내)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실외)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옥외수영장 등	(연수시설) 강의실, 회의실, 자료실, 사무실 등 (숙소) 2인실(10개), 4인실(20개), 6인실(30개) : 총 280명 규모 (실내체육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 헬스장, 실내(소형) 야구·축구·농구장, 스포츠 메디컬관(체력측정실, 맞춤형 운동처방실 등) (실외체육시설) 다목적 잔디운동장(축구·야구), 다목적 구기장(테니스장, 농구장), 레저스포츠체험장(플라잉짚, 인공암벽), 양궁장 등 (체험시설) 가상스포츠체험관,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장, 스포츠 전시관, 4D 입체영상관
주요 기능	○(은퇴)선수·지도자·체육행정종사자 등 체육인 훈련·교육·연수 제공	○생애주기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제공 ○스포츠가치(조화, 건강, 공정, 도전 등) 프로그램 제공 및 확산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원 기능
교육 프로그램	○클린심판 아카데미, 올림픽 아카데미, 상임심판 교육, 스포츠인권 향상, 우수선수 지도자 연수, 은퇴선수 지원, 선수 생애주기 및 기본소양교육, 초등교원 체육연수, 유아체육지도자 교육,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광장지도자 연수,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 워크숍 등	○올림픽 가치교육(OVEP), 가상스포츠체험, 체력 측정, 운동 처방·상담 등 체력증진교실, 스포츠 관련 직업(선수, 심판, 스카우터, 에이전트, 마케터, 운동처방사) 체험교실,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배치 및 전문교육 등

자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다. 건립부지 선정업무 부적정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예외 조건⁶⁾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제5조에 따르면 기부재산(건물)이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나 사용·수익허가

6) (예외 조건) ①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②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③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④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10가지

외에 위탁, 운영권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건립부지 선정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의미하므로 그 소요예산 및 부지확보 방안과 관계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승인 권한이 있는 문체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당초 부지선정 공고 시(2018. 4. 17.)에는 지자체로부터 건립 부지를 무상 제공받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번 감사기간 중 공유재산법 상 공유재산은 양여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2018. 5. 17. 체육인교육센터 시설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한 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건립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대한체육회의 건립부지 확보방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인교육센터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무상사용허가(30년) 조건으로 기부하는 대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공모 접수된 기초자치단체 대상 평가선정 시,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무상사용허가 3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참고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세금(취등록세, 재산세 등)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부지 무상사용과 매입의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는 있음.
-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문체부(체육정책과)는 [표 5]와 같이 체육회의 부지 선정 공모 절차가 문체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을 파악하여 2018. 5. 16. 체육회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추진 여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립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에 부지 선정을 추진하도록 부지선정 공모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5] 체육인교육센터 건립부지 공모 선정 추진현황

일자	추진 내용
2018.02.28.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보고 안건)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추진 계획 ** (심의 안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부지선정 계획(안)
2018.04.17.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부지 선정 공고(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 <u>면적 외 예비부지 확보, 무상제공(기부채납), 관련법상 건축 가능 여부, 공·사유권의 법적 해소, 민원 발생소지(대책방안) 등의 조건을 부지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제시</u>
2018.04.17. ~05.17.	○ 유치제안서 접수(기초 자치단체→대한체육회) * 총 10개소(경남 하동·함양, 전남 강진·고흥·순천·여수·영광·영암·완도·장흥)
2018.05.16.	○ <u>문체부 부지선정 공모 연기 요청(문체부→대한체육회)</u> * ‘체육인교육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u>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부지 선정 필요</u>
2018.05.18.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보고 안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 공모접수 현황 ** (심의 안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 평가지표(안)
2018.06.01.	○ 건립 부지선정 공모절차 및 계획 알림(신청 지자체 개별 통보) *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도출 후 최종 후보지 선정(<u>최초 계획 보다 2개월 내외 연기 예상</u>)
2018.06.18.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심의 안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선정 평가지표(안)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체육회는 건립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문체부와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부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첫째, 체육회는 위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지자체에 기부 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그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부지 활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7. 7. 20. ○○군에서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계약

금액: 41,937천 원)을, 2018. 5. 8. ◇◇군은 ‘유치제안서 작성 용역계약’(계약금액: 12,629천 원)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 간 용역비를 투자(조달청 나라장터 확인) 하고 있거나 유치 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공모절차 연기 또는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체육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라.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체육회는 위 “가”항에서와 같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바탕으로 2018. 4. 16. ‘체육인교육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용역’(주)○○건축사무소, 2018. 4. 16.~8. 14.)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의 세부 산출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체육인교육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예정가격	계약금액	비 고
타당성조사	154,514	119,290	
중앙부처 타당성조사 대응비	13,390	10,272	
기본계획(설계)	132,749	100,575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료	1,686	1,308	
계	302,339	233,445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 시행과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문체부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된 주요한 세부 과업내용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2018. 2. 19. 용역 발주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 항목 외에 기본계획(설계)의 과업까지 포함하여 발주하였다.

그 결과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나, 위 용역이 완료된 이후 건립부지가 선정되면 최종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기본계획(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한편 위 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체육인교육센터의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용예상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의사, 지불의사금액 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체육회는 [표 7]과 같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2017년 교육·연수실적과 일부 회원종목단체의 희망수요를 합산한 결과만으로 위 시설의 연간 방문수요(63,578명)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제시한 1차 수요(2017년도 연간 교육·연수실적) 127,749명 중 일부 수요(73,662명: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4,320명,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20,980명, 축구지도자 보수교육 5,000명, 태권도 지역별 지도자교육 43,062명)는 생활체육 종목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당일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에 해당되므로 위 사업의 수요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⁷⁾ 이를 통해 경제성 및 재무성을 분석한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체육인교육센터 수요추정 도출 결과

① 2017년 연간 교육·연수실적 결과(의견제출서 및 설문조사 취합)

구분	연간 교육·연수 실적(순인원, 명)			수요 추정 결과(연인원, 명)		
	당일	숙박	계	당일 수요*	숙박 수요**	수요 합계
회원종목단체	93,803	7,401	101,204	28,141	14,802	42,943
대한체육회(부서)	7,638	1,726	9,364	2,292	3,452	5,744
시도체육회	14,171	3,010	17,181	4,251	6,020	10,271
계	115,612	12,137	127,749	34,684	24,274	58,958

7) 용역기간도 4개월로서 사전에 파악해야할 수요조사도 2018. 6. 27.에서야 잠정 완료하는 등 나머지 1개월 동안 제대로 완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018. 7. 12. 현재 공정율 50%)

* 입지조건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당일 수요의 30%만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숙박인원은 순인원 기준이므로 연인원 기준으로 환산(1인이 1박 2일 교육 참가시 순인원 1명, 연인원은 2명으로 계산), 통상 2~3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보수적으로 2일을 적용하여 연인원 산정

② 회원종목단체 희망 수요

구분	교육·연수 희망 수요(명)			수요 추정 결과(연인원, 명)		
	당일	숙박	계	당일 수요*	숙박 수요**	수요 합계
회원종목단체	880	2,178	3,058	264	4,356	4,620

③ 수요 추정결과

구분	①차 수요(교육연수 실적)	②차 수요(단체 희망수요)	최종 수요 집계
교육연수 수요	58,958	4,620	<u>63,578</u>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문체부는 위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 체육회에 용역업체의 착수·중간·최종 보고 회의에 주무부서(체육정책과)도 참여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체육회는 문체부에 용역진행 관련 보고일정을 알리지 않고 착수보고(2018. 4월경) 및 중간보고(2018. 7. 9.)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확인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훈련시설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미수립 관련

체육국은 체육회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검토 용역과는 별도로 선수촌 등 기존 시설물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질문서에 대한 **체육국 답변서(2018. 8. 23.) 내용 발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 사업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착수중간결과 보고에 주무부서가 같이 참여할 것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위반함

체육회는 문체부의 2009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경 ‘선수촌 종합운영계획 및 진천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를 회신하였고, 2013년 12월경 문체부(체육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진천선수촌 2단계 공사 이후 태릉선수촌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및 이전 계획(안)’을 수립·회신하였으며, 2016년 6월경에도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태릉선수촌의 진천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진천선수촌 운영과 태릉선수촌 이전·활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선수촌 이전과 운영 및 활용계획(안)’을 수립·회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체육인교육센터는 기존 선수촌 시설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모든 체육인(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직 등)이 대상이며, 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하는 후보선수(1,470명), 청소년대표(1,078명), 꿈나무(964명)들의 동·하절기 훈련 및 실외종목 선수들의 혹한기 훈련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문체부 감사결과 처분한 ‘국가대표훈련시설의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의 핵심내용은 국가대표선수의 수요예측 등이 포함된 선수촌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태릉선수촌의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으로서, 체육회가 수립한 ‘선수촌 종합운영계획 및 진천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은 진천선수촌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용역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 없으며, 2013년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및

이전 계획'은 태릉선수촌에 국한되는 내용이고 '2016년 선수촌 이전과 운영 및 활용계획'은 태릉선수촌을 진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회신(선수촌장 전결 문서)한 것으로서 최고의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확정되지도 않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회가 2017. 1. 16. 마련한 「KSOC 아젠다 2020」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꿈나무 등을 위한 시설로서 체육인교육센터를 제안하였고, 결국 체육회가 기존의 선수촌 시설과 함께 체육인교육센터를 함께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선수촌 시설간 기능 개편(재구조화), 재정 효율화, 연계성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체육인교육센터 등 신규시설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아래 ②항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가치센터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가치센터와 유사·중복 여부 검토 미흡 관련

체육국은 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가치센터와 체육인교육센터는 기능과 역할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추진이 결정될 경우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육회는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 인식 및 가치 제고를 목표로 가상스포츠, 스포츠메디컬 체험 등을 제공하는 유·청소년 체험시설로서 주로 학생단체, 일반(가족)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체육인교육센터는 체육단체 종사자 및 대표선수를 제외한 선수(은퇴선수 등),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소양 및 전문 기술역량 강화 교육·연수시설로서 활용될 예정이므로 그 기능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체육정책 강화, 체육 분야의 다양한 교육 제공 및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교육·연수를 위한 기반 확보가 미흡, 시급한 실정이라 건립의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발표한 「KSOC AGENDA 2020」에 따르면 체육인교육센터를 체육인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 연수 및 학생 수련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두 시설의 준공 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각각 운영할 경우 그 기능이 유사·중복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도 체육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체육인교육센터의 건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③ 건립부지 선정업무 부적정 관련

체육국은 위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후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은 문체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고, 아직 건립 여부 자체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추후 건립 결정이 된다면 적절한 부지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육회는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든 사업이 계획·집행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건립부지 선정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공모에 응한 지자체 10개소⁹⁾는 부지 제공조건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

9) 경남 하동·함양, 전남 강진·고흥·순천·여수·영광·영암·완도·장흥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부지선정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육회가 이사회¹⁰⁾의 의결¹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예산 승인권한이 있는 문체부의 협의·보고·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당초 부지선정 공고(2018. 4. 17.) 시에는 지자체로부터 건립부지를 무상 제공 받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번 감사기간 중 공유재산법 상 공유재산은 양여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관련법령을 검토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지자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감사기간 중 지자체에 위 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30년간 무상사용 한다는 부지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부지 활용에 대한 제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향후 부지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등 체육회의 답변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④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관련

체육국은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 사업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착수·중간·결과 보고에 주무부서(체육정책과)가 같이 참여할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체육회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체육회는 기본계획(설계) 수립 과업을 같이 하고 있어 본 용역은 타당성 조사에 국한되는 용역임을 주지한 바 있고, 기존시설의 활용방안과 신규 건립방안을 놓고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10) 체육회는 이사회(2017년 제1차, 제11차)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나,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 등을 살펴본 결과 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우선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수요를 조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용역결과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공사비, 운영 인력·예산 등의 산출이 가능함을 체육회에 알렸고,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확인 후 향후 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에 대한 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체육회는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 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건립목표에 적합한 도입시설, 예상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우선 해당 시설을 이용할 대상기관을 상대로 방문의사, 지불의사금액,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등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도입시설, 시설·공간 규모 등을 결정하여 비용 및 편익을 도출하여 비용편익(B/C)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수요 및 시설규모·총사업비 등은 이용 대상인 회원종목단체, 지역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방문의사,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및 지불의사액 등을 조사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수요 추정결과, 유사사례,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할 경우 시설규모, 총사업비 등을 충분히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고, 용역 완료 후 부지가 선정될 경우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과업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체육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체육회는 실지감사 이후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과정에서 연간 운영비 35억 원, 연간 편익 70억 원, 비용편익비(B/C) 1.15 등의 수치를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추정한 연간 방문수요(63,578명)는 지역 내 당일 시행되거나 일부 생활체육 종목 수요를 과다하게 포함하여 도출한 결과로서, 그에 따라 산정한 경제성 분석결과인 비용편익비(B/C) 1.15는 신뢰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① 선수촌 등 대한체육회 소관 기존시설의 기능 개편, 재정 효율화, 연계성 및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체육인교육센터 등 신규시설 건립여부 등을 결정하고, 아울러 스포츠가치센터 시설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신규시설의 건립사업 추진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보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3명)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체육국장은 ① 체육인교육센터와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립부지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지선정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체육인교육센터 사업 개요(2017년)

□ 건립목적

- 선수·지도자·생활체육인들에게 교육·연수 및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질적 발전과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정착

□ 사업대상

- 범 체육지도자, 체육인 등 대상 연수 및 보수교육 실시
-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 선수·지도자에게 지역거점 혹은기 순환훈련시설 제공

□ 기본구상(안)

- 부지위치: 미정(사계절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서남 해안권, 기초 지자체 공모)
- 사업기간: 2018~2022
- 사업규모: 부지 약 160,000㎡, 약 200~300명 수용 규모의 교육·훈련시설
- 추정 사업비: 450억 원[유치 지방자치단체 부지 제공(약 60억 원) 조건]

□ 추진 일정

- ('18. 4월 ~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8. 4월 ~ 7월) 건립부지 지자체 공모 선정(5. 16. 문체부 요구에 따라 현재 공모 중지 상태)
- ('18. 8월 ~ 12월) 기본 설계
- ('19. 1월 ~ 6월) 실시 설계
- ('19. 6월 ~ '20. 6월) 관리계획 인가
- ('20. 3월 ~ 6월) 공사 입찰
- ('20. 6월 ~ '22. 6월) 착공 및 준공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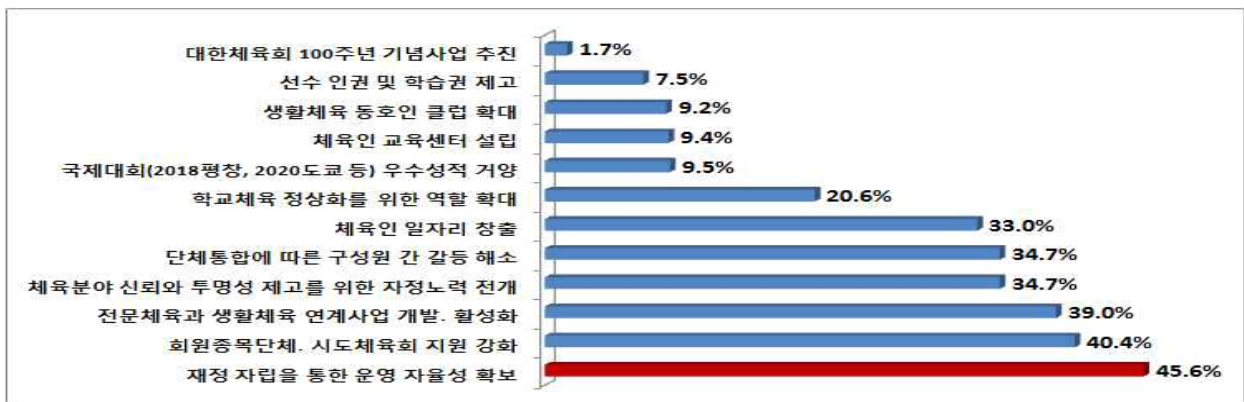
【「한국체육발전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한국정책학회, 2017. 2월)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12.10.(토)~ 12.20(수)
- 조사대상: 대한체육회 임·직원, 시도체육회(시군구 포함) 임·직원,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 포함) 임·직원, 학계 또는 언론인, 심판, 전문체육(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기타 관련 체육인 등(응답자: 1,050명)

○ 주요 내용

- (체육인 연수를 주체하는 기관) ‘대한체육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64.6%, 678명), 소속 그룹별, 체육단체 소속원 그룹 및 체육인 그룹, 경력 그룹별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응답함
- (통합 대한체육회가 역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 (진천선수촌 완공에 따른 태릉선수촌 활용방안) ‘체육인 교육센터’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총 응답자 1,050명 중 37.6%, 395명),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응답함

【KSOC AGENDA 2020(대한체육회의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남부지역 훈련원 및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겨울철에 하계종목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전지훈련원 설립. 겨울철 기후 조건이 온난한 남부지역에 설치. 지방비와 매칭 펀드로 훈련원을 설립하여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꿈나무 등 우수 선수들에게 제공. 남부지역 훈련원 겸 체육인 교육훈련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주 목적은 동절기 해외 전지훈련을 대체하는 데 있음.
- ◆ [남부지역 훈련원 및 체육인 교육훈련센터의 기능 및 역할]
 - 남부지역 훈련원은 체육인 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을 겸해서 운영. 체육인 교육훈련센터에서는 각종 체육지도자 교육 및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워크숍, 연수 등 다양한 기능 수행
 - 대한체육회 제도권 내에 있는 체육인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 연수 및 학생 수련회 장소로도 활용
 - 다만, 남부지역 훈련원이 완공될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태릉선수촌 시설을 교육훈련센터로 활용

【대한체육회 정관(사업)】

- 4. 체육인의 권익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 11.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체육인교육센터 관련 교육·연수 수요 현황(2017년 실적 취합)

① 2017년도 연간 회원종목단체 연수·교육 실적

(단위: 명, 순인원 기준)

연번	종목 구분	설문조사 및 의견제출서 취합 결과			비 고
		계	숙박교육	당일교육	
1	검도	2,513	468	2,045	
2	게이트볼	300	300	-	
3	골프	376	17	359	
4	국학기공	2,939	-	2,939	
5	궁도	543	543	-	
6	그라운드골프	1,050	100	950	
7	근대5종	150	90	60	
8	농구	400	-	400	
9	당구	282	-	282	
10	댄스스포츠	725	363	362	
11	럭비	351	-	351	
12	레슬링	266	266	-	
13	롤러	270	-	270	
14	루지	35	-	35	
15	바둑	665	-	665	
16	바이애슬론	60	60	-	
17	배구	577	336	241	
18	배드민턴	344	120	224	
19	보디빌딩	1,052	-	1,052	
20	복싱	452	-	452	
21	볼링	180	-	180	
22	봅슬레이	-	-	-	
23	빙상	-	-	-	
24	사격	-	-	-	
25	산악	740	740	-	
26	세팍타크로	208	100	108	
27	수상스키	44	-	44	
28	수영	163	-	163	
29	수중 핀수영	457	50	407	
30	스쿼시	117	117	-	
31	스키	480	65	415	
32	승마	166	-	166	
33	씨름	313	-	313	
34	아이스하키	115	115	-	
35	야구소프트볼	645	-	645	
36	양궁	138	138	-	
37	에어로빅	2,092	-	2,092	
38	역도	-	-	-	
39	요트	51	-	51	
40	우슈	207	117	90	
41	유도	1,020	1,020	-	
42	육상	-	-	-	
43	자전거	22,818	305	22,513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20,980명
44	정구	260	260	-	
45	조정	40	-	40	

연번	종목 구분	설문조사 및 의견제출서 취합 결과			비 고
		계	숙박교육	당일교육	
46	족구	626	-	626	
47	철인3종	310	-	310	
48	체조	503	-	503	
49	축구	6,200	1,200	5,000	축구지도자 보수교육 5,000명
50	카누	-	-	-	
51	컬링	42	-	42	
52	탁구	283	-	283	
53	태권도	47,497	50	47,447	지역별 지도자교육 43,062명
54	택견	99	-	99	
55	테니스	179	-	179	
56	파크골프	1,023	-	1,023	
57	패러글라이딩	102	102	-	
58	펜싱	581	359	222	
59	하키	105	-	105	
60	핸드볼	50	-	50	
계		101,204	7,401	93,803	

② 연간 시도체육회 연수교육 실적

(단위: 명, 순인원 기준)

연번	시도체육회명	의견제출서 취합 결과		
		계	숙박교육	당일교육
1	강원도체육회	960		960
2	경기도체육회	1,325		1,325
3	경상남도체육회	1,863	898	965
4	경상북도체육회	838	267	571
5	대전광역시체육회	1,373		1,373
6	부산광역시체육회	847	120	727
7	서울특별시체육회	3,323	672	2,651
8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824	578	246
9	울산광역시체육회	1,355	74	1,281
10	인천광역시체육회	482	110	372
11	전라남도체육회	2,473	291	2,182
12	제주특별자치시체육회	1,518		1,518
계		17,181	3,010	14,171

③ 대한체육회 내부 연수교육 실적

(단위: 명, 순인원 기준)

연번	부 서 명	의견제출서			비 고
		계	숙박교육	당일교육	
1	국제교류부	39	39	-	
2	대회운영부	275	275	-	
3	스포츠클럽부	713	180	533	
4	학교체육부	4,520	356	4,164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4,320
5	인사총무부	653	250	403	
6	교육복지부	2,300	300	2,000	
7	종목육성부	745	207	538	
8	훈련기획부	119	119	-	
계		9,364	1,726	7,638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2018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2018. 2. 9. ~ 2. 25.) 중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 스포츠 외교, 미디어 지원, 국가홍보 등을 위해 올림픽파크 빙상경기장(강원도 강릉시 소재) 인근에 ‘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이하 “코리아하우스”라 한다)’를 건립(준공일: 2018. 1. 31.)하였다.

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건립을 위해 2017. 10. 23. 건축설계 전문업체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민병협)과 설계 용역계약(계약기간: 2017. 10. 24. ~ 2017. 12. 8. / 계약금액: 73,137천 원)을 체결하였고, 2017. 12. 27.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주)AAAA와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12. 27 ~ 2018. 4. 18. / 계약금액: 1,970,0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7. 12. 27.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건축공사¹⁾,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여러 가지 공종별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각 공사별 금액 등 세부내역은 [표 1]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돌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등

[표 1] 코리아하우스 건립 공사비 세부 명세

(단위: 원, %)

공종별 공사 구분		금액	금액 비율	하도급 여부	비고
건 축	가설공사	44,767,557	2.27		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
	토 및 지정공사	7,664,490	0.39		"
	철근콘크리트공사	24,796,853	1.26	○	"
	철골공사	79,269,280	4.02	○	"
	돌공사	364,249	0.02	○	"
	목공사 및 수장공사	115,031,674	5.84	○	"
	방수공사	12,685,138	0.64		"
	지붕 및 환통공사	20,269,094	1.03		"
	금속공사	31,552,806	1.60	○	"
	미장공사	233,023	0.01		"
	창호공사	269,292,480	13.67	○	"
	유리공사	46,865,086	2.38	○	"
	철공사	492,220	0.02	○	"
	판넬공사	191,803,662	9.74		"
	기타공사	3,511,118	0.18		"
	부대공사	15,425,349	0.78		"
	골재비	654,267	0.03		"
	운반비	446,597	0.02		부가세 포함
	철거공사	69,063,696	3.51		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
	컨테이너 설치·해체	308,000,000	15.63		부가세 포함
기 계	기계 설비	4,411,761	0.22	○	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
전 기	전 기	287,030,000	14.57	○	
통 신	통 신	60,220,000	3.06	○	
기 타	자재 렌탈비	332,000,000	16.85		
	화장실 임대	15,840,000	0.80		
	기존바닥 철거	28,309,600	1.44		
합 계		1,970,000,000	100		폐기물처리공사비 제외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전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와 종합공사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능력 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²⁾」에 따르면 단서조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지 못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는 컨테이너 설치·해체(해당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16%) 이외에 철골 가공, 철근콘크리트 타설,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공종의 공사가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 공사까지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는 특정 전문건설업만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의 건축연면적 1,804㎡ 중 90%(86개 동 물량)를 콘테이너로 조립·설치하므로 콘테이너 조립·설치공사가 주된 공종이고 그 외 다른 공사는 종된 공사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만을 등록하였을 뿐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주)AAAA가 위 공사를 도급받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수익계약 체결 부적정

「대한체육회 계약규정」 제6조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015. 11. 2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공동마케팅협약(JMPA)³⁾에 따라 후원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수익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필요한 공식후원사 선정을 위해 [표 2]와 같이 오버레이⁴⁾ 부문(오버레이 텐트, 오버레이 캐빈 등)의 품목 및 규격을 공고하였고, 2017. 4. 4. (주)AAAA와 공식후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오버레이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공고 규격(사양) 명세

구분	캐빈	컨테이너	임시화장실
품목 규격	일반캐빈(독립형) 3×3m (A=9㎡) 일반캐빈(독립형) 3×6m (A=18㎡) 일반캐빈(독립형) 3×12m (A=36㎡) 연동형캐빈 3×6m (A=18㎡) 연동형캐빈 3×12m (A=36㎡) 연동형캐빈 3×18m (A=54㎡) 연동형캐빈 3×24m (A=72㎡) 연동형캐빈 3×30m (A=90㎡) 연동형캐빈 6×6m (A=36㎡) 연동형캐빈 6×12m (A=72㎡) 연동형캐빈 9×6m (A=54㎡) 연동형캐빈 12×6m (A=72㎡) 연동형캐빈 12×9m (A=108㎡) 연동형캐빈 12×12m (A=144㎡) 등 적층형캐빈 3×6m (A=18㎡) 연동적층형캐빈 3×6m (A=18㎡) 연동적층형캐빈 6×6m (A=36㎡) 연동적층형캐빈 9×6m (A=54㎡)	컨테이너 3×3m (A=9㎡) SEA 컨테이너, 20ft 방열 컨테이너, 20ft 방열 컨테이너, 40ft	소형, 남자 전용(소변기3,대변기2) 소형, 남녀공용(소변기2,대변기3) 기본형,남여(소변기3,대변기7) 남자전용(소변기6,대변기4) 여자전용(대변기10) 장애인용(대변기1) 장애인용(대변기2)

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공동마케팅프로그램협약(Joint Marketing Programme Agreement, 이하 ‘JMPA’라 한다) 개요

대한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에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의향서와 함께 평창조직위와 공동으로 체결된 JMPA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평창조직위 및 대한체육회는 후원사로부터 후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4) 대형 텐트 임시 시설

한편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는 평창조직위가 (주)AAAA와 후원계약(2017. 4. 4.)한 오버레이 캐빈(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 등과는 형태, 시공방법, 공종별 공사의 구성 등이 전혀 다르고, 별도의 설계 용역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공사로서 후원계약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일정이 촉박하고 컨테이너 조립·설치공사가 주된 공사로 공식 후원 업체로 이미 선정된 (주)AAA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2017. 12. 27.)하였다.

다. 건축, 기계공사와 전기·정보통신 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는 건축 및 기계공사(도금액: 1,560,591천 원), 전기공사(도금액: 464,740천 원), 정보통신공사(도금액: 76,180천 원) 등이 포함된 공사로서, 전기공사는 세부적으로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는 전화설비공사, CATV설비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의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⁵⁾에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따르면 전기공사는 경미한 공사 및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법」 제3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경미한 공사 및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이거나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건축·기계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1]의 공사 중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분리 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할 경우 컨테이너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창조직위와 (주)AAAA의 오버레이 텐트·캐빈(적층·연동 형태의 임시 임대시설) 부문의 후원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통합하여 계약한 점 등을 이유로 2017. 12. 15. 위 건립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였다.

라.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⁶⁾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체육회의 코리아하우스 건립과 관련한 준공 관계 서류에 있는 자재납품확인서(2018. 3. 15. 제출)를 파악한 결과, 방화 석고보드는 ○○건축, 복층유리는 **산업 등 계약상대자인 (주)AAAA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AAAA의 위 코리아하우스 건립공사 공사책임자(경영지원본부 강민호 이사)에게 하도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건축공사 일부(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돌공사, 목공사·수장공사, 금속·창호공사, 유리공사 등),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공사(11건)를 체육회의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등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체육회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주)AAAA가 하도급을 한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전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 종합공사 계약 체결 관련

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가 컨테이너 86개 동 물량을 조립·설치한 3층짜리 구조물로서 극히 일부분만 콘크리트 및 철골을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총면적 1,804㎡ 중 90%이상이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어 컨테이너의 조립·설치 공사를 주된 공종으로 보아, 주된 공사와 관련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AAAA와 체결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

의 시공자격)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AAAA가 보유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⁷⁾은 공장에서 제작된 판넬과 부품을 조립하는 공사에 한정되며, 철골가공, 철근콘크리트 타설, 인테리어 공사 등은 각각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로서 부대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체육회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②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가 컨테이너 조립·설치를 주요 공종으로 하는 건립공사로서 후원계약 상 후원범위인 컨테이너의 제작, 조립, 설치에 부합하므로 후원계약 상 후원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철강 및 가설 구조물 부문에서 후원하고 있는 업체인 ◇◇◇, ∇∇∇, (주)AAAA에 접촉을 하였으나, ◇◇◇와 ∇∇∇는 업무 과중으로 코리아하우스 건립을 맡기가 어렵다고 하여 (주)AAA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컨테이너 품목의 공식 후원업체인 (주)AAAA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평창조직위가 후원계약을 체결한 오버레이 캐빈(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과는 형태, 시공방법, 공종별 공사의 구성 등이 다르고, 별도의 설계 용역을 거쳐 건립되는 공사로서 후원계약의 계약 범위와는 다른 공사

7) 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에 해당되어 「대한체육회 계약규정」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육회가 제시한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건축, 기계공사와 전기·정보통신 공사 통합발주 관련

체육회는 위 사업에 포함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따른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체육회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할 경우 컨테이너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창조직위와 (주) AAAA의 오버레이 텐트·캐빈(적층·연동 형태의 임시 임대시설) 부분의 계약에도 텐트 및 캐빈 내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한 점을 이유로 위 공사를 통합 발주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발주 당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감사기간 중에 발주단계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미처 분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위 시설물은 뼈대를 컨테이너로 적층하여 만드는 구조로서 다른 구조의 공사에 비해 비교적 공정간 간섭이 적고 시공이 용이하며, 공사관계자에게 시공 시 주의하도록 요구할 경우 파손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위 시설 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전기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하

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하여 발주하였다는 체육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하도급 관리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컨테이너 설치·조립 공사 외 나머지 공사의 경우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한 종된 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은 종합공사인데 컨테이너를 조립·설치하는 건축물조립공사를 주된 공사로 간주하고, 나머지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부대공사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11건의 하도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체육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향후 종합공사를 해당 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전기·통신공사를 건축·기계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자가 하도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테니스장 부지(1997년 취득)에 창립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자체예산 2천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승인⁸⁾ 받아 ‘대한체육회 체육시설용지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이하 “타당성검토 용역”라 한다)’ 용역을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2018. 1. 24. ~ 3. 23.)하였다.

[표] 자체예산 승인신청서 내용 및 용역 수행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자체예산 승인 신청서	○ 100주년 기념 체육관 건립 (신청액: 60,000천 원 → 문체부 승인액: 20,000천 원) - 사업기간 : 2018년 1~12월 (2018년~2021년) - 사업목적 : 창립 100년 기념 체육관 건립을 통해 체육인 대상 체육활동 장려 및 기념전시공간으로 활용 - 사업대상 : 하남 테니스장(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 - 사업내용 :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 - 현황 및 여건분석(관련 법규 검토) - 건축계획안 작성 - 유사사례 공사비 및 사업기간 검토 - 현상설계 공모지침서 작성
최종보고서	○ 용역결과 -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 분석, 입지 및 사업환경 분석 - 기본방향(계획의 기본개념) 설정 및 구상, 도입시설 배치 및 계획안 검토 - 법규 검토, 사업추진일정 검토, 총사업비 추정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8) 대한체육회 자체예산 승인 문서: 체육정책과-259(2018. 1. 17.)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담당부서인 100주년기념사업부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체육회 회장 등에게 건축계획(배치 평면 등) 대안에 대하여 2차례 보고(2018. 2. 10. 체육회장, 2018. 2. 28. 간부회의) 한 바 있고, 설계공모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 11억 원(설계보상비 1, 설계비 10)을 예산부서에 배정 요청(2018. 3. 28.)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타당성 조사 미 실시 등 건설공사 시행절차 이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 시행과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시행과정을 일부 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의 순으로 건설공사의 시행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2017. 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시설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 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가 실시한 위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상 기본구상 단계에 해당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육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먼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 위 시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위 타당성 검토 용역이 기본구상에 해당함에도, 수요예측,

9) 대한체육회도 위 타당성 검토용역을 기본구상이라고 답변하였음.

편익추정, 종합분석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와 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등을 협의하지 않은 채(나항 참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¹⁰⁾하려 했다.

특히 건립 후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조직 구성, 운영 방식, 프로그램 등), 운영비용(인건비·경상경비 등) 등 향후 운영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미흡

체육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자체예산 변경 등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사업은 221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건립 필요성, 타당성 등 주요사항은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2018. 3. 23.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도 그 용역 결과와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문체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¹¹⁾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서에 설계비 배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국은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신규시설을 건립할 경우 향후에도 운영비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체육회의 재

10)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하였으나, 문체부 감사기간 중 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자 현재는 예산배정을 중단하였음

11) 이번 감사 예비조사기간(2018. 5. 14. ~ 5. 18.) 중 위 사업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018. 5. 17.에야 용역 결과 등을 문체부 체육정책과에 방문 설명함. 당시 체육정책과는 향후 운영방안이 불투명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함

정여력을 감안할 때 경제성 분석에 기반 하지 않은 타당성조사는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육회는 100주년기념관은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하남시 건립부지의 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 제공 등의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①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부실 관련

100주년기념관은 기본구상 단계로서 과업의 내용은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을 통한 건축물 기본 규모 구상으로 용역비(20백만 원) 규모를 감안한다면 경제성 분석을 통한 손익추정 등의 재무분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수지분석 등은 자체예산(JMPA분배금 등)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기 수행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기본구상 단계에 해당되는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 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위 용역 직후 설계용역을 추진하려 하여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무시하였고, 타당성조사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인 재원조달계획, 재무적 타당성, 운영계획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문제부와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체육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체육회는 역사관, 도서관, 명예의전당, 컨벤션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위 시설들은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도입 필요성을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이후

설계 및 공사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미흡 관련

체육회는 2018. 3. 28. 예산부에 소요예산 11억 원 배정을 요청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부서 간 실무적인 협의과정에 지나지 않고, 100주년기념체육관 건립예산은 문체부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2018. 3. 23. 완료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바로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고 2018. 5. 17.에서야 용역결과 등을 설명한 바 있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용역 완료 며칠 후에 설계비를 예산부서에 배정요청(2018. 3. 23.)하는 등 체육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 ② 100주년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건립 필요성 등이 인정된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계획(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반영)

□ 건립목적

- 하남시 소재 체육회의 테니스장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
 - * 1997년 한국체육관 매각 대금으로 하남시 소재 부지를 취득한 후 테니스장 건립하여 하남시테니스협회에 무상 임대 중
- 2020년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100주년을 기념하는 건축물(체육관)을 설립하여 체육회의 위상 제고.

【대상지 현황】

- 명칭: 하남시 체육용지(취득일자: 1997.3 / 취득가격: 37억 / 2017공시지가: 175억)
- 용도: 체육용지(현상태: 테니스코트 7면, 경량철골조 건물 1동)

□ 기본구상(안)

- 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8(신장지구 내)
- 사업기간: 2018 ~ 2020
- 추정 사업비: 221억원(공사비 195억원, 설계 및 감리등 시설부대경비 26억원)
- 건립규모: 부지 5,375㎡ / 연면적 약 8,600㎡ / 지하1층·지상3층
- 기본모델: 실내체육관

□ 추진 일정

- 체육시설용지(하남시)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2018. 1월 ~ 3월)
- 대한체육회 내부 보고(2. 10. 회장 / 2. 28. 간부회의)
- 100주년기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자체 예산 배정 요청(3. 28.)
- 현상공모 실시(2018. 4월 ~ 7월)
- 현상공모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2018. 8월 이후)
- 공사 착공 및 준공(2019 ~ 2020) / 2020년 7월 대한체육회 창립100주년 개관 목표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집행 등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행정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별표 1](생략)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82건, 155억여 원 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체육회 「예산규정」 제8조에 따르면 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체육회는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이하 “예산안편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예산안편성지침 Ⅲ. 목별 지침에 따르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정보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등의 예산은 자산취

1) 세입세출 예산 등의 요구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요령, 기준·단가 등을 수록

득비(430-01목)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비(260목)로,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1]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등은 연구개발비 또는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안편성지침에 위배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표 1] 자산취득비로 추진한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발주금액	사업내용	적정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예산과목
2017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289,000	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관리용역비	○ 자산취득비로 사업추진 - 국가대표/후보선수 관리시스템 고도화 (체육정보망구축-자산취득비) - 체육 특기자 제도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자산취득비)
2017	대회경기영상 사이트 고도화	123,000	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관리용역비	○ 자산취득비로 사업 추진 - 체육특기자제도개선을 위한 시스템개선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자산취득비)
			서버도입	자산취득비	
2017	2017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기능 확충 용역	33,000	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관리용역비	○ 자산취득비로 사업 추진 - 웹서비스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 (체육정보망구축-자산취득비)
2016	2016년도 체육정보 시스템 고도화 용역	346,000	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관리용역비	○ 자산취득비+연구개발비로 사업 추진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관리시스템 재 구축, 선수/임원/심판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정시스템 고도화(체육정보망구축-자산취득비) - 통합후 종목단체 발전방안(전국종목별 연합회육성-연구개발비)
2016	회원종목단체 경기동영상 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250,000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 자산취득비로 사업 추진 - 종목별 경기동영상 관리 체계 구축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자산취득비)
			HW/SW 도입	자산취득비	
2016	규정관리시스템	9,800	정보시스템 개선	연구개발비/	○ 자산취득비로 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발주금액	사업내용	적정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예산과목
	기능개선 용역			관리용역비	- 체육단체 규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체육정보망구축-자산취득비)

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누락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²⁾에 따르면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1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³⁾, 홈페이지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및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관리감독부서(정보화담당관)에 제출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표준화 적용여부, 예산계획의 적정성,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정보공동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내용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2]와 같이 사전협의 대상 25건 중 19건에 대해서만 사업추진 전에 문체부의 사전협의를 받아 진행하였고, 홈페이지 신규구축 사업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홈페이지 제작’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인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ISP 사업’ 등 6건은 문체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현황

2) 제13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공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협의한다.

1.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단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은 제외
2.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사업
3.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4.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5.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APP) 제작 또는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
6.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 [별표 2] 연도별 사전협의 대상 현황

3) 홈페이지 고도화 및 운영사업(재구축 또는 고도화 비율이 50% 미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제외

(단위: 천 원)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유형	추진 연도	사전협의 여부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홈페이지 제작	17,000	홈페이지 신규구축	2018	X
2	2018 스포츠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500,000	콘텐츠 제작	2018	O
3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98,600	신규시스템 구축	2018	O
4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ISP	20,00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2017	X
5	생활체육지도자 온라인학습 콘텐츠 개발	150,000	콘텐츠 제작	2017	X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ERP연계	110,95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7	진천선수촌 입퇴촌관리시스템 구축	90,903	신규시스템 구축	2017	O
8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480,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9	대회경기영상 사이트 고도화	123,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10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289,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11	스포츠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335,000	콘텐츠 제작	2017	O
12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200,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13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영역	238,7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7	O
14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 구축	373,541	신규시스템 구축	2017	O
15	회원종목단체 경기동영상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250,000	신규시스템 구축	2016	X
16	국제스케이트장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16,005	홈페이지 재구축	2016	X
17	은퇴선수 취업지원 잡매칭시스템 구축	109,000	신규시스템 구축	2016	O
18	대한체육회 임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⁴⁾	150,000	신규시스템 구축	2016	O
19	국제스포츠인재풀 홈페이지 고도화 영역	62,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6	O
20	2016년도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423,5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6	O
21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영역	350,000	정보시스템 고도화	2016	O
22	2016 리우올림픽 홈페이지 구축 영역	20,000	홈페이지 구축	2016	O
23	생활체육지도자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용역	154,000	콘텐츠 제작	2016	O
24	정보시스템 및 전산센터 이전 통합	956,755	정보시스템 재구축	2016	O
25	스포츠 역사보존 및 공유 정보화계획 수립 설계 용역	42,380	정보화전략계획(ISP)	2015	X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4) 2016년도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에 포함시켜 추진

다. 정보화 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 내용 유출

정보화사업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⁵⁾으로 발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안요청 내용이 입찰 공고 전에 외부에 유출되면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체육회가 조달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정보화사업은 기술평가 (제안서 및 제안 발표 평가)의 배점이 90점⁶⁾으로 제안서의 품질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요청 내용을 공고 전에 입수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사업 관련 일부 업체들로부터 기술적인 내용 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로 인해 체육회의 제안요청서 작성과정에서 기술조언을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안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제안요청내용 유출 경위

사업명	관련자		사업내용 유출 내용
	부서명	성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부 (현 ○○○팀)	AAA	(주)DDDD 모 부장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기술규격 등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받아(2017.6.1.)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부 (현 ○○○팀)	BBB	(주)DDD 모 차장으로부터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용역 관련 자료(2017.6.16.) 및 ○○시스템 모 과장으로부터 체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술사항 등을 받아(2017.7.31.)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스포츠 역사보존 및 공유 정보화계획 수립 설계용역	○○○○단 (현 ○○○○○부)	CCC	○○○(주) 모 차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초안(2015.7.9.)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받아(2015.7.10.)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5) 협상에 의한 계약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서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

6)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그 결과 위 기술자문 업체들은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표 4]와 같이 해당 사업을 실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제안요청 내용을 사전에 협의한 업체들이 해당 사업을 수주한 현황

사업명	발주금액 (천원)	공고기간	제안요청서 협의업체	응찰업체(기술평가점수)	수주업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220,000	2017.06.13. ~ 2017.06.23.	(주)*****	(주)***** (83) (주)▽▽ (81) (주)○○○○기술단(78.1) (주)○○ (70.38) (주)○○○○○○ (68.8)	(주)*****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480,000	2017.08.25. ~ 2017.09.12.	(주)○○▽ ***▽▽ (주)	***▽▽ (주) (83.7) (주)○○○ (79.47) (주)○○○▽▽ (78.12) (주)○○◇◇ (77.4) (주)○○○○ (72.54)	***▽▽ (주)
스포츠 역사보존 및 공유 정보화계획 수립 설계용역	42,380	2015.07.24. ~ 2015.08.05.	*** (주)	1차: *** (주) 단독 응찰로 유찰 2차: ○○◇◇ (주) (84.6), *** (주) (81.6)	○○◇◇ (주)

라. 정보화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체육회 「계약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체육회는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체육회 ERP 시스템⁷⁾ 연계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연계’ 사업, 행복나눔스포

7) 2010년도에 (주)○○비즈온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인사, 급여, 근태, 예산, 회계,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활용

츠교실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복나눔스포츠교실사업 포털사이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연계

체육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 연계추진 사업기관으로 선정(2017. 8. 31.)되어 주식회사 ○○8)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연계 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다)의 용역 계약[계약금: 110,950천 원, 계약기간: 2017. 11. 29. ~ 2018. 2. 28.(2018. 3. 21.로 연장)]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위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감독 및 준공검사 담당자들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부에서 연계사업의 감독업무를 하던 AAA은 2018. 3. 21. 완료 보고회의 시9), 주식회사 ○○으로부터 체육회 ERP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따른 사용법 안내를 받으면서 당초 과업내용 중 복원실적 연계는 기능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e나라도움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기능 개발이 완료 되었으나 추진단의 가이드(2018. 1. 3. 체육회 수신)와 다르게 시스템 코드가 변경10)(2018. 3. 20.)되었기 때문에 송수신 테스트를 다시 하여야 하나, 특이 사항은 없을 것이며 2018년 4월 초에 개발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8) 대한체육회 ERP 시스템 제조사로서 2010년 납품하였고 8년간 유지운명을 담당하였으며, 한국○○○재단 ERP 시스템과 e나라도움과의 연계개발(2017. 3. 3. ~ 2017. 7. 10.)을 하였음.

9) 대한체육회에서는 AAA, BBB가 참석하고, (주)○○에서는 부장 2명이 참석

10) 코드값이 6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

그런데 사업담당자인 AAA은 준공검사를 하면서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내용 전체에 대한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회사 ○○이 제시한 체육회 ERP시스템의 개선 화면만으로 검수완료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e나라도움과의 연계 완료 여부는 물리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 용역의 100%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감독자 확인 날인)를 작성한 후 2018. 3. 30. 준공검사 담당자인 BBB 및 부서장 CCC의 결재를 받아 준공처리하였다.

그리고 이번 감사 기간 중(2018. 5. 16.) e나라도움과 체육회 ERP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고서야 주식회사 ○○에 [표 5]와 같이 일부 과업이 미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2018. 6. 25.에 완료하였다.¹¹⁾

[표 5] 과업지시서 대비 미완료 현황(2018. 3. 30. 현재)

연번	요구사항ID	구분	작업명	송수신	완료여부
1	FUR-001	국고보조금 연계시스템	공통코드, 공통코드상세	수신	완료
2	FUR-002		보조과목세목코드	수신	완료
3	FUR-003		사업선정결과	수신	완료
4	FUR-004		카드매입내역 결과	수신	완료
5	FUR-005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송신	완료
6	FUR-006		집행 등록 요청	송신	완료
7	FUR-007		집행인력 등록 요청	송신	테스트 미완료
8	FUR-008		집행인력 등록 결과	수신	테스트 미완료
9	FUR-009		집행실적 연계	수신	테스트 미완료
10	FUR-010		복원실적 연계	수신	기능개발 미완료
11	FUR-011		첨부파일 연계송신	송신	완료
12	FUR-012	경영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완료
13	FUR-013	경영관리시스템	카드승인내역에서 매입내역처리		완료
14	FUR-014	경영관리시스템	구매품의 및 결의서 개발		완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1) 2018. 6. 25. 추진단으로부터 연계 완료에 따른 운영전환 일정에 대해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음

(나) ○○○○부에서 연계사업의 준공검사 업무를 맡은 BBB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8. 3. 21. 연계사업의 완료보고서를 받고, AA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회 ERP시스템 기능 개선 화면으로만 과업내용의 완료여부를 판단하였고, e나라도움과의 연계 완료여부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¹²⁾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2018. 3. 30. 준공처리하였다.

그리고 연계사업의 주관부서인 ○○○○부의 CCC 부장은 2018. 3. 30. AAA과 BBB로부터 체육회 ERP시스템 상의 기능 개선 구축화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시스템 코드 변경으로 추진단과의 연계 테스트가 재차 진행 중이며 2018년 4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보완하여 준공처리 하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준공검사서 및 지출요구서를 결재하여 준공금이 그대로 지출되도록 하였다.

(2) 행복나눔스포츠교실사업 포털사이트 기능개선

체육회는 행복나눔스포츠교실의 기능 개선을 위해 주식회사 DDDDD시스템즈¹³⁾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행복나눔스포츠교실사업 포털사이트 기능개선’ 사업(계약금액: 10,000천 원, 계약기간: 2016. 11. 1. ~ 2016. 12. 12.)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회 생활체육부에서 위 사업의 감독 및 준공검사 담당자¹⁴⁾인 DDD는 행복나눔스포츠교실사업 포털사이트가 생활체육정보포털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포털 시스템 고도

12) (주)○○이 ERP시스템 개발사이고 연계 경험(한국○○재단 ERP 연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13) 행복나눔스포츠교실사업 포털사이트는 생활체육정보포털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등의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활체육정보포털 고도화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데이터코어시스템즈와 수의계약 체결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감독의 직무와 준공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화 사업이 지체¹⁵⁾됨으로 인해 [표 5]와 같이 8개 과업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표 5] 과업 내역 진행 상황(2016. 12. 12. 현재)

번호	과업내용		진행사항
	구분	개선안	
1	스포츠버스 등록	관리자는 생활체육포털을 통해 스포츠버스 모집 공고를 등록함	완료
2	스포츠버스 신청	학교담당자는 생활체육정보포털을 통해 스포츠버스 공모내용을 조회하고 스포츠버스 신청	완료
3	스포츠버스 승인	관리자는 생활체육포털을 통해 등록된 스포츠버스 신청내용을 조회하고 승인 또는 반려처리 함	완료
4	확장성	스포츠버스와 유사한 사업추가 시 스포츠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구축	완료
5	학교담당자관리	회원등록 시 학교담당자여부를 확인하고 학교담당자인 경우 학교정보를 입력 함	미완료
6	학교담당자관리	관리자는 학교담당자로 신청한 신청내역을 조회하고 학교 담당자이면 승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미완료
7	통계기능	스포츠버스를 통해 신청된 정보 및 승인데이트를 이용하여 각종 통계 및 현황 정보 제공	미완료
8	기능개선	강습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일지 및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형은 한 번 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미완료
9	출석부관리	참가자 정보와 실제 참석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참가자 정보를 기준으로 출석부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시 등록된 참가자정보와 실제 참가한 참가자정보를 별도 관리함	미완료
10	신청자정보조회	사업승인 시 신청자의 과거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사업에 신청한 정보내역을 제공하여 쏘림 방지	미완료
11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항목 추가	미완료
12	기능개선	아이디로 강습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과업제외
13	기능개선	전체 종목 운영 현황 통계자료를 담당자가 출력할 있도록 기능 개선	미완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사람은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주식회사 DDDDD시스템즈와 미완료 과업은 안정화지원 기간(2016. 12. 13. ~ 2017. 1. 12.)에 완료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지출요구서([구매, 인쇄, 수리,

15) 생활체육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당초 2016. 12. 16.에서 2017. 2. 28.로 연장됨

제조]요구서)를 작성(2016. 12. 22.)하여 준공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예산 편성 및 운용 불합리

체육회는 향후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에 맞는 정보화 사업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체육국은 2018년 하반기 교부결정 시에는 체육회로 하여금 예산과목을 지침에 맞게 재편성하여 예산 변경신청 및 교부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체육회 보조사업 중 정보화 사업의 예산 과목 편성 시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누락

체육회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의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사업부서 간 업무협조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정보화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 내용 유출

체육회는 기술자문 내용은 최종 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만큼 사업내용의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기술자문 과정에서 체육회가 작성 중인 제안요청서 초안 등이 발주 예정업체에 전달되는 등 제안요청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④ 정보화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체육회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연계 사업의 검사 불합리와 관련하여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이행이 있었는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오류나 미완료 등 특이사항이 없어 업체가 제시한 시스템 구축 화면만으로 검수완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완료 부분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추진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했고, 미완료 기능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필수 요구사항으로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했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①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정보화 사업 유형에 맞는 과목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신청을 누락하거나 정보화사업 발주 전에 제안요청 내용이 유출되거나 부실한 용역성과물을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정보화사업 발주 전 기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제안요청 내용이 유출되게 하거나 용역사업의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7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체육국장은 대한체육회의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시 「예

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른 정보화사업 유형에
맞는 과목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체육단체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등록하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관련된 선수권익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9조1)에 따라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송하거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체육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²⁾에 해당되어 같은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그리고 자체 「민원사무 관리내규」³⁾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

1)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⑩ 생략

2) 제2조 3호.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 생략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5) 생략

3) 제10조(민원사항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업무를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주무실부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 및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7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이첩한 민원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처리기간 미준수가 관행화되어 있었고, (성)폭력 민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체육회가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한체육회 민원처리 현황(2016~2018년)

(단위: 건수)

연도	민원내역		처리기한 준수	처리기한 미준수
2016	국민신문고	245	89	156
	온라인민원	317	120	197
2017	국민신문고	452	170	282
	온라인민원	424	239	185
2018.5.	국민신문고	223	111	112
	온라인민원	220	161	59
계	1881		890	991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체육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자체 규정인 「민원사무 관리내규」에 따라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사무를 처리⁴⁾하여야 하나, 위의 [표]와 같이 체육회는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3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를 말한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2016년도 이후 처리한 1,881건 중 991건(52.6%)에 대해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민원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민원처리 세부내역 확인을 위해 감사기간 중 체육회가 직접 접수·처리한 대한○○○○연맹 회장 관련 민원 처리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2017년 4월 이후 2018년 4월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7건의 민원⁵⁾에 대해 1차 회신 이후 접수된 5차례의 유사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 연장 또는 반복민원 종결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기간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9조에 따른 (성)폭력과 관련된 선수권익 침해 민원 처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이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민원건수는 71건으로 체육회는 동민원을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종목위원회와 시·도위원회는 71건 중 58건(민원취하 10건 포함)을 조치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였고, 13건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종목위원회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 5) (사)대한민○○○○연맹 회장관련 민원 처리 내역. 다만 동 사안의 경우 체육회는 민원인에 의한 지속적인 연락에 민원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유선으로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진행과정을 감안하면 비록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면책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일시	민원 처리 현황
① 2017. 4.19.	○ 회장 비리 진정서 건 접수
② 2017. 6.12.	○ 위와 동일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접수(국무총리비서실→문체부→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2017. 6.30.	○ 대한체육회 상기 진정서 민원 회신(1차)
2017. 9. 4.	○ 민원관련 댄스연맹 2017정기총합감사 시 회장 중징계 요구내용, 최종 회신(민원인)
③ 2018. 1. 5.	○ 스포츠공정위 결과('징계없음') 부당의견으로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접수(문체부→클린스포츠센터)
④ 2018. 2.12.	○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주장 제기 이첩민원 접수(문체부→클린스포츠센터)
⑤ 2018. 4. 4.	○ 2차 스포츠공정위 결과('견책') 부당의견으로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접수(문체부→클린스포츠센터)
⑥ 2018. 4.14.	○ 스포츠공정위 제척사유로 무효의견으로 체육회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에 온라인민원 제기
⑦ 2018. 4.20.	○ 자격증 위조에 대한 조사요구 내용으로 체육회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에 온라인민원 제기
2018. 5.30.	○ 대한체육회 민원 회신(2018.4.14., 4.20. 체육회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2건)
2018. 5.31.	○ 대한체육회 민원 회신(2018.1.5., 2.12., 4.4. 국민신문고 민원 3건)

또는 시·도 위원회의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종목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13건 중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9조 제6항에서 정한 처리절차⁶⁾가 과도하게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신고된 3건⁷⁾이 포함되어 있었고, 종목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체육회에 보고한 민원 취하 10건 중에는 민원인이 작성한 민원 취하 문건이 없는데도 민원취하의 사유로 종결처리 한 ○○체육회 핸드볼 선수폭력 민원 건⁸⁾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체육회 민원 다수는 ‘체육인 및 체육단체 비리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질의민원’ 처리기간만을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불산입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성)폭력 민원사안은 사건 조사, 심의, 이의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민원은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있어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의 경우, 추

6)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경과된 사례

신고내용	진행경과
축구부 지도자간 성폭력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이첩(2015.11.4.) → 축구 요청(2017. 1.13.) → 재축구 요청(2018. 5.15.)
빙상종목 지도자의 선수 폭력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이첩(2017. 2.24.) → 축구요청(2017. 7.24.) → 재축구 요청(2018. 5.15.) → **체육회 회신((2018. 5.18.) → 처리 재 요구(2018. 5.25.)
핸드볼 중등지도자에 의한 폭력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이첩(2017.12. 5.) → @@체육회 1차 회신(2017.12.14.)→ 대한체육회의 재요청((2017.12.18.) → 재요청(2018. 5.14.) → @@체육회 2차 회신(2018. 5.23.)

8) ○○체육회 조사(2018. 7.17.~18.)

진상 상황을 파악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체육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체육회 민원 내용이 조사, 심의, 이의신청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조사 등의 사유로 결과회신이 늦어진다는 사정을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민원의 과반수에 이르는 등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체육회 각 부서와 회원종목단체 등이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관리하고(주의)
- ② 종목위원회와 시·도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는 (성)폭력 민원사안 등 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이사회 자문기구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7. 2. 8. 「정관」을 개정하여 개정 전 9개이던 이사회 자문위원회를 15개로 확대¹⁾하였고,([표 1] 참조) 「정관」 제44조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15개의 자문위원회(3개 특별위원회²⁾ 제외)를 설치하고 총 275명의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³⁾하였다.([표 2] 참조)

[표 1] 대한체육회 현 각종 위원회 구성 경과(특별위원회 3개 포함)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7. 1. 16.	○제1차 이사회 심의사항으로 제40대 각종 위원회 구성(안) 상정. 원안 의결. - 심의안건 제1항의 개정정관(안)이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17. 1.25.) 의결을 거친 후 특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회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017. 2. 8. 개정 전 「정관」에는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규정
2017. 2. 7.	○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기획부)	

1) 체육회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심판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평가위원회, 국제위원회 등 9개를 규정하여 운영하다가 2017. 2. 8. 「정관」 개정을 통해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신설

2) 체육회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로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평정위원회를 운영 중.

3) 6개 위원회가 신설되기 전 운영한 9개 위원회의 2016년 말 기준 위원 수 111명 대비 164명 증가

일자	주요 내용	비고
	- 스포츠공정위원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2017. 2. 8.	○정관 개정 승인(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규정 등	
2017. 2. 22.	○2017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	
2017. 2. 27.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 구성(안) 제출 협조요청 공문 (기획부→ 각 실부)	
2017. 2. 28.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구성안 제출 (대회운영부 → 기획부)	
2017. 3. 2.~ 3. 14.	○위원회 구성안 제출 (각 실부 → 기획부) - 경기력향상위원회, 의무위원회, 평가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선수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2017. 3. 15.	○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기획부) - 선수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클럽위원회, 심판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평가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2017. 3. 22.~ 3. 23.	○위원회 구성안 제출 (각 실부 → 기획부) - 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2017. 3. 29.	○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기획부) - 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2017. 5. 29.	○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기획부) -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현재 체육회가 운영 중인 18개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3개 특별위원회와 학교체육위원회 등 15개 이사회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15개 이사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표 2]와 같고, 운영현황은 [별표 1]과 같다.

[표 2] 대한체육회가 운영 중인 이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연번	위원회명	구성일자	임기	정원/현원	「정관」 등에 규정된 주요임무
기존	1	학교체육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2	생활체육위원회	2017. 3. 15.	2년	19/18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3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2017. 2. 7.	2년	19/19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등 자문
	4	경기력향상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5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6	심판위원회	2017. 3. 15.	4년	19/19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토 심의
	7	여성체육위원회	2017. 3. 29.	2년	19/18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8	평가위원회	2017. 3. 15.	2년	19/18	회원종목단체 평가계획 및 평가업무지침의 심의·의결 등
	9	국제위원회	2017. 3. 29.	2년	19/19	체육회(KSOC)의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구분	연번	위원회명	구성일자	임기	정원/현원	「정관」 등에 규정된 주요임무
						대한 자문 등 심의·의결
신규	10	문화환경교육위원회	2017. 3. 29.	2년	19/18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이와 유사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11	남북체육위원회	2017. 5. 29.	2년	19/13	남북체육회담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 심의·의결
	12	의무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IOC, ANOC, OCA 등의 의무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의무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심의·의결
	13	마케팅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마케팅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14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3. 15.	2년	19/18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15	고용능력개발위원회	2017. 3. 15.	2년	19/19	은퇴선수 취업 지원 등 심의·의결
합계					285/275	위원회의 세부 기능은 [별표 3] 참조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체육회는 「정관」 제44조에 따라 15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이사회에서 보고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6년과 2017년에 개최된 15개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이 이사회에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총 87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이사회에 회의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8회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별표 2] 참조)

특히 2017년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신설된 6개 자문위원회는 [표 3]과 같이 2017년에 총 24회 개최하였으나, 그 중 선수촌 부속의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개최한 의무위원회의 회의결과만 이사회에 1회 보고하였고, 마케팅위원회에서 2017. 4. 13. 심의한 ‘무교동 체육회관 임대사업 추진(안)’,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사업 추진(안)’ 관련 사항은 그 회의결과가 이사회에 보고

되지 않는 등 해당 위원회들이 이사회에 어떠한 내용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표 3] 2017년 신설한 6개 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현황

위원회명	개최횟수	이사회 보고횟수
문화환경교육위원회	3회	0회
남북체육위원회	1회	0회
의무위원회	3회	1회
마케팅위원회	5회	0회
홍보미디어위원회	5회	0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7회	0회
합계	24회	1회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기간 중 15개 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심판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등은 운영실적이 1회, 국제위원회와 여성체육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회에 불과하였으며, 2018년에는 학교체육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1분기까지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별표 1] 참조)

그리고 2017년 홍보미디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등은 체육회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거나 심의하였는데, 자문 요청이 없었다거나 단순한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로 그 심의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체육회가 2017. 2월~3월 15개 자문위원회 구성 당시 적용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6. 3. 21. 개정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체육회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

그런데 감사기간 중 체육회가 2017년에 구성한 15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출신학교 등을 확인한 결과, 마케팅위원회 위원의 경우 동국대학교 출신 위원이 26.3%(19명 중 5명)에 이르는 등 [표 4]와 같이 4개 위원회를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하여 동일대학 출신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⁵⁾

[표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성한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구성일자	위반사항
1	학교체육위원회	2017. 3. 15.	동일 대학(\$대) 출신자인 위원이 26.3%(19명 중 5명) 20% 초과
2	심판위원회	2017. 3. 15.	동일 대학(**대) 출신자인 위원이 21%(19명 중 4명) 20% 초과
3	여성체육위원회	2017. 3. 29.	동일 대학(@대) 출신자인 위원이 26.3%(19명 중 5명) 20% 초과
4	마케팅위원회 ⁶⁾	2017. 3. 15.	동일 대학(**대) 출신자인 위원이 26.3%(19명 중 5명) 20% 초과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동일대학 출신자 여부는 학부이상의 출신학교를 대상으로 확인.

한편 체육회는 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표 5]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위원의 자격기준과 비밀엄수 의무 등 의무사항,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제척·기피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⁷⁾

4) 체육회는 2017. 4.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음.

5) 그 후 체육회는 2017. 4.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대학 출신자 20%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을 신설하였음.

6) 체육회는 2017. 3. 15. 마케팅위원회 구성 당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마케팅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학교 출신 20% 초과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정관」 제45조 제5항에서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대학 출신자 20% 초과 금지 조항이 삭제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케팅위원회 구성 이후인 2017. 4. 3. 개정된 만큼 마케팅위원회는 개정 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대학 출신자 20% 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7) 체육회는 「심판위원회규정」, 「평가위원회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자격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의무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척사유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

구분	규정내용	개선필요사항
자격기준	제 4 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	위원회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필요
의무사항	미규정	비밀엄수 의무 등 위원의 의무사항 규정 필요 (예시) 1. 위원회 위원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척사유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예시)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영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영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 4. 25. 개정)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관련

체육회는 주요 사업 중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체육회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들은 「정관」에 이사회의 자문기구라고 그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보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이사회 자문 실적보다는 회장의 자문요구에 응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들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관」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업무추진 관련 통상적인 목적의 위원회들(문화환경교육위원회 등)은 전문가풀(Pool)제로 운영하고,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⁸⁾

② 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위원회 위원 위촉 당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조항들은 2017. 4.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삭제하였고, 개정 당시 신설한 부칙⁹⁾으로 해당 위원들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정관」과 위원회 관련 규정 상 자격기준, 제척사유가 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제척사유와 비밀엄수 의무 등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후에 부칙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위촉 당시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자문위원회들의 의견이 주요 사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자격기준, 제척사유,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8) 예술의 전당(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정관」에 회장의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4. 3.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위원의 자격기준, 의무사항, 제척·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사회 자문목적이 아닌 단순 의견수렴 목적 등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 구성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단위: 회, 천 원)

연번	위원회명	총 회의개최 횟수(소위원회)				소요예산(천 원)			
		2016	2017	2018	합계	참석수당	사업추진비	기타	합계
1	학교체육위원회	3	3	0	6	5,500	1,000	0	6,500
2	생활체육위원회	1	3	0	4	1,800	522	0	2,322
3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2	7(2)	2(1)	11(3)	8,300	3,109	141	11,550
4	경기력향상위원회	3	4	1	8	5,500	1,860	0	7,360
5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2	4	0	6	4,900	2,287	869	8,056
6	심판위원회	1	1	0	2	2,800	0	0	2,800
7	여성체육위원회	2	2	1	5	3,900	698	0	4,598
8	평가위원회	1	5(2)	1	7(2)	7,500	2,515	314	10,329
9	국제위원회	0	2	0	2	2,400	810	0	3,210
10	문화·환경·교육위원회	2017년 구성	3(1)	0	3(1)	3,800	0	0	3,800
11	남북체육교류위원회	2017년 구성	1	0	1	1,000	293	0	1,293
12	의무위원회	2017년 구성	4(1)	1	5(1)	4,900	1,740	0	6,640
13	마케팅위원회	2017년 구성	5(2)	0	5(2)	5,200	243	593	6,036
14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년 구성	5(1)	0	5(1)	5,600	1,328	217	7,145
15	고용·능력개발위원회	2017년 구성	6(3)	2	8(3)	7,400	1,479	500	9,379
합계		15	55(12)	8(1)	78(13)	70,500	17,884	2,634	91,018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2018년 회의개최실적은 1분기까지의 실적을 작성함)

[별표 2]

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 보고 현황(2016~2017년)

연번	위원회명	개최일자	위원회 의결사항	회의결과 이사회 보고여부	미보고 사유
2016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2016.10.5	2016년 스포츠영웅 선정	미보고	스포츠영웅 선정은 위임전결상 회장님 결재로 추진되며, 선정 후 핵심사업인 현액식 개최를 한 보도자료 배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
2016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2016.7.22.	스포츠영웅 평가방법, 2016년 스포츠영웅 추천권자 구성	미보고	스포츠영웅 선정규정 제6조(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제9조(최종후보자 평가)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심의한 만큼 이사회에 보고드릴 만한 안건이 아니었음.
2016	법제상벌위원회	2016.1.21.	1. 우수인재특별귀화추천대상자심의건(추천의결) 2. 제62회대한체육회체육상수상후보자선정건(선정의결) 3. 대한복싱협회징계이의신청심의건(재심의하기로 함) 4. 대한수영연맹징계이의신청심의건(재심의하기로 함)	보고	-
2016	법제상벌위원회	2016.1.7.	1. 선수위원회규정개정(수정의결) 2. 지도자-선수등록규정개정(원안의결) 3. 우수인재특별귀화심의건(재심의키로함) 4. 대한우수협회징계해제심의건(기각) 5. 대한복싱협회징계이의신청심의건(재심의키로함) 6. 대한체조협회징계이의신청심의건(감경의결) 7. 대한복싱협회징계이의신청심의건(감경의결)	보고	-
2016	상임감사추천위원회	2016.6.23.	상임감사추천위원회운영계획	미보고	운영계획 수립과정으로 보고사유 아님
2016	상임감사추천위원회	2016.12.21.	1. 상임감사추천위원회 운영 계획: 공개모집 및 추천방식 병행	보고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10.1.	제40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위반행위 제재의 건 심의에 따른 서면경고 처분, 통지	미보고	회장선거 준비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동 안건은 보고의 의무가 없음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11.30.	제40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위반행위 제재의 건 심의에 따른 서면경고 처분, 통지	미보고	회장선거 준비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동 안건은 보고의 의무가 없음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8.26.	선거인수 배정 및 선거인후보자 직군별 비율 및 추천배수	보고	-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9.12.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선거인후보자 추천 관련 결정사항	보고	-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9.21.	선거인명부 작성 심의의결에 따른 업무 진행	미보고	회장선거 준비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안건임
2016	선거운영위원회	2016.9.25.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심의	미보고	회장선거 준비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안건임
2016	심판위원회	2016. 3. 10.	2015 상임심판 저성과자제계약심의(상임심판 6명 성과저조에 따른 재계약 취소의결)	미보고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 아님
2016	심판위원회	2016. 6. 28.	삼임심판 추가선임(안), 상임심판 교육 개최(안)	미보고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 아님

연번	위원회명	개최일자	위원회 의결사항	회의결과 이사회 보고여부	미보고 사유
2016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2016.7.8.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17년 대축전 대회기간, 운영내규 개정	미보고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 아님 (내규 제개정은 회장전결사항)
2016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2016.9.27.	제46회 소년체전 대회기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상징물, 제97회 전국체육회 세부종목 경기진행	보고	-
2016	생활체육위원회	2016.5.20	위원회 운영계획, 생활체육지원부 사업계획(보고)	미보고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관련 보고사항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여성체육위원회	2016.05.20.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미보고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외 특이사항 없음. 향후 필요시 상정 예정
2016	여성체육위원회	2016.11.24.	2017 IOC여성체육위원회 시상 후보자 추천, 2017년 여성체육활성화지원 사업 추진계획	미보고	대상자 추천 건 관련 보고전례가 없음. 향후 필요 시 상정 예정
2016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2016.5.24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운영계획(안), 2016년 스포츠클럽육성부 사업계획(보고)	미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2016.12.28	스포츠클럽 명칭 변경	미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평가위원회	2016.5.20.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미보고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로 이사회 보고사항 아님
2016	평가위원회	2016.8.18.	연구용역 착수 및 진행계획 보고	미보고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로 이사회 보고사항 아님
2016	학교체육위원회	2016.5.10	'16년 학교체육부 사업계획 보고, '17년도 학교체육관련 사업 추진방향 논의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 안건이므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학교체육위원회	2016.7.11	위원장 선출, 위원교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보고)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학교체육위원회	2016.9.8	위원교체, 학교체육활성화 중장기 추진계획(보고)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학교체육위원회	2016.9.30	학교체육활성화 중장기 추진계획(보고)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6	경기력향상위원회	2016.11.16	평창동계올림픽대비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선수 경기력 자문	미보고	공정체육부 의뢰로 자문한 사안임
2016	경기력향상위원회	2016.5.11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국가대표 선발절차 개선 공청회 및 세미나, 제31회 리우올림픽 준비현황 보고	미보고	의결사항 없음
2016	경기력향상위원회	2016.6.22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개정 2016리우하계올림픽대회파견 후보자전형	보고	-
2017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2017.10.11.	2017년 스포츠영웅 선정	미보고	스포츠영웅 선정은 위임전결사항 회장님 결재로 추진되며, 선정 후 핵심사업인 현액식 개최를 한 보도자료 배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
2017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2017.5.12.	2017년 스포츠영웅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2017.01.10.	1. 상임감사 후보자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	보고	-
2017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2017.01.18.	1. 상임감사 후보자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자 선정	보고	-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11.28.	2018년 은퇴선수지원 사업계획 심의(은퇴선수 일자리발굴 연구용역 필요)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4.27.	고용능력개발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6.1.	은퇴선수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2017.6.21.	은퇴선수지원사업(취업지원서비스 등)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연번	위원회명	개최일자	위원회 의결사항	회의결과 이사회 보고여부	미보고 사유
	개발위원회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인터뷰 실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6.28.	2018년 고용관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프로젝트 필요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7.11.	고용 관점의 은퇴선수 실태조사및 연구 추진 계획(안),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운영계획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고용능력 개발위원회	2017.11.28.	2018년 은퇴선수지원 사업계획(안)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위원회 보고 불필요
2017	국제위원회	2017.12.6	위원 추가 선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 대회 참가 준비, 2020 ANOC 총회 유치 등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국제위원회	2017.4.28	2017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 회 유치 추진 결과보고, 2017 OS/OCA 지역별 포럼 개최운영 결과보고, 국제스 포츠기구 행사 참가 결과보고, 국제협력본 부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호선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남북체육 교류위원회	2017.6.28.	IOC위원·방한단환영만찬계획, 독일콘라드 아데나워재단초청교류관련사항, 부위원장 호선 심의, 제40대 남북체육교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보고 등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문화환경교육 위원회	2017.4.24.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단복 심사 계획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문화환경교육 위원회	2017.8.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단복 심사 계획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문화환경교육 위원회	2017.9.7.	제29기 KSOC 올림픽 아카데미 정규과정 개최 계획(안) 토의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심판위원회	2017. 3. 28.	2017년도 상임심판 운영 계획(종목, 인 원, 선발, 평가 등)	미보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수 렴 형태임.
2017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2017.2.7.	위원회 구성 보고,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98회 동계체전 보고, '17 전국종합체육 대회 변경사항 및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개정 심의	보고	-
2017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2017.3.16.	제98회 동계체전 보고, 제97회 전국체 전 도핑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심의, '20 년 제101회 및 '21년 제102회 전국체전 유치신청에 따른 실사단 구성 심의	보고	-
2017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2017.4.25.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내 경기운영내규 개 정(안) 심의, 제97회 전국체전 도핑검사 결 과에 따른 조치 재심의 및 제98회 동계체전 도핑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심의, '17 전국 종합체육대회 변경사항(안) 심의, '20년 제 101회 '21년 102회 전국체전 현장실사 결 과보고 및 개최지 선정 예비 심사 심의	보고	-
2017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2017.7.27.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심의, 제 99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사항 심의, 제96 회 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 결과 조치 심 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개정(안) 심 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개정 (안) 심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	보고	-

연번	위원회명	개최일자	위원회 의결사항	회의결과 이사회 보고여부	미보고 사유
			상내규 개정(안) 심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운영내규 제정(안) 심의		
2017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2017.11.14.~ 16.	제99회 동계체전 운영방식 변경	보고	-
2017	생활체육위원회	2017.12.6	정관개정(부회장 중 생활체육담당 부회장 제 신설) 대한체육회 임원 중 생활체육담당 부회장 과 생활체육담당 사무총장을 각 1명씩 선 임 필요 -전O장 위원 제명에 따른 결원위원 선임의 건	미보고	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사항 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생활체육위원회	2017.3.27	부위원장 호선 심의, 생활체육위원회 운 영 계획(안) 보고	미보고	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업추진 보고를 위해 개최된 위원회로 이 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생활체육위원회	2017.7.6~7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구성, 시도체 육회내 생활체육업무 담당부서 설치 통합 이후 생활체육의 현황 분석, 생활체 육 활성화 방안 중 우선 건의사항, 생활 체육위원회 향후 활동강화 방안	미보고	업무관련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 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여성체육위원회	2017.03.31.	2017 여성체육사업계획 보고 등	미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여성체육위원회	2017.12.20.	2017 사업 용역결과 보고 등	미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스포츠클럽육성 위원회	2017-04-20	부위원장 호선 권한 위원장 위임 심의	미보고	위원회 위원 선임관련 사항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7	스포츠클럽육성 위원회	2017-10-13	스포츠클럽 사업 공모요건 변경,위원회 명칭 변경, 스포츠클럽 각종 심사 관련 심사위원 풀 구성	보고	-
2017	스포츠클럽육성 위원회	2017-12-12	2018년 스포츠클럽부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심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미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으로 이사회 보고 불필요
2017	마케팅위원회	2017.12.7	마케팅 수익, 마케팅 사업, 마케팅소위원 회 결과 보고 등	미보고	체육회의 종합적인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회의 성격임.
2017	마케팅위원회	2017.4.13	무교동 체육회관 임대사업 추진(안), 하 남시 체육용지 개발사업 추진(안) 심의	미보고	체육회의 종합적인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회의 성격임.
2017	마케팅위원회	2017.6.27	마케팅 위원 교체, 무교동 체육회관 자산 관리사 선정, 마케팅소위원회 운영 보고	미보고	체육회의 종합적인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회의 성격임.
2017	마케팅위원회	2017.6.29~8. 7.	전국체전 주관방송사 선정 공고 실행 (2017.7.18.)	미보고	체육회의 종합적인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회의 성격임.
2017	마케팅위원회	2017.9.28	무교동 체육회관 개발사업(안),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사업 추진(안) 보고 등	미보고	체육회의 종합적인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회의 성격임.
2017	의무위원회	17.03.29	의무위원회분과별 역할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검 토 회의의 성격임.
2017	의무위원회	17.05.29	선수촌 부속의원 위탁운영 업체 관련(선정), 평창동계올림픽 의무 지원 방안, 진천선수촌 병원의 한방의료 무료지원	보고	-
2017	의무위원회	17.06.20	부상예방프로그램 실시(동계종목 운영), IOC 부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혹서기, 혹 한기 교육자료 제작, 선수촌 훈련장 제세 동기 배치, 종합대회 관련 현장의료소 운 영지침 등에 대한 매뉴얼화 보고 및 논의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검 토 회의의 성격임.
2017	의무위원회	17.09.16	선수촌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관련(조 인식 개최), 선수촌내 한방의료 지원 보 고 및 논의	미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2017	평가위원회	2017.3.7.	평가위원회 구성, 「2017년 회원종목단 체 선진화평가」 사업계획 심의	미보고	평가위원회 규정 제20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1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7	평가위원회	2017.6.20.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평가단 구성	미보고	평가결과 및 우수 단체·부진단체의
2017	평가위원회	2017.10.17.	선진화평가 결과보고, 회원종목단체 선진 화평가 스포츠비리건수 발생 시 감점토 록 의결	미보고	지정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에 따라 평가 최종결과를 이사회(12.26) 안건으로 상정함.
2017	평가위원회	2017.10.31.	회원종목단체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미보고	※ 참고: 평가절차 및 과정은 일련의

연번	위원회명	개최일자	위원회 의결사항	회의결과 이사회 보고여부	미보고 사유
			감점(테니스, 파크골프, 카누)		과정이 수반되므로 최종결정 전 이사회 안전 상정에 어려움이 있음.
2017	평가위원회	2017.11.28.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이의신청 재심의(축구, 댄스스포츠), 평가위원회 규정 개정(안)	보고	-
2017	학교체육위원회	2017.11.22	201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2017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심사 참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학교체육위원회 의견서 보고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미보고
2017	학교체육위원회	2017.5.22	학교체육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심의	미보고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미보고
2017	학교체육위원회	2017.9.21	학교체육위원회 위원 교체 보고, 학교체육위원회 설립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논의	미보고	학교체육 사업 관련 보고·논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안건이므로 미보고
2017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12. 27.	2018년 사업계획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계획 방향 설정 등	미보고	세부사업 진행 과정 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이사회 별도 자문 요청 없음)
2017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3. 21.	2017년 KSOC TV 방송 사업 추진방향 설정 등	미보고	세부사업 진행 과정 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이사회 별도 자문 요청 없음)
2017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6. 14.	‘17년도 스포츠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사업계획 보고	미보고	세부사업 진행 과정 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이사회 별도 자문 요청 없음)
2017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6. 21.	2017년 스포츠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신규) 사업 방향 설정 등	미보고	세부사업 진행 과정 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이사회 별도 자문 요청 없음)
2017	홍보미디어위원회	2017. 9. 18.	대한체육회 간행물(SPORTS1) 연간 기획방향 설정 등	미보고	세부사업 진행 과정 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 (이사회 별도 자문 요청 없음)
2017	경기력향상위원회	2017.1.11	2017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계획, 청소년대표 육성계획, 꿈나무선수 육성계획,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계획,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파견후보자 전형	보고	-
2017	경기력향상위원회	2017.12.27	2018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계획, 청소년대표 육성계획, 꿈나무선수 육성계획,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계획	미보고	2018년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을 보고하므로 세부 사업계획 별도 보고 할 필요 없음
2017	경기력향상위원회	2017.5.17	국가대표후보선수 전임지도자 해임	미보고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결로 이사회 보고 대상 아님
2017	경기력향상위원회	2017.7.25	진천선수촌 소개자료 제작	미보고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결로 이사회 보고 대상 아님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연번	위원회명	심의·의결 사항*	관련규정
1	학교체육위원회	1.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 진흥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의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체육연구 논문발표, 연구지발간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공로자 표창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신인 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항 12.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2	생활체육위원회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시설도장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시·도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3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기타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14조
4	경기력향상위원회	1.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2.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인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가대표 훈련 참가인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단 전형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5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1.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육성의 진흥방안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6	심판위원회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심판위원회 규정」 제4조
7	여성체육위원회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8	평가위원회	1. 회원종목단체 평가계획 및 평가업무지침의 심의·의결	「평가위원회

연번	위원회명	심의·의결 사항*	관련규정
		2. 회원종목단체 평가의 실시 3. 회원종목단체 평가 결과의 심의 4. 회원종목단체 평가 결과에 따른 승강여부의 타당성 심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9	국제위원회	1. 체육회(KSOC)의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2. 국제종합경기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및 회의 등의 국내유치 관련 제반사항 3. 국제스포츠계에 대한 KSOC 홍보 및 스포츠 외교활동 전개 4. 올림픽운동과 관련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관련자와의 관계 촉진 및 증진 5. 국제위원회 위원들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스포츠교류 강화에 기여 6.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10	문화·환경·교육위원회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이와 유사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2. 국내에서 스포츠의 가치관을 확산하고 올림픽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활동 3. 국내스포츠행사 개최에 따른 환경 보존과 지속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동 분야와 관련하여 IOC 및 OCA 등 국제기구와 연계된 사항 4.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및 각국올림픽아카데미(NOAA)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올림픽이상과 올림픽운동의 보급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11	남북체육교류위원회	1. 남북체육회담과 관련한 제반 사항 2. 국제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참가와 관련한 사항 3. 남북왕래 전지훈련 및 상호 지도자 초청과 관련한 사항 4. 남북 쌍방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한 사항 5. 남북 간 체육정보교환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6. 남북 간 체육문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남북체육과 관련한 각종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12	의무위원회	1. IOC, ANOC, OCA 등의 의무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의무기관과의 업무협조 2. WADA 및 KADA와의 반도핑 업무 협조 3. 국제종합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파견선수에 대한 도핑 예방 교육 실시 4. 스포츠의학 분야의 현장지원에 관한 업무 5.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6. 스포츠의학 연구논문의 출판 7.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13	마케팅위원회	1. 마케팅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케팅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대한체육회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마케팅자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마케팅과 관련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14	홍보·미디어위원회	1.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국제 종합경기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국내 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언론단체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 홍보와 관련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15	고용·능력개발위원회	1. 은퇴선수 취업 지원 2. 현역운동선수 진로 지원방안 마련 3. 은퇴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4.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 심판위원회는 검토 심의,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임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전 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무시간, 조퇴, 외출 및 출장, 대외활동(외부강의 포함) 등 임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출장·외출 등 관련 「복무규정」 미준수

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¹⁾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²⁾

1) 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체육회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한다.

제13조(출근)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조퇴와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출장명령) 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체육회 임직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승인 없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거나,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을 가서는 안 되며, 체육회는 임직원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체육회 임직원의 공용차량 이용내역과 복무처리상황을 비교·확인한 결과, ○○○○○○장 AAA이 [별표 1]과 같이 2017. 2월부터 2018. 5월 사이에 업무회의 등의 목적으로 49차례 근무지를 벗어나면서 그 중 18회를 조퇴, 출장, 외출 등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³⁾으로 확인되었다.⁴⁾

또한 체육회 DD장인 BBB는 2017. 12. 12.부터 [별표 2]와 같이 본관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24차례 공용차량을 이용⁵⁾하면서 그 중 17회를 조퇴, 출장, 외출 등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2017년 이후(2018년 구매한 차량 3대 포함) 진천선수촌 공용차량 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⁶⁾에서 [표 1]과 같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진천선수촌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출장, 외출 등의 적정한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근무지에 늦게 도착한 사례(10명, 28건)들도 확인되었다.

[표 1] 감사기간 중 확인한 복무처리 부적정 사항 명세

-
- 3) 이에 대해 위 사람은 회장의 지시에 의한 회의 참석 및 외부기관 방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적은 없으며 새로 도입된 복무관리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함. 체육회 인사총무부에 확인한 결과 새로 도입한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였고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스템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위 사람도 해당 문서를 공람(2017. 7. 28.)하였으며, 위 사람과 함께 정책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류미경, 천문영, 황호곤, 남일호, 임석천 등은 새로운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무처리를 하였음.
- 4) 또한 2017. 7. 28. 체육회가 근무상황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이전(체육회는 2017. 7월부터 전산으로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22건의 복무처리 내역에는 2건의 출장과 20건의 외출이 근무상황부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래은행 지점장 부친상 참석(전북지역), 진천선수촌 기자간담회 참석(충북지역) 등 거리를 감안할 때 외출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안도 외출로 복무처리되어 있었음
- 5) 진천선수촌은 2017. 11. 30.에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이용내역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위 사람 혼자만 이용함
- 6) 감사기간이 한정된 점, 체육회가 2016. 3. 통합된 점, 2017년 이후 공용차량 보유대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2017년 이후 공용차량 이용현황으로 한정하였음

유형	부적정 내용	부적정 사례
복무미처리	출장,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 이석, 출근 시간 이후 사무실 도착	10명, 28건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와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공용차량을 이용한 직원들의 복무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임
(세부내역은 [별표 3])

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체육회 「복무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직원은 체육회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⁷⁾을 할 수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각종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근무시간 내 체육회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대외 활동(출장, 수강, 1회성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16조⁸⁾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해 외출, 반일연가 등의 복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누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대학 출강·수강 관련

그러나 체육회는 [표 2]와 같이 근무시간 내 임직원의 출강·수강의 누계 시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연가보상비 2,089,334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2016~2017년 대학 출강수강관련 복무처리 부적정(연가 미공제) 사례

7) 대외활동은 체육회 직원으로서 각종 자문에 응하는 행위, 체육회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위, 각종 교육기관 등에 출·수강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8) 체육회 「복무규정」 제16조(조퇴 및 지각의 처리)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한다.

(단위: 일, 원)

구분	성명 (과정)	출강/수강기관 (전공)	기간	대외활동 승인 시간	복무 처리	연가보상비 지급		대외활동 연가 미 공제		비고
						보상 일수	지급액	활동일수* (미공제일)	미 공제액	
수강	A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5.3~16.8.	화 18:00~21:00	근무 상황부	15	1,588,790	9	953,274	2016년
	B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14.9~17.2	화, 목 18:30~21:20	근무 상황부	14	1,710,450	1	126,700	2016년
	C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16.3~18.8	화/수 17:00~	근무 상황부	15.5	1,181,090	5	280,997	2016년
						15.5	1,281,760	2	165,388	2017년
	D	서울대학교대학원 (스포츠사회학)	16.9~12.	화 18:00~21:00 목 13:00~16:00	근무 상황부	5	325,350	7	455,490	2016년
출강	E	숙명여자대학교	'16.9~12	화 09:00~13:00	미기록	15	1,612,280	1**	107,485	2016년
합계									2,089,334	

* 대외활동 누계일수는 [별표 4](생략) 대외활동 누계시간(연가 미공제일) 참조

** E의 경우 3회 출강(2016.9.6./9.13./9.20) *4회= 12시간/8=1.5일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체육회는 2017년부터 직원의 대학 출강 및 수강에 대해서는 승인 시 부서장의 감독 하에 '대체근무'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복무시스템에 신고한 대체근무⁹⁾의 종료 시점에 퇴근시간을 입력하지 않는 등으로 실제 대체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2) 외부강의 관련

또한 감사기간 중 근무시간 내 직원의 외부강의 활동에 대한 복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였는데,¹⁰⁾ 외부강의 활동의 신고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센터 CCC 등 16명은 외부강의 신고와 복무처리는 별개 사안인데도 외부강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별표 5](생략)와 같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9) 체육회는 승인된 근무시간 내 직원의 출강수강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아닌 근무상황부에 수기로 '대학원 수강(외출)', '대외활동', '외출'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2017년부터는 부서장과 협의 하에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10) 조사분석 시 체육회 업무는 체육단체(공단,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강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광의로 해석하였음.

확인되었다.

[별표 5]에서 보면, 외근, 출장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거나(외부강의가 체육회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③, ④), 외출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거나(체육회 업무가 아닌 경우, ⑤, ⑦), 대학의 1회성 강의 출장 시 외출, 연가 등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는(체육회 업무가 아닌 경우, ⑪, ⑫)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상근임원인 사무총장의 경우도 외부강의 활동에 대한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¹¹⁾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출장·외출 등 관련 「복무규정」 미준수 관련

체육회는 ○○○○○○장, ○○장 등 직원들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간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체육회가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대다수 임직원은 복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2017. 7월 이후 이미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복무기준을 마련(원칙적으로 휴가 및 외출 처리, 부득이한 경우 대체근무 실시)하고, 대체근무 시에는 지문인식을

11) 연가와 출장은 복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수기로 관리하고 있을 뿐 체육회가 2017. 7월 도입한 복무시스템으로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음.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등 임직원 대외활동 관련 복무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소속 임직원의 외출·출장, 외부강의 등은 복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¹²⁾을 마련하고(통보)
- ② 근무시간 중 사무실을 벗어나거나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조퇴, 외출, 출장 등 적정한 복무처리를 하지 않아 체육회 「복무규정」을 위반한 관련자¹³⁾(4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2) 체육회의 정기적인 복무점검, 전산을 통한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복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관들의 사례와 같이 체육회가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출퇴근 관리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관련자는 「복무규정」(제15조, 제40조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폭력 행위 등 관련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전 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하 “공정위 규정”이라 한다) 제5장(징계)에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 등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²⁾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정위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의 내용 중 제25조 제1항 제3호(폭력·성폭력) 및 제5호(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와

1) 2017년 10월 국정감사 시 “대한수영연맹 임원 배임수재 혐의 건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감사기간 중 검토한 결과, 동 내용은 체육회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2016.3.)되기 이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안(2013.~2015.)으로 확인되었음

2)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징계기준(발췌)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영구제명
	직원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지도자 선수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이와 같이 폭력·성폭력에 대해서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명확히 구분하여 더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폭력·성폭력의 주체별(지도자·선수·심판·임원/직원)로 징계기준을 달리하고 있을 뿐, 폭력·성폭력의 피해자(선수 또는 일반인 등)를 구분한 별도의 차별화된 기준은 없다.

따라서 폭력·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선수 또는 일반인 등)와 관련하여 굳이 정상을 참작하려면 [표 1]의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AA 선수가 2017. 1. 5. 서울 청

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2017. 3. 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폭력행위)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2017. 3. 24. [표 1]의 징계기준 ‘마항. 폭력’의 징계기준이 아닌 ‘자항. 품위훼손’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처분을 하였고, 체육회는 이를 보고 받아 공정위원회에 보고안건(단순보고)으로만 상정(2017.5.11.)하였을 뿐 대한승마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³⁾

또한 AAA 선수가 같은 해 9월 변호사 폭행(폭력행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체육회 공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와 체육인 대상 폭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폭력·성폭력의 경우 징계기준을 그 대상(피해자 기준으로 체육인이면 성폭력 기준, 일반인이면 품위유지기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서 폭력·성폭력과 품위훼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징계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징계기준의 범위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⁴⁾

3) 공정위 규정 제38조(징계의 보고)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공정위원회는 자체 징계결정 사항을 체육회 보고하여야 하고, 징계 혐의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와 시도종목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재심의 또는 직권 재심사 결정(공정위 규정 제34조).

4) 만약 폭력·성폭력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징계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성폭력 행위 관련 징계종류를 정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 참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공정위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직원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영구제명
	직원	·해임 또는 파면
	운동부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영구제명
	직원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지도자, 선수	·범죄행위가 인정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스케이트 대여·연마 시설 임대차 계약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태릉선수촌¹⁾ 국제스케이트장 부대시설²⁾ 중 스케이트 대여·연마³⁾ 시설을 [표 1]과 같이 대한체육회공제회⁴⁾(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수의계약으로 임대(임대차 최초 계약일 : 2010. 2. 9.)하고 있다.

[표 1] 스케이트 대여·연마 시설 임대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임차인	면적(㎡)	계약 기간	임대료(연간)	비고
스케이트 대여·연마	대한체육회공제회	110.70	2010.03.01.~2012.06.30.	78,104,400	수의계약
			2013.01.01.~2014.12.31.	80,678,400	재연장
			2015.01.01.~2016.12.31.	81,511,200	재연장
			2017.01.01.~2018.12.31.	81,511,200	재연장

자료 :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 1) 태릉선수촌은 국가대표훈련시설로서 국제스케이트장 등 12개 훈련시설, 챔피언하우스 등 5개 부속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2) 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내 스케이트 대여·연마,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커피숍 등 4개의 부대시설을 대한체육회공제회 및 외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3) 스케이트 날의 표면을 다른 고체로 문질러 매끈하게 하는 것
- 4) 대한체육회공제회 회원은 체육회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체육회 「계약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추정가격⁵⁾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체육회와 공제회가 체결한 위 시설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13조⁶⁾ 및 제15조⁷⁾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⁸⁾한 경우 체육회는 최고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 계약은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했고, 임차인이 상호 합의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체육회는 위 시설을 2009년 1월 ○○렌탈⁹⁾에 임대하였다가, ○○렌탈이 수

5) 임대차 계약의 추정가격 :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6) 임대차 계약서 제13조(“갑”의 계약해지) :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략> 제2항. “을”이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이권화 하려고 하거나 또는 업종 및 업태를 변경한 때

7)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임차권 전대, 양도의 금지) : “을”이 사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또한 대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8) 임차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것

9) 임차인(○○렌탈), 임차기간(2009.1.1.~2010.6.30.), 임대료(71,004천 원), *당시 공개입찰로 태릉렌탈을 선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문서가 폐기되었고 당시 담당자를 알 수가 없어 확인 불가

익감소를 이유로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을 종료¹⁰⁾하겠다는 계약 해지 의사를 체육회에 통보(2009. 12. 22.)하자, 체육회 ○○○○○팀¹¹⁾은 위 시설을 공제회에 임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2010. 01. 25.)

그런데 ○○○○○팀은 노사가 합의했다는 사유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제회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고, 위 시설 임차보증금의 납부를 2010. 12. 30.까지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공제회와 수의계약¹²⁾을 체결(2010. 2. 9.)하였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공제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회가 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회 ○○○○부¹³⁾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에 위배되게 [표 2]와 같이 위 임대시설(110.70㎡) 중 연마시설 20.62㎡(설비, 기계, 기구 등 포함)를 ‘스케이트 연마’ 사업 용도로 DD스포츠 등 2개의 업체에게 전대하고 있었다.

[표 2] 스케이트 대여·연마 시설 전차 현황

구분	전차인	임차운용용도	임차운용목적물	계약기간	임차운용료(월)
1차 전대	DDD스포츠	스케이트 연마	태릉국제스케이트장 1층 110.70㎡ 내 연마실	2014.6.1.~2014.7.31.	1,100,000원
2차 전대	DDD스포츠	“	“	2014.8.1.~2015.7.31.	1,170,400원
3차 전대	DDD스포츠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1층 110.70㎡ 내 연마실 20.62㎡	2015.8.1.~2016.7.31.	1,214,900원
4차 전대	DDD스포츠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1층 110.70㎡ 내 연마실 20.62㎡	2017.9.1.~2018.8.31.	1,210,000원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① 스케이트 대여·연마시설은 총 임대료가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국가를 당사

10) 사업 조기 종료(변경 계약기간) : 2009.1.1.~2010.2.28.

11) 태릉선수촌 시설대관 및 관리업무 담당 부서

12) 연간임대료(78,104천 원), 계약기간(2010.3.1.~2012.6.30.), 임차보증금(29,585천 원),

13) ○○○○부는 체육회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 부장 및 담당 직원은 공제회의 일상적인 집행업무도 겸임함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 시설을 공제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된 것은 노사 간의 합의사항으로서 스케이트장 이용객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직원 복지향상 등 공익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고

② 공제회가 DD스포츠에게 연마시설의 운영권리만 위탁한 것이며, 체육회는 공제회가 제3자와 전대계약을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공제회의 전대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공제회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①항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 시 공제회가 수주 받는 것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특혜가 아니라는 체육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당하지 못한 수의계약을 통해 공제회가 얻은 수입으로 체육회 직원복지 향상 등 공익을 도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②항과 관련하여 현장을 실사한 결과, 위 시설의 전차인(DD스포츠)은 연마시설 공간을 점유하여 연마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임차면적(20.62m²)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운영권리만 위탁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민법 제629조¹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원칙적 금지)가 가능하지만, 위 시설의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도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이에 반하여 전대 허

14)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그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으로 스케이트 대여·연마시설의 임대차 계약서에 위배되는 전대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복리후생비 등 중복 지원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업무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0. 7. 12.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보수체계 단순화,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 직원의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복리후생비(선택적복리후생제도) 및 중식비를 기본연봉으로 이관하고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폐지하는 등 「연봉제 운영규정」을 제정¹⁾하였다.

이후 2013년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 목적 및 내용이 동일·유사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또다시 신설하였으며, 국가대표선수촌²⁾(이하 “진천선수촌”이라 한다) (진천시 소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조식·중식·석식)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예산에 급량비를 추가 편성하여 직원 식당 운영재원으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1) 「연봉제 운영규정(2010.12.21.)」 부칙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제정 전 「복리후생관리규정」과 「선택적복리후생비 지급내규」 등은 폐지한다.

2) 국가대표 선수에게 최상의 훈련시설 및 쾌적한 훈련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인건비(2) 수당 등에 따르면 각종 수당의 개인별·항목별 구체적인 증감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르면 연봉제 전환 이후 새로운 수당 등을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체육회는 2013. 4. 5.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4급 이상 직원의 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5급 이하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을 늘려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2011년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선택적복리후생비 및 중식비 등을 이미 기본연봉에 통합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목적의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신설하여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2018. 5. 23.~ 6. 12.) 중 2011년 성과연봉제 시행 이후 체육회가 신설한 수당,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지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복리후생비 및 급량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부적정

체육회는 2005년에 「선택적복리후생비 지급내규」를 제정하여 전 직원에게 선택적복리후생비를 정액³⁾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6년 이후 [표 1] 및 [표 2]와 같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변경하여 직원들이 복리후생항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개인신용카드 등으로 먼저 사용한 후 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용금액을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까지 운영하였다.

[표 1] 선택적복리후생제도

구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2006년 ~ 2010년)
목적	직원 개인의 욕구와 기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필요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을 통한 복지혜택 제공 및 근무의욕 창출
복리후생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 : 대학, 학원 등 교육비(교재비 포함), 도서구입 ○ 부양가족 지원 : 유아원,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 자녀교육비 ○ 여가/휴양 : 도서, 영화, 연극 등 공연 등, 콘도 및 리조트시설 이용료, 국내·외여행 관련비용 등 ○ 체력단련 : 헬스, 수영 등 체육시설 이용 ○ 건강관리 : 본인 및 부양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외래진료비, 의약품구입 ○ 부모부양비 : 주거, 요양,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등
정산방법	직원이 먼저 집행한 후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등 제출하여 정산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선택적복리후생제도 1인당 연간 사용 한도액

(단위: 천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1인당 사용 한도액(연간)	400	500	600	600	600	
단체보험료 포함 여부	×	×	×	×	×	보험료 미지원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체육회는 2011년 성과연봉제를 설계하면서 선택적복리후생비의 연간 1인당 사용한도액 600천 원을 기본연봉으로 통합한 후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폐지⁴⁾하였으며, 이후 선택적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은 [그림]과 같이 연봉재원으

3) 전 임직원에게 연간 1인당 20만 원의 문화상품권 지급

4) 「선택적복리후생비 지급내규」 폐지(2010.12.21.)

로 통합한 후 2018년 현재까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연봉월액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그림] 연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 구조

(단위: 천 원)

2010년	금액		2011년	금액		2012년	금액		2013년	금액
기본연봉	215,627		기본연봉	3,507,797		기본연봉	6,269,270		기본연봉	6,545,665
기본급	3,569,352	⇒	상여수당	1,315,424	⇒	성과연봉(4급이상)	639,139	⇒	직무급	111,847
상여수당	1,338,507		정근수당	325,960		예비비	331,531		성과연봉	530,612
정근수당	565,147		직급보조비	204,000		소 계	7,239,940		소 계	7,188,124
직급보조비	369,600		성과연봉(4급이상)	403,272						
소 계	6,058,233		예비비	293,929						
			소 계	6,050,382						
선택적복리후생비	107,700									
월정직책급	151,200									
출납	1,320									
특수업무수당	6,480									
전산수당	4,800									
벽지수당	1,200	⇒	연봉재원	1,023,302	⇒	연봉재원	1,023,302	⇒	연봉재원	1,145,769
가족수당	84,000									
장기근속수당	250,200									
휴가보조비	53,400									
명절휴가보조비	71,200									
중식비	139,680									
자녀학비보조비	70,568									
소 계	941,748									
			인상분	337,535	⇒	인상분	327,937	⇒	인상분	277,484
			예비비(증원)	576,232						
합 계	6,999,981	⇒	합 계	7,987,451	⇒	합 계	8,591,179	⇒	합 계	8,611,377

따라서 체육회는 선택적복리후생비를 이미 기본연봉에 통합하여 연봉월액(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복지 항목이나 제도를 또다시 도입하여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체육회는 선택적복리후생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함으로써 폐지하였던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 목적·내용이 동일·유사하고 명칭만 다른 맞춤형복지제도를 2013년에 [표 3] 및 [표 4]와 같이 신규 제도인 것처럼 신설⁵⁾·운영하고

5)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하여 「복리후생관리내규」를 개정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조항 신설(2013.2.26.)

있다.

[표 3] 맞춤형복지제도

구분	맞춤형복지제도(2013년 ~ 현재)
목적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의 근로의욕 증진
복리후생 항목	○ 기본항목 : 건강/생활(병원, 금융, 재테크) ○ 자기계발 : 도서, 외국어, 자격증, 각종 강좌 ○ 자유허목 : 여가활용, 가정친화
정산방법	직원이 복지제도 대행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대행업체가 정산한 금액을 체육회에서 해당금액 입금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연간 사용 한도액

(단위: 천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1인당 사용 한도액(연간)	300	500	500	500	700	700	
단체보험료 포함 여부	×	○	○	○	○	○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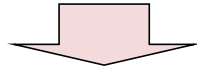
그 결과 [표 5]와 같이 이미 선택적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연봉월액(통상임금)이 임금인상을 등에 따라 증액 지급되고 있는데도,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리후생비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44,104,437원을 중복 지원하였다.

[표 5] 기본연봉에 통합된 복리후생비 및 중복 지원한 복리후생비 내역

< 선택적복리후생제도 >

(단위: 원)

연도	인상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지원액		비고
			1인당 사용 한도액	연간 집행액	
2010	-	급여 미포함(호봉제)	600,000	104,100,000	



〈 맞춤형 복지제도 〉

(단위: %, 원)

연도	인상률	기본연봉에 통합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1인당) ^{주1)}	복리후생비 추가 지원액		비고
			1인당 사용 한도액	연간 지급액 ^{주2)}	
2011	5.5	633,000			선택적복리후생비를 기본연봉에 합산한 후 선택적 복지제도 폐지
2012	4.3	660,358			
2013	3.2	653,417	300,000	69,386,960	맞춤형 복지제도로 명칭만 변경하여 신설
2014	0.8	658,787	500,000	112,976,830	
2015	1.7	670,230	500,000	126,724,763	
2016	3.0	689,323	500,000	142,588,059	기금(44,404,203원) 포함
2017	2.5	714,589	700,000	192,427,825	전액 기금으로 집행
합계				644,104,437	
2018	5.2	762,016	700,000	정산 진행중	

주1) 2011년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인원 기준(147명)

주2) 정산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

[표 6] 유사 기관의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의 복리후생비 연간 사용한도액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선택적(맞춤형) 복지비	700	700	700
기본연봉(선택적 복리후생비)	600	-	-
합계	1,300	700	700

나. 급량비 추가 편성 · 지원 부적정

체육회는 진천선수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사 내에 직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식당을 무료로 이용(조식 · 중식 · 석식)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일 3식의 급식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의 운영재원은 [표 7]과 같이 외부인에게 유료 판매한 식권판매

수입금과 예산으로 편성한 급량비(식자재⁶⁾ 구입) 및 조리원⁷⁾ 인건비⁸⁾이고, 이에 따라 예산 지원 비율은 67.4%이다.

[표 7] 직원 식당 운영 자원 현황

(단위: 명, 원)

연도	식권단가	식수인원		식권판매액 (㉑) (외부인)	예산 편성액(㉒)		합계(㉓)	자원 비율	
		외부인	직원		식자재	인건비		식권판매 (㉑/㉓)	예산 (㉒/㉓)
2015	3,000	22,602	13,920	75,406,000	80,160,000	89,727,552	245,293,552	30.7%	69.3%
2016	3,500	22,163	18,525	80,204,000	64,837,500	89,145,984	234,187,484	34.2%	65.8%
2017	3,500	24,697	23,730	86,940,000	78,056,000	106,393,051	271,389,051	32.0%	68.0%
2018. 4월	4,000	13,082	15,417	52,328,000	61,666,667	39,045,012	153,039,679	34.2%	65.8%
합계		82,544	71,592	294,878,000	284,720,167	324,311,599	903,909,766	32.6%	67.4%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체육회는 위 “가”항과 같이 2011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중식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한 이후 연봉월액(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이미 기본연봉에 포함된 중식비 지원 목적의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⁹⁾

그런데도 체육회는 [표 8]과 같이 2012년부터 진천선수촌 직원의 중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식자재 구입비(인건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조식 및 석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07,484,366원을 중복·추가 지원하였다.

[표 8] 기본연봉에 포함된 중식비 및 직원 식당 운영비 중복지원 내역

(단위: %, 원)

6) 식자재는 체육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7)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후 업체로부터 파견된 조리사(4명)가 음식 조리 등 수행

8) 직원식당 조리원 인건비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대표선수 식당 조리원 인건비(위탁용역비)에서 집행함

9)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급식비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현물을 제공받은 직원에게는 급식비 수당(월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음

연도	인상률	기본연봉에 포함된 중식비(1인당) ^{주1)}	직원 식당 운영비 집행액			비고
			식자재 구매	조리사(4명) 인건비 ^{주2)}	합계	
2010	-	1,440,000				기준액
2011	5.5	1,519,200				연봉제 도입
2012	4.3	1,585,055	53,399,879		53,399,879	
2013	3.2	1,568,351	83,970,000		83,970,000	
2014	0.8	1,581,456	118,238,320		118,238,320	
2015	1.7	1,609,382	113,342,080	89,727,552	203,069,632	
2016	3.0	1,660,614	75,211,500	89,145,984	164,357,484	
2017	2.5	1,715,014	78,056,000	106,393,051	184,449,051	
합계					807,484,366	
2018	5.2	1,828,839	185,000,000	117,135,036	302,135,036	예산액 기준

주1) 2011년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대상인원의 평균 금액(147명)

주2) 조리사 인건비 중 2012년~2014년 자료 미제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① 2013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기존 연봉제에 포함한 선택적 복지비를 단순 재신설하여 중복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 기관 보다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¹⁰⁾을 감안하여 복지제도를 개선·확대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연봉제 도입 이후 신규 직원 등으로부터 가정 친화적 복지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 및 복지 증대 요구에 따라 다수의 복지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단일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다 지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총인건비 인상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선택적복리후생비와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10) 체육회 제출자료(2017년 유사기관 정규직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 비교)

구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지급항목 개수	5개	10개	3개
1인당 복리후생비	979천 원	2,356천원	1,280천 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합공시 자료 기준

그러나 폐지된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 재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의 복리후생항목의 대부분이 중복된 항목이고, 체육회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11)’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면서 누락한 복리후생비 항목12) 및 물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항목13)을 포함할 경우 [표 9]와 같이 1인당 지급액이 3,202천 원에 이르는 등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과다하므로 체육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013년 감사원에서 앞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적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표 9] 통합공시 누락분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비 전체 지급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공시액	연봉에 포함된 복리후생비	공시 누락분	물품 지급분	합계
1인당 복리후생비	979	714	124	1,385	3,202

11) 공공기관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시스템

1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합공시에 누락한 복리후생비 항목 명세

(단위 : 원)

연도	재원	지출내역	지출액	통합공시 대상여부(체육회 의견)	통합공시 항목
2016	자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이용료 지원	1,211,000	통합공시 대상	문화·여가지원
2016	자체	온누리상품권 구입(보훈대상 격려)	1,90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6	자체	2016년 정년 퇴직자 격려품(하반기)	8,25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소계			11,361,000		
2017	자체	2017 정년 퇴직자 격려품(상반기)	3,00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7 정년 퇴직자 격려품(하반기)	9,000,000		
2017	자체	2017년 독감예방 접종(구매)	2,970,0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2017	자체	임원실 방한화 및 방한조끼 구입	397,600	통합공시 대상	기타
소계			15,367,600		
합계			26,728,600		

13) 물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항목 명세

(단위 : 개, 원)

연도	신청부서	품목	용도	수량	합계	단가
2016	기획조정부	코리아하우스 세트	리우 참관 직원	28	2,141,400	76,478
2016	경영관리부	자켓	근무복, 방한복	580	116,081,242	200,140
2016	경영관리부	장갑	연수회용	450	18,585,000	41,300
2016	경영관리부	자켓	자켓 교환 추가분	3	1,059,794	353,265
소계(A)				1,061	137,867,436	
2017	경영관리부	자켓	KSOC직원 워크숍용	303	66,963,000	221,000
2017	경영관리부	가방	직원 생일선물용	350	16,884,000	48,240
2017	경영관리부	하이킹화	보훈대상직원격려품	21	1,890,000	90,000
2017	경영관리부	자켓, 가방	우수직원 시상품 물납	48	5,342,400	111,300
2017	경영관리부	자켓	우수직원 시상품 물납	8	884,800	110,600
2017	경영관리부	자켓	제55회 체육의 날 직원체육대회 행사복 지급	305	68,320,000	224,000
소계(B)				1,035	160,284,200	
합계(A+B)				2,096	298,151,636	

구분	공시액	연봉에 포함된 복리후생비	공시 누락분	물품 지급분	합계
산출기준 인원	215명	147명	215명	215명	

② 진천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야간 합숙훈련을 하며 24시간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체육회 직원들과 용역직원들도 선수들에게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간동안 상주하여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진천선수촌 인근에 식당이 없는 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식당 급량비는 진천선수촌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국가대표 선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중식비)을 중복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진천선수촌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등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인근에 식당이 없다는 사유로 진천선수촌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 시에 식비를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문제는 별개로 검토할 사항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 상주하는 직원은 의과학부 물리치료실 직원 1~2명 및 당직자 1명뿐이고 야간근무자의 대부분이 시설용역업체 직원¹⁴⁾으로서 해당 용역직원들은 식권을 유료로 구입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체육회 직원들은 [표 10]과 같이 초과근무시간이 일평균 30분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상시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국가대표선수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1일 3식의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시설관리 위탁 용역 직원 : 전기 1명, 설비 3명, 방재 1명, 경비 2명 등 7명

[표 10] 진천선수촌 근무 직원 초과근무시간 명세

(단위: 명, 시간)

구분	대상 인원	1인당 월평균 시간	1인당 일평균 시간	비고
2017.1월	41	11.3	0.5	
2017.2월	39	11.3	0.5	
2017.3월	39	13.1	0.6	
2017.4월	39	11.3	0.5	
2017.5월	43	11.2	0.5	
2017.6월	43	11.1	0.5	
2017.7월	42	11.3	0.5	
2017.8월	41	11.3	0.5	
2017.9월	42	11.3	0.5	
2017.10월	40	11.4	0.5	
2017.11월	40	11.4	0.5	
2017.12월	51	10.6	0.5	
2018.1월	49	11.4	0.5	
2018.2월	58	11.6	0.5	
2018.3월	58	11.6	0.5	
2018.4월	58	11.5	0.5	
평균	45	11.4	0.5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복리후생관리내규」를 개정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진천선수촌 직원 급식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관리 미흡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라 한다)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이하 “NOC”라 한다)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와 제33조1), 「올림픽헌장」 2), 「정관」 3), 「국가대표 선발규정」 4) 등에 근거하여 국가대표 선발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는 국가대표의 종합대회 참가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회원 종목단체에 [표 1]과 같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제33조(통합체육회) ①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2) 「올림픽헌장」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2. NOCs의 업무. NOCs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NOCs는 올림픽대회와 IOC가 후원하는 지역별, 대륙별 혹은 세계 종합대회에서 자국의 선수단을 구성, 조직하고 지휘한다. NOCs는 자국의 국내 경기연맹이 제안한 참가선수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3) 「정관」 제5조(사업) ① 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9. 올림픽헌장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회를 포함한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선수단의 파견

4)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 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이 추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표 1] 국가대표 관련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종합대회 참가	국외전지훈련 등	촌외훈련, 정보수집 등
2015	254.2	40.9	48.7	164.6
2016	41.6	41.6	문체부 직접 지원	문체부 직접 지원
2017	167.5	51.3	49.9	66.3
합계	463.3	133.8	98.6	230.9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체육회는 2014년에 「국가대표선발규정」을 제정한 이후 언론과 국회 등에서 국가대표 선발 관련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⁵⁾ 2017. 1. 16. 수영선수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이중 징계 관련 조항 삭제,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기준 명시 및 추천 선발방식의 투명성 제고, 부정선발 시 제재 강화 및 회원종목단체가 선발한 국가대표에 대한 체육회의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새로 제정⁶⁾하였다.

그리고 새로 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2017. 3. 13.(43개 강화훈련 종목단체)과 2017. 3. 22.(대한검도회 등 18개 단체)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하여 그에 따라 단체별 「국가대표선발규정」도 제정(또는 개정)한 후 2017. 7. 16.까지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후 1년 이내에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5)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통합 전 구 대한체육회는 2014. 7. 15.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가대표의 개념 정의의 혼선, 비자격지도자 선임 및 선발 공정성 침해에 대한 언론보도, 국회의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강화 필요 등의 지적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2015. 10. 13./11. 3.), 국가대표 선발절차 개선 공청회(2016. 4. 29.), 국가대표 선발제도 개선(안) 의견 수렴(2016. 5. 23.~6. 3.) 등을 거쳐 2017. 1. 16. 현재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정하였음.

6)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2016. 3. 21.) 이후의 규정은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보고 있음.

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5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의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들이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부합하게 자체 규정을 제정(또는 개정)하였는지 및 1년 이내에 개정하면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력향상비 등 국가대표 관련 예산을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인 국가대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회원종목단체들이 체육회가 2017. 3. 통보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맞게 자체 선발규정을 제정(또는 개정)하였는지 및 1년 이내에 개정하면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선발규정」 제·개정에 대한 관리 미흡

그런데 [표 2]와 같이 7개 회원종목단체는 자체 선발규정을 제정(또는 개정)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개정하면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는 위 7개 단체가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대한 체육회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외전지훈련, 경기력향상비 등

국가대표 관련 예산 1,887,296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2]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제·개정 절차 미준수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한 예산 내역(요약)

(단위: 천 원)

단체명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개정일		지원액		
	최근 개정일	직전 제·개정일	계	2017	2018
대한○○협회	2018. 3. 13.	2017. 3. 23.	233,309	111,291	122,018
대한○○협회	2017. 9. 5.	2017. 4. 5.	293,561	115,908	177,653
대한민국○○협회	2018. 5. 22.	2018. 1. 25.	338,503	153,371	185,132
대한○○○협회	2018. 1. 16.	2017. 4. 5.	666,303	323,667	342,636
대한○○○○○○협회	2017. 12. 27.	2017. 7. 10.	262,032	150,000	112,032
대한○○○연맹	2017. 10. 12.	2017. 4. 22.	93,588	5,993	87,595
대한○○○○트연맹	2018. 3. 10.	2017. 10. 13.	-	-	-
합계			1,887,296	860,230	1,027,066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1] 참조)

그리고 5개⁷⁾ 회원종목단체가 현재 운영 중인 「국가대표선발규정」 내용 중 [표 3]과 같이 국가대표 자격 취소의 사유가 주관적이거나, 결격사유가 체육회의 규정(5년)과 달리 규정(2년)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할 국가대표 코치를 감독이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표 3] 감사기간 중 확인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요약)

단체명	항목	개선 필요 사항
대한**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체육회 규정(취소사유 규정 없음)과 달리 주관적인 사유(경기지도 및 경기력향상에 불성실하거나 그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대표 자격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또는 보완 필요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체육회 규정(5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선발방법	○국가대표팀 코치를 체육회 규정(이사회에서 선임)과 달리 감독이 지명하도록 규정
대한민국****연맹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기준	○지도자 자격이 되는 자격증을 체육회 규정(전문스포츠지도사)과 달리 연맹 자체발행 자격증으로 규정
대한**협회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체육회 규정(5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지약물 복용 관련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7)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대한 전면조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번 감사기간에는 표본으로 5개 단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

단체명	항목	개선 필요 사항
		대한 결격사유 규정 삭제 필요
	지도자 선발기준	○체육회 규정(올림픽메달리스트)과 달리 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를 경력과 상관없이 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
	대표선수 선발	○국가대표 선발기준을 체육회 규정(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과 달리 이사회 의결 또는 협회장 승인 후 확정하도록 규정
대한***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를 체육회규정(지도자: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선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또는 이사회 승인)과 달리 회장이 선임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
	강화훈련 참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추천 후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대한**협회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체육회 규정(5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성추행 등 범죄행위에 대한 결격사유를 체육회 규정과 같이 개정 필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지약물 복용 관련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삭제 필요
	선발절차	○체육회 규정(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과 달리 선발기준 확정 방법 미규정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상세내용은 [별표 2] 참조)

나.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

체육회가 실시하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와 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하고, 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따라 선수의 경우 경기실적증명서,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지도자의 경우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여 훈련참가를 승인하고 있다.

체육회는 2017년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국가대표 선발절차 개선 공청회 및 세미나, 2016. 4. 29.)를 거쳐 부정선발 시 제재 강화, 선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 및 체육회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구

비서류 제출 목록을 검토한 결과, [표 4]와 같이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구비서류 목록에 해당 단체의 국가대표 선발 관련 규정, 국가대표 선발기준 확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 국가대표 선발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 4] 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의 훈련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지 도 자	선 수	비 고
1. 이력서 1부 (소정양식) 2.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사본 1부 3. 신상기록카드 1부 (소정양식) 4. 지도자, 선수 경력증명서 1부 5.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서 사본 6. 건강진단서 1부 7. 서약서 1부(별첨 제1호) 8. 범죄사실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10.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록 11. 이사회회의록	1. 신상기록카드 1부 (소정양식)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서약서 1부(별첨 제1호)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록	국가대표 관리시스템에 신상기록카드 입력 및 사진첨부

자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와 선수를 선발할 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 바⁸⁾에 따라 선발기준을 이사회에서 확정하였는지, 이사회에서 확정된 국가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선발일 3개월 전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지, 공지한 선발기준대로 선발하였는지 여부 등 국가대표 선발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훈련참가를 승인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선발규정」 제·개정에 대한 관리 미흡 관련

8)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6조(국가대표선수 선발) ② 회원종목단체 별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선발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목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체육회는 본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21조의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효력이 없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 선발규정」 위반으로 국가대표 훈련 관련 예산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등 개인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건 지적의 취지는 불이익처분 단계 이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체육회의 「국가대표선발규정」과 내용이 상이하여 그 효력이 부인⁹⁾될 수도 있는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육회는 감사기간 중에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이 체육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 관련

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구비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원종목단체의 전형 공고문 등도 체육회 담당자가 확인하여 선발과정이 공고문에 공지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

9) 체육회 훈련기획부는 2016. 11. 10. “대한승마협회에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발규정을 무시하고 개정된 회원종목단체(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내용이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 받음

력하고 있고,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와의 의견 교환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회원종목단체가 선발한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별 「국가대표 선발규정」, 국가대표 선발기준을 확정된 관련 문서, 홈페이지 공고문 등은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따른 훈련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로 추가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 ①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적정성을 전수조사하여 체육회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개정하면서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에 훈련참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선발규정」, 국가대표 선발기준 확정 관련 문서,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추가하는 등 국가대표 선발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제·개정 절차 미준수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한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단체명	최근 개정일	직전 제·개정일	최근규정 승인여부	지원내역	지원액		
					계	2017	2018
대한○○협회	2018. 3. 13.	2017. 3. 23.	미승인	국외전지훈련	227,380	111,291	116,089
				경기력향상비	5,929	-	5,929
				소계	233,309	111,291	122,018
대한○○협회	2017. 9. 5.	2017. 4. 5.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2,807	966	1,841
				국외전지훈련	127,845	59,023	68,822
				경기력향상비	162,909	55,919	106,990
				소계	293,561	115,908	177,653
대한민국○○협회	2018. 5. 22.	2018. 1. 25.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5,226	-	5,226
				국외전지훈련	38,872	5,616	33,256
				경기력향상비	294,405	147,755	146,650
				소계	338,503	153,371	185,132
대한○○○협회	2018. 1. 16.	2017. 4. 5.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15,610	7,462	8,148
				국외전지훈련	305,693	136,205	169,488
				경기력향상비	345,000	180,000	165,000
				소계	666,303	323,667	342,636
대한○○○○○○○ 협회	2017. 12. 27.	2017. 7. 10.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	-	-
				국외전지훈련	36,134	-	36,134
				경기력향상비	225,898	150,000	75,898
				소계	262,032	150,000	112,032
대한○○○연맹	2017. 10. 12.	2017. 4. 22.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7,771	4,193	3,578
				국외전지훈련	25,603	-	25,603
				경기력향상비	46,714	1,800	44,914
				외국인코치초청	13,500	-	13,500
				소계	93,588	5,993	87,595
대한○○○○연맹	2018. 3. 10.	2017. 11. 7.	미승인	국외정보수집	-	-	-
				국외전지훈련	-	-	-
				경기력향상비	-	-	-
합계				국외정보수집	31,414	12,621	18,793
				국외전지훈련	761,527	312,135	449,392
				경기력향상비	1,080,855	535,474	545,381
				외국인코치초청	13,500	-	13,500
				합계	1,887,296	860,230	1,027,066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감사기간 중 확인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단체명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부적적 내용	개선 의견
대한**협회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② 국가대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취소된다. <u>1. 경기지도 및 경기력향상에 불성실하거나 그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u> <u>2.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대표선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인정할 때</u>	○체육회 규정(취소사유 규정 없음)과 달리 주관적인 사유(경기지도 및 경기력향상에 불성실하거나 그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대표 자격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또는 보완 필요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u>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제1호는 체육회 규정과 같이 5년으로 개정 필요
	<u>제16조(선발방법) ③ 감독을 보좌하여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코치는 감독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u>	○체육회 규정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개정 필요
대한민국 ****연맹	제15조(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기준) ⑤ 본 연맹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u>1. 국가 대표 지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 본 연맹 자격증 소지자</u> <u>2. 기타 지도자 : 본 연맹 자격증 소지자</u> <u>3. 지원자 중 본 연맹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u> <u>4. 외국인 지도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u>	○댄스스포츠도 국가지도자 자격증 종목으로 연맹 자체 발행 자격증을 체육회 규정과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로 개정 필요
	제20조(불공정 행위)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u>해당 종목의 훈련인원은 해당 인원만큼 감원한다.</u>	○제2항 관련 훈련인원의 감원은 회원종목단체가 아닌 체육회가 행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 삭제 필요
대한**협회	제12조(지도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u>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u>6.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제1호는 체육회 규정과 같이 5년으로 개정 필요 ○제6호는 체육회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 없으므로 삭제 필요
	제13조(지도자 선발기준) 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u>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인 경우</u>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및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② <u>청소년대표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중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u>	○체육회 규정은 올림픽메달리스트로 한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 ○청소년대표는 체육회 규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국가대표 자격과 동일하게 지도 경력기간 명기 및 전문스포츠지도사로 자구수정
	제17조(대표선수 선발) ① 대표선수의 선발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1. 국가대표선수는 회원종목단체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u>2.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 혹은 협회</u>	○체육회 규정과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

단체명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부적적 내용	개선의견
	장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한다.	
	제18조(훈련 참가선수의 선발)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으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국가대표 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해당 회원종목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종목단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협회장의 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한다.	○해당 회원종목단체 → 협회로 자구수정 ○협회장 승인 후 이사회 보고사항 삭제 필요
	제19조(강화훈련 참가선수의 선발기준) ① 해당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따른 선수 교체 시 감독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⑤ 선발기준에는 선발방식, 선발일정, 추천선발의 요건, 비율 및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하여 해당 소속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단체 종목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제2항은 체육회 규정*과 같이 개정 필요 *체육회 규정: 부상, 경기력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따른 선수 교체 시 감독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전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육회 규정과 같이 홈페이지 공지 추가 필요 ○단체 종목 추천선발 인원의 비율 명시 필요
	제24조(임원의 책무) ① 단장은 해당 대표선수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급 대표선수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체육회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체 대표선발로 구성하는 대회에 필요할 경우 규정할 수 있으나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제27조(징계) ① 각급 대표선수단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본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② 각급 대표선수단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상정한다. 1. 고의로 대표선수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대표선수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	○동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또는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함
대한*** 협회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②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의 선발은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카뎃, 세계주니어, 아시아주니어, U대회, 월드컵, 세계대학, 유스올림픽 등 본회에서 직접 파견하는 대회를 대비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중 선발한다. 이외 국제대회 파견 지도자는 상근이사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단, 협회 사업 및 일정에 따라 산하 연맹체에 상기 대회 파견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선수중 선발한다. 이외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대회에 파견되는 선수는 상근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다. ④ 본 회가 산하 연맹체에 파견을 위임한 국제대회의 임원은 당해연도 팀등록 지도자 중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맹의 복수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상임이사회의 승인 여부 확인 필요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는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함) ○회장을 이사회로 변경 필요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및 본 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	○제1호는 체육회 규정과 같이 5년으로 개정 필요 ○체육회 규정*과 같이 개정 필요 *체육회 규정: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단체명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부적적 내용	개선의견
	<u>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u>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u>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위원회에 소위원회(비상설)을 둘 수 있다.</u>	○체육회 규정에 없는 기구이므로 제13조 삭제 필요
	제17조(선발기준) ①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u>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u>	○체육회 규정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으로 개정 필요
	제18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u>심의추천후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한다.</u>	○상임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필요
	제21조(국가대표선발) ② 본 회가 선발한 국가대표선수는 위원회에서 본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고, 위원회의 추천 후 <u>상임이사회</u> 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3개월 전에 확정하여 <u>해당경기단체 홈페이지</u>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u>단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u>	○자구수정 및 체육회 규정*과 같이 국제연맹의 대회 참가여건 공지가 늦어진 경우로 한정 필요 *체육회 규정: 다만, 해당 종목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대한**협회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선수란 <u>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에 의거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가 국제대회(친선경기 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u>	○체육회 규정 제2항에서 제4항 추가 필요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국가대표상비군선수, 청소년대표선수, 청소년상비군선수, 꿈나무선수 선발 방법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꿈나무 및 상비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제4조 (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②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본 협회에 의하여 불링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지도자는 본 협회 선발절차를 거쳐 <u>확정한 후 종목별 국가대표 자격을 갖는다.</u>	○국가대표를 확정하는 주체 명시 필요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제1호는 체육회 규정과 같이 5년으로 개정 필요
	5. <u>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체육회 규정*과 같이 개정 필요 *체육회 규정: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u>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u>
	6. <u>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제6호는 체육회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 없으므로 삭제 필요
	제12조 (선발절차) ①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u>국가대표 선발기준은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확정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u>	○선발기준 확정 방법을 체육회 규정(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과 같이 개정 필요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개선의견 등은 감사기간 중 체육회에서 검토하여 제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국가대표 선수단 본부임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라 한다)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이하 “NOC”라 한다)로서 「올림픽헌장」¹⁾과 「정관」²⁾에 근거하여 올림픽과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에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지도자, 본부임원 등)을 구성,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가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등에 파견하는 선수단에 포함되는 단장 등 본부임원은 국가대표 선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회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그 중 단장은 올림픽대회 기간 중 국가대

1) 「올림픽헌장」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2. NOCs의 업무. NOCs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NOCs는 올림픽대회와 IOC가 후원하는 지역별, 대륙별 혹은 세계 종합대회에서 자국의 선수단을 구성, 조직하고 지휘한다. NOCs는 자국 의 국내경기연맹이 제안한 참가선수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2) 「정관」 제5조(사업) ① 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9. 올림픽헌장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회를 포함한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선수단의 파견

표 선수, 임원 및 기타 인원들을 책임지며, 선수단 본부임원들은 파견된 대회에서 조직위원회와의 연락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단 단장을 포함한 본부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선임기준과 이사회 의결 등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중 체육회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 본부임원의 구성([별표1] 참조) 내용과 관련 절차를 살펴본 결과, 체육회는 국제대회 선수단의 본부임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 구체적인 선임기준과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표 1]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선임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선수단 본부임원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있었다.

[표 1]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선수단 본부임원 구성 시 자격요건 등

구분	기준
자격요건	○ 각 파트별 업무(총무,섭외,경기,홍보,의무) 역할 수행에 적합한 자
결격사유	○ 상기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선임방법	○ 외부인사 - 단장: 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장, 유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구성 및 선임 - 종목별 경기관리: 회원종목단체 추천을 받아 내부보고를 통해 선임 ○ 체육회 임직원: 각 파트별 소관 업무 담당 본부의 부서장 및 직원, 타 부서 본부장의 추천을 통한 선정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해서는 2007년 체육회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종합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 단장, 본부임원 구성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행 KOC상임이사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이사회 상정 등 전 체육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성 방안 및 절

차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별표 2]와 같이 2015년 이후 체육회가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 14개 대회의 본부임원 구성 과정을 확인한 결과, 2016년 리우하계 올림픽 1개 대회만 선수단 본부임원 명단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4개 대회는 본부임원 명단은 보고하지 않고 선수단 파견규모만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16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9개 대회는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선수단 본부임원의 명단 뿐 아니라 파견규모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내부결재만으로 선수단 본부임원을 확정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선수단 단장, 본부임원 구성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명단을 포함하여 이사회 상정 등 체육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추후 국제대회 본부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여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본부임원 구성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외부인원의 경우 회원종목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임직원급 혹은 최대한 종목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추천받아 구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국제대회의 종류 및 중요도, 파견 선수단 규모, 대회별 특성(개최지, 예산)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선정기준 및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건 지적의 취지는 모든 국제대회 선수단 본부 임원의 선임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대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 선임기준과 적정한 구성절차(예: 본부임원 구성 시 이사회를 통해 선수단 본부임원 구성을 확정)를 마련하라는 것이며, 국제대회의 종류, 선수단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국제종합경기대회 선수단 본부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구체적인 선임기준과 이사회 의결 등의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본부임원 선임 현황

연도	대회명	임원 수	체육회직원	외부인원	본부임원(외부인원) 구성 내역
2015	제27회 그라나다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2명	17명	5명	단장 1, 부단장 2, 총무 3, 경기 1, 섭외 3, 의무 2, 홍보 1, 상황 1 (슬로바키아) 부단장 1, 총무·섭외 3, 경기 1, 의무 2, 홍보 1
2015	제27회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37명	26명	11명	단장 1, 부단장 2, 종목임원 4, 총무 6, 경기 7, 섭외 4, 홍보 4, 의무 8, 상황 1
2015	제4회 뉴질랜드동계대회	5명	5명	-	단장 1, 총무·섭외 1, 경기 3
2016	릴레함메르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9명	4명	5명	단장 1, 총무 2, 섭외 2, 경기 1, 수행 1, 의무 1, 청년대사 1
2016	리우하계올림픽대회	33명	20명	13명	단장 1, 부단장 3, 총감독 1, 참여 4, 법률 1, 총무 2, 섭외 2, 경기 4, 홍보 2, 의무 9, 상황 1, 지원 2
2016	제6회 아시아유소년 국제경기대회	3명	3명	-	단장 1, 총무·섭외 1, 의무 1
2016	제5회 다낭비치아시아 경기대회	8명	7명	1명	단장 1, 행정총괄 1, 섭외 1, 총무 2, 경기 1, 의무 1, 지원 1
2017	2017 알마티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7명	13명	4명	단장 1, 부단장 1, 총무 3, 섭외 4, 경기 2, 홍보 1, 의무 3, 상황 1, 지원 1
2017	2017 타이페이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5명	19명	6명	단장 1, 부단장 1, 지원임원 3, 총무 4, 섭외 4, 경기 3, 홍보 2, 의무 5, 상황 2
2017	제8회 삿포로동계 아시아경기대회	21명	15명	6명	단장 1, 부단장 1, 총감독 1, 총괄 1, 총무 2, 섭외 3, 경기 2, 홍보 2, 의무 3, 지원 3
2017	제5회 뉴질랜드동계대회	4명	4명	4명	단장 1, 총무 1, 섭외 1, 경기 1
2017	제10회 브로츠와프월드게임	5명	3명	2명	단장 1, 총과 1, 섭외·경기 1명, 총무 1명, 경기단체 지원 1
2017	제5회 아시가바트아시아 실내무도대회	14명	11명	3명	단장 1, 부단장 1, 총무·섭외총괄 1, 총무 3, 섭외 2, 경기 2, 홍보 1, 의무 3, 지원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35명	27명	8명	단장 1, 부단장 1, 경기관리 3, 홍보 1, 의무 1, 아타세 1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국제대회 선수단 본부임원 구성 결정 관련 업무처리 현황

연도	대회명 (대회기간)	임원(외부인원) 구성 방법	이사회 (상임이사회 포함) 보고일자	이사회 보고 내용	명단 확정 내부결재일 자
2015	제27회 그라나다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5.1.24.~2.1. 2015.2.4.~2.14.)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5.1.27.
2015	제27회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5.7.3.~7.14.)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5.6.22.
2015	제4회 뉴질랜드동계대회 (2015.8.21.~8.30.)	임원 중 외부인원 없음 / 대한체 육회 본부 추천을 통하여 내부결 재에 근거하여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5.7.30.
2016	릴레함메르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2016.2.12.~2.21.)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2016.1.27.	(보고사항) 선수단 파 견계획 보고 - 선수단장 선임 및 선수단 파견규모 보고	2016.1.27.
2016	2016 리우하계 올림픽대회 (2016.8.5.~8.21.)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2016.3.25. 2016.7.8.	(보고사항) 선수단장 선임보고 (심의사항) 리우올림픽 본부임원 구성(안) - 본부임원 명단 포함	2016.7.15.
2016	제6회 아시아유소년 국제경기대회 (2016.7.5.~7.17.)	임원 중 외부인원 없음 / 대한체 육회 본부 추천을 통하여 내부결 재에 근거하여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6.6.3.
2016	제5회 다낭비치 아시아경기대회 (2016.9.24.~10.3.)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6.9.5.
2017	알마티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7.1.29.~2.8.)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2017.1.16.	(보고사항) 선수단 파 견계획 보고 - 선수단장 선임 및 선수단 파견규모 보고	2017.2.1.
2017	타이페이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7.8.19.~8.30.)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2017.8.2.~ 8.7.(서면)	(보고사항) 선수단 파 견계획 보고 - 선수단장 선임 및 선수단 파견규모 보고	2017.7.28.
2017	제8회 삿포로동계 아시아경기대회 (2017.2.19.~2.26.)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7.2.10.
2017	제5회 뉴질랜드 동계대회 (2017.8.25.~9.10.)	임원 중 외부인원 없음 / 대한체 육회 본부 추천을 통하여 내부결 재에 근거하여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7.8.10.
2017	제10회 브로츠와프 월드게임 (2017.7.20.~7.30.)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7.7.5.
2017	제5회 아시가바트 아시아실내무도대회 (2017.9.17.~9.27.)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별도 보고 없음	별도 보고 없음	2017.9.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2.9.~2.25.)	선수단 지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각 종목 및 유관 단체(시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구성	2017.11.21.	(보고사항) 선수단 파 견계획 보고 - 선수단장 선임 및 선수단 파견규모 보고	2018.1.19.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이사회 구성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표 1]과 같이 이사회의 인원, 구성 기준,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체육회는 2017. 2. 8. 이사 인원 수 확대(25→50명),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 삭제(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여성체육인 등), 이사 임기 관련 조항 변경(1회 중임 가능→1회 연임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하였다.

[표 1] 2017. 2. 8. 개정 전후 「정관」의 이사회 관련 주요 내용

구분	2016. 4. 12.	2017. 2. 8. 개정	비고
인원	제28조(임원)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이사 25명 이하 (회장, 부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선수대표 포함)	제23조(임원)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수대표를 포함한 이사 50명 이하	○25명→50명
구성 기준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②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임원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체육회의 이사는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여성체육인,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체육회의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1개 종목에서 1명만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④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임원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 포함 요건 중 선수, 여성체육인,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 삭제 ○1개 종목 1명 선임 조건 삭제 ○여성체육인,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 삭제

구분	2016. 4. 12.	2017. 2. 8. 개정	비고
임기	제3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사무총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중임→연임

자료: 대한체육회 「정관」

체육회는 2017. 2. 8.자 「정관」 개정 전인 2017. 1. 10. 24명의 이사를 선임하였고, 개정 후인 2017. 2. 10. 25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총 50명(회장 포함)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표 2] 참조)

[표 2] 현(제40대) 대한체육회 임원(이사회 포함) 구성 경과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6. 12. 27.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임원 선임 위임	
2017. 1. 10.	이사 24명 선임	회장 포함 25명
2017. 1. 16.	이사 선임 내부결재	
2017. 1. 25.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임원선임결과 보고 및 임원 추가 선임 위임	
2017. 2. 8.	정관 개정 인가(문화체육관광부)	
2017. 2. 10.	이사 추가선임 내부 결재(25명 추가 선임)	
2017. 2. 22.	이사 추가 선임결과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 추가선임 후 임원 구성 현황 : 총 50명 - 회장(1명), 부회장(3명), IOC위원(2명), 사무총장(1명), 선수대표(1명), 이사(42명)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임원 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¹⁾를 대표하는 이사²⁾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³⁾

- 1) 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르면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함. 감사일 현재 총 64개의 회원종목단체(정회원 단체 60개, 준회원 단체 4개)가 있음.
- 2) 회원종목단체의 이사가 아닌 **체육회가 구성하는 이사회의 이사를 의미함**. 유사한 조항으로 「정관」 제15조에는 총회는 올림픽 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3) 동 조항은 체육회 「정관」 개정(2017. 2. 8.) 전후 동일함. 그리고 체육회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헌장」 제28조에는 올림픽대회 종목을 관장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국내경기연맹 또는 그 대표들의 표가 NOC(국가올림픽위원회, National Olympic Committee. 우리나라는 대한체육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집행기구(체육회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 투표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대표한다고 규정⁴⁾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단체의 회장이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회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현직 회장이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⁵⁾

그리고 체육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회원종목단체의 현직 회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인정범위와 그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 등 인정요건과 인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사 선임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 중 체육회의 현 이사회(제40대) 구성을 확인한 결과,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표를 추천받는 등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원종목단체의 전직 임원, 회원종목단체와는 별개의 조직인 시·도체육회⁶⁾와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5) 만약 이사회를 구성할 때 회원종목단체 현직 회장을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6) 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는 체육회의 지회(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로 하며 시·도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해당 시·도종목단체와 시·군·구체육회로 구성되는 것으로 회원종목단체와는 별개의 조직임

재외 한인체육단체⁷⁾의 전·현직 임원, 실업팀 감독 등까지도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에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체육회의 현 이사회 구성 당시 「정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현직 회장은 [별표]와 같이 50명 중 9명으로 재적이사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체육회는 전직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도체육회 전·현직 임원 등을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회원종목단체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만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과 출신분야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 구성하였다”라고만 답변하고 있어 해당 이사들이 회원종목단체를 정당하게 대표하는 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체육회는 ① 「정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현직이어야 한다는 제한요건은 없고, ②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았고 선임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때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③ [별표]의 체육회 의견과 같이 올림픽 종목의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28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①과 관련,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 제1항에 회장이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정관」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7)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 따라 재외 한인단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해당 단체 역시 회원종목단체와는 별개의 조직임.

제2항에 따르면 회원단체 임원인 자가 체육회의 임원이 된 후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⁸⁾,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학교체육, 전문체육 등을 대표하는 인사의 ‘대표한다’의 의미는 현재 해당 분야의 관련된 직을 맡고 있는 가로 판단한다고 규정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이사는 회원종목단체의 현직 회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와 관련,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임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구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구성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정관」에 명시된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⁰⁾

③과 관련, 체육회 「정관」에 회원종목단체와는 별개 조직인 시·도체육회 전현직 임원, 재외 한인단체 임원, 실업팀 감독, 체육유관단체 전직 간부(전 태권도진흥재단 기획팀장) 등까지도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어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외에 그 단체를 대표하여 체육회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정요건과 인정절차도 정하지 않은 채, 해당 단체에 대표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누구든지 회원종목단체의 대표자격을 갖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게 되어 이사 선임이 자의적으로 구성될 소지가 크므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정관」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9)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2.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고르게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 분야만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선거인 후보자 추천인 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대표한다”는 의미는 현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직을 맡고 있는가로 판단하되, 불분명한 경우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체육회 회장은 2017. 2. 22.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대해 보고하면서 IOC 규정대로 올림픽종목을 과반으로 채웠다고 보고하였음.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회원종
목단체 현직 회장이 아닌 사람을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달리 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대표성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대한체육회 이사회 이사 구성 현황(2017.2월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총회선임여부	선임일자	주요경력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여부		
						체육회 의견	검토의견	비고
1	회장		해당없음	'16. 10. 6. (선출)		해당 (수영)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2	부회장 (1순위)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	부회장 (2순위)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축구)	해당 (축구)	회원종목단체 대표①
4	부회장 (3순위)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5	사무총장		해당없음	'17. 1. 1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6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봅슬레이 스켈레톤)	해당 (봅슬레이 스켈레톤)	회원종목단체 대표②
7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8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클라이밍)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9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0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1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체조)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12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2. 10.		해당 (빙상)	해당 (빙상)	회원종목단체 대표③
13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바이애슬론)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14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5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철인3종)	해당 (철인3종)	회원종목단체 대표④
16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7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사격)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 체 대표 아님
18	이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루지)	해당 (루지)	회원종목단체 대표⑤
19	이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연번	구분	성명	총회선임여부	선임일자	주요경력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여부		
						체육회 의견	검토의견	비고
20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레슬링)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21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2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3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펜싱)	해당 (펜싱)	회원종목단체 대표⑥
24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5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6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7	이 사		총회선임 (`16.12.27.)	`16.12.27.		해당 (양궁)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28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 2.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9	이 사		해당없음	`16.8.24.		해당 (탁구)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0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축구)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1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태권도)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2	이 사		해당없음	`16. 4. 1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3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배구)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4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양궁)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5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클라이밍)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36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7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38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핸드볼)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연번	구분	성명	총회선임여부	선임일자	주요경력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 여부		
						체육회 의견	검토의견	비고
39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수상스키)	해당 (수상스키)	회원종목단체 대표⑦
40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1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럭비)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42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태권도)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43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조정)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44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5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사격)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46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조정)	해당 (조정)	회원종목단체 대표⑧
47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복싱)	해당 (복싱)	회원종목단체 대표⑨
48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1.25)	`17. 1. 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9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50	이 사		차기총회보고 (`17. 2. 22.)	`17.2.10.		해당 (탁구)	해당 없음	회원종목단체 대표 아님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임시기구 계속 운영 및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7. 1. 16. 이사회에서 부총장, 1본부, 3센터, 3실 등 8개의 정식기구 신설¹⁾, 2개 임시기구²⁾(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신설, 개방형 직위제(사무차장, 부총장, 스포츠마케팅개발실장, 정책연구센터장)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정관」(2016. 4. 12. 개정) 제63조와 「직제규정」(2016. 3. 21. 제정) 제9조에 따라 2017. 1. 1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에 직제규정 개정 협의를 요청³⁾하였다.

문체부는 위 요청에 대해 2017. 1. 23. “기구와 정원은 기재부와 의 직급별 정원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개편안은 귀 회

1) 부총장, 기획경영본부, 3센터(정책연구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의학센터), 3실(의무실, 스포츠마케팅개발실, 비서실)

2) 기존 임시기구 : 진천선수촌운영단

3) 직제규정 개정 협의 요청(기획조정부-297, 2017. 1. 17.)

와 우리부, 기재부와 최종 협의 전까지는 임시기구로 설치·운영”하라고 회신⁴⁾하였다.

문체부의 위 회신 이후 체육회는 당초 임시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과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등 2개 기구에 대해서는 2017. 1. 24. 문체부에 별도로 사전 승인을 요청⁵⁾하여 2017. 1. 25. 승인을 받았다⁶⁾.

이에 따라 체육회는 위 2017. 1. 23.자 문체부 회신 문서를 근거로 당초 정식기구로 협의했던 8개 기구 중 부총장, 기획경영본부, 정책연구센터, 클린스포츠센터 등 4개 조직과 별도로 승인(2017. 1. 25.) 받은 2개 조직을 포함한 총 6개의 임시기구를 2017. 1. 25. 회장 결재를 받아 설치하였다.⁷⁾

그 후 문체부는 2017. 11. 20. 위 6개의 임시기구 중 부총장은 정식기구로 인정하고, 정책연구센터는 정식기구로 불인정한다는 직제 개정 협의 결과를 통보⁸⁾하였고, 같은 날 「직제규정」 개정 승인⁹⁾ 시 기획경영본부(현 기획조정본부)는 정식기구로, 클린스포츠센터는 한시기구(2020. 12. 31.까지 존속)로 승인¹⁰⁾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체육회의 직제규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한편 체육회는 2017. 1. 16. 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제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동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와 협의가 완료되기 전부터 사무차장(현 사무부총

4) 직제규정 개정 협의 요청 통보(체육정책과-355, 2017. 1. 23.)

5) “임시기구 설치 사전승인 요청”(기획조정부-432, 2017. 1. 24.)

6) “대한체육회 임시기구 설치 승인 통보”(체육정책과-399, 2017. 1. 25.)

7) “임시기구 설치·운영 계획(안)”(기획조정부-451, 2017. 1. 25.)

8) 대한체육회 직제규정 개정 협의 요청(대한체육회 기획조정부 -2448/ 2017.9.1.) → 직제규정 개정 협의에 대한 회신(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093, 2017.11.20.)

9) 대한체육회 직제규정 개정 승인(체육정책과-1101, 2017.11.20.)

10) 사무차장은 직제에 반영된 직위, 부총장은 2017.11.20. 문체부가 정식기구로 승인, 정책연구센터는 2017.11.20. 문체부가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음

장), 부총장, 정책연구센터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임기 2년) 모집 공모(2017. 1. 16.~1. 19.), 개방형직위 공모 계획안 회장 결재(2017. 1. 20.), 면접·합격자 발표 및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2017. 1. 24.) 등을 거쳐 2017. 1. 25. 3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직제규정」 협의결과 승인받지 못한 정책연구센터 계속 운영

위 “1. 개요”와 같이 문체부는 2017. 1. 23. “기구와 정원은 기재부와의 직급별 정원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개편안은 귀회와 우리부, 기재부와의 최종 협의 전까지는 임시기구로 설치·운영”하라고 회신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2017. 9. 1. 직급별 정원 심의 결과를 체육회에 통보¹¹⁾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7. 11. 20. 그간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부총장과 기획경영본부를 정식기구로, 클린스포츠센터를 한시기구로 승인한 반면, 정책연구센터는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았고, 「직제규정」을 승인하여 직급별 정원을 확정¹²⁾하는 등 체육회와의 직제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문체부는 당초 정식기구 협의 완료 전까지 위 6개 임시기구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2017. 11. 20.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은 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임시기구로 계속 운영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별도의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7. 11. 20. 정책연구센터를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은

11) 직급별 정원 193명 승인(2017년 정원 186명 + 2018년 증원 7명)

12) 2017.9.1. 기획재정부 정원 승인(2017년 정원 186명 + 2018년 증원 7명=193명)

후 10여 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문체부의 폐지 지시 등 명확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제규정에 근거가 없는 정책연구센터를 2017. 1. 25. 임시기구로 설치 이후 2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¹³⁾

(2)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한편 체육회는 2016. 3. 21. 「직제규정」 제7조에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에는 사무차장, 체육진흥본부장, 학교생활체육본부장, 국제체육협력본부장, 선수촌운영본부장, 마케팅업무 담당부서장, 감사·공정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 국제협력본부 및 담당부서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회의 ‘개방형 직위 공모 계획(안)(○○○○부-614, 2017. 1. 20.)’에도 체육회 사무처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기관의 직위”라 함은 해당기관이 관계기관 등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 확정된 직제에 반영되어 있는 직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문체부는 2017. 1. 23. 체육회에 직제규정 개정관련 협의 회신을 하면서 체육회와 우리부, 기재부 협의완료 전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임시기구의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승인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한 바 없다¹⁴⁾.

13) 현재 대한체육회(홈페이지) 기구표에도 정책연구센터는 없으며, 체육회는 2018년에 지속적으로 정책연구센터를 한시기구화 하는 것을 문체부와 협의(2018.4.4.)하였으나 문체부는 이를 반대하면서도 동 조직을 폐지하라는 공식적인 조치 등을 하지 않음.

따라서 체육회가 위 회신 문서를 근거로 6개 기구를 임시기구로 운영하면서 아직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못하였고, 관련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여 직제 반영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기구의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¹⁵⁾.

만약 체육회가 임시기구의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문체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¹⁶⁾

그런데 체육회는 문체부에 직제규정 개정 협의 요청(2017. 1. 17.)을 하기도 전인 2017. 1. 16. 직제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무차장과 함께 부총장과 정책연구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운영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 후에 개방형직위 공모 계획안 회장 결재(2017. 1. 20.), 면접·합격자 발표 및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2017. 1. 24.) 등을 거쳐 2017. 1. 25. 3명을 채용하였다¹⁷⁾.

이에 따라 부총장의 경우는 문체부가 2017. 11. 20. 정식기구로 승인하여 직제에 반영¹⁸⁾되었으나, 정책연구센터는 같은 날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못하여 직

14)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7.1.17. 문체부에 협의 요청한 「직제 규정」 개정안 제7조에는 사무차장, 부총장, 스포츠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장, 정책연구업무 담당부서의 장 등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문체부가 2017.11.20. 승인한 「직제규정」에는 개방형 직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15) 당시 기획재정부, 문체부와의 직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직제 협의 결과 해당 임시기구가 직제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인력을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는 점, 채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신분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직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기구로 반영된 이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16) 체육회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기구의 성격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센터의 경우에도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시 인사담당자는 감사과정에서 임시기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임시기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답변.

17) 2017.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문체부)시 채용 절차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

18) 실제 반영은 2017.12.22.(직제규정 개정 협의에 대한 회신, 문체부 체육정책과-1666)

제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¹⁹⁾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직제규정」 협의결과 승인받지 못한 정책연구센터 계속 운영” 관련

체육회는 문체부의 2017. 1. 23.자 문서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센터를 임시기구로 설치·운영한 것으로 「직제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시기구와는 성격이 달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정규직제화(한시기구 포함)를 위해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육회가 문체부의 2017. 1. 23.자 회신문서에 따라 정책연구센터를 임시기구로 운영해 왔더라도, 같은 문서에 문체부, 기재부와 최종 협의 전까지 임시기구로 설치·운영하라고 명시한 만큼, 문체부가 2017. 11. 20. 정책연구센터를 정식기구로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직제개정 협의를 완료했으므로, 정책연구센터는 2017. 11. 20. 이후에는 직제규정에 근거가 없는 조직에 해당하고, 임시기구로 계속 운영할 근거도 없으므로, 정책연구센터를 폐지하거나 존속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관련

체육회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구의 성격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

19) 문체부가 2017. 11. 20. 원안 승인한 체육회 「직제규정」 부칙 제3조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직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기구인 정책연구센터장은 「직제규정」의 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7. 12. 22. 문체부가 체육회에 통보한 “직제규정 개정 협의에 대한 회신”(체육정책과-1666, 2017. 12. 22.) 문서에도 개방형 직위 대상에 부총장만 포함되어 있고 정책연구센터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고, 정부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과 같이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기간 중에 있는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책연구센터는 국정농단의 폐해를 바로 잡고, 급속한 통합에 따른 복잡한 제도와 규정 등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고,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등 체육회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직으로 정식기구 또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²⁰⁾와 체육회의 “개방형 직위 공모 계획(안)” 등을 볼 때 개방형 직위는 정식 직제에 포함되는 직위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회 ○○○○○○장의 경우도 직제에 반영된 정규직위를 대상으로 개방직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²¹⁾되었다.

또한 체육회의 답변과 같이 정책연구센터를 정식기구 또는 한시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의하였다고 하나, 문체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승인한

20) 체육회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기구의 성격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해당 조항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못한 임시기구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21) 국가인권위원회 ‘○○○○○○장’ 직위는 2018.7.24.자 직제 개정을 통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이후 인권위에서 경력개방형(민간스카우트제) 직위로 전문가를 선발(공모절차 생략 가능)하여 인사혁신처에 추천하여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정식 직제상 직위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2018.9.17. 유선으로 확인함.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6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교육국장 및 대구인권사무소장을 각각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장 및 ○○○○○○○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8년 7월 2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바가 없으므로 현재 정책연구센터는 직제규정에 반영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므로 이러한 임시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 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않은 채 계속 운영 중인 대한체육회 정책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한시기구 인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대한체육회 회장**은 현재 정식기구로 승인받지 않은 채 계속 운영 중인 정책 연구센터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하여 문체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직제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기구의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명예퇴직수당 환수·정산 규정 미비

소 관 실 국 체육국

관 계 기 관 대한체육회

내 용

1. 개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2014. 3. 31. 명예 퇴직한 aaa에게 명예퇴직수당 총 186,341,175원(정년퇴직 예정 2020. 6. 30./ 잔여개월 75개월)을 같은 해 5. 8. 지급한 바 있고, 2017. 1. 25. aaa을 대한체육회 ○○○○○장으로 다시 고용(2017. 1. 25.~2019. 1. 24.)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 「인사규정」 제105조와 제106조에 따르면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직원이 정년퇴직 예정기간 만료일 전에 재임용될 경우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명예퇴직수당 환수 조치는 침익적 행위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에 명시¹⁾되어야 하고, 판례²⁾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다시 같은 기관

에 고용된다면 고용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직원이 정년퇴직 예정기간 만료일 전에 재임용될 경우와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인사규정」에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체육회 「인사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예정기간 만료일 전에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1항”과 같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였다가 정년퇴직 예정기간 만료(2020. 6. 30.) 전에 재임용된 aaa에게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³⁾.

관계기관 의견 체육회는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대해 명예퇴직제도의 근본취지와 해당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 회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직원이 정년퇴직 예정기간 만료일 전에 재임용될 경우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및 정산할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명예퇴직제 운영지침 제9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임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에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였던 자가 다시 같은 기관에 고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없어지므로 다시 고용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3) 자문결과,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곤란

수 있는 근거를 「인사규정」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